최종보고서

# 국회도서관 조직·기능 발전 방향 연구

2025. 08.

국 회 도 서 관

# 제 출 문

**국회도서관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국회도서관 조직·기능 발전 방향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 책 임 연 구 원 : 이 지 연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 동 연 구 원 : 전 정 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 보 조 연 구 원 : 강 지 희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양 예 은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이 유 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 목 차


**제 1장 서 론** ·····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 2

1.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4

**제 2장 이론적 배경** ····· 5

2.1 문헌조사 ····· 5

2.1.1 입법정보제공 기관의 기능과 역할 변화 ····· 5

2.1.2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정보서비스의 고도화 ····· 6

2.1.3 지방의회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 7

2.2 주요 운영 사례 ····· 9

2.2.1 정책·입법 지원 기능 강화 사례 ····· 9

2.2.2 분산형·협력형 조직 운영 사례 ····· 21

2.2.3 AI·디지털 서비스 특화 사례 ····· 29

**제 3장 국회도서관 운영 현황** ····· 47

3.1 환경변화와 국회도서관의 대응 ····· 47

3.1.1 의정정보 지원을 위한 회답서비스 운영 ····· 48

3.1.2 디지털전환 대응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 ····· 51

3.2 국회도서관 조직구조 및 인력 운영 현황 ····· 54

3.2.1 국회도서관 및 유관기관 조직 현황 ····· 54

3.2.2 기능별 조직 운영 현황 ····· 63

3.2.3 조직별 인력구성 현황 ····· 72

3.3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 및 조직 개편 현황 ····· 80

3.3.1 분관 설립 추진과 기능 분담 ····· 80

3.3.2 국회기록원 설립 및 기록물 관리 ····· 83

3.3.3 조직 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 이슈 ····· 84

**제 4장 국회도서관의 미래 역할 정립과 발전 과제** ····· 87
4.1 미래 국회도서관의 비전 ····· 87
4.2 정보환경 변화와 국회도서관의 대응 진단 (SWOT) ····· 89
4.2.1. 회답 지원 서비스 ····· 89
4.2.2 데이터기반 서비스 ····· 93
4.2.3 콘텐츠 수집 및 보존 ····· 97
4.2.4 거버넌스 체계 구축 ····· 101
4.3 국회도서관의 핵심 기능별 추진과제 ····· 106
4.3.1 회답 지원 서비스 고도화 ····· 107
4.3.2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 ····· 110
4.3.3 콘텐츠 수집 및 보존 기능 강화 ····· 116
4.3.4 거버넌스 체계 구축 ····· 123

**제 5장 국회도서관 조직 및 기능 개편 방향** ····· 130
5.1 전략기능 중심 개편 방향 ····· 130
5.1.1 회답 지원 서비스 ····· 130
5.1.2 데이터 기반 서비스 ····· 133
5.1.3. 콘텐츠 수집 및 보존 ····· 135
5.1.4 거버넌스 체계구축 ····· 137
5.2 조직 단위별 세부 개편 방향 ····· 140
5.2.1. 기획관리관실 ····· 140
5.2.2 의회정보실 ····· 141
5.2.3 법률정보실 ····· 142
5.2.4 정보관리국 ····· 143
5.2.5 정보봉사국 ····· 146
5.2.6 국회기록보존소 ····· 148
5.2.7 국회부산도서관 ····· 149
5.2.8 종합 ····· 150

**제 6장 결 론** ····· 152

**참고문헌** ····· 155

# 표 차례


〈표 1〉 회답 서비스 제공 현황 ····· 13
〈표 2〉 공개형 분석 간행물 운영 현황 ····· 18
〈표 3〉 입법정보 데이터 플랫폼 사례 ····· 20
〈표 4〉 국내 도서관 분관형 조직 운영 사례 ····· 22
〈표 5〉 국외 도서관 분관형 조직 운영 사례 ····· 23
〈표 6〉 국내 협력형 조직 운영 사례 ····· 27
〈표 7〉 국외 협력형 조직 운영 사례 ····· 28
〈표 8〉 국회도서관 회답서비스 제공 형식의 다양성 ····· 50
〈표 9〉 입법활동 지원 기능 - 국회도서관 주요부서 ····· 64
〈표 10〉 입법활동 지원 기능 - 해외 유사기관 주요부서 ····· 65
〈표 11〉 지식자원 관리 및 활용 선도 기능 - 국회도서관 주요부서 ····· 66
〈표 12〉 지식자원 관리 및 활용 선도 기능 - 해외 유사기관 주요부서 ····· 67
〈표 13〉 대외협력 및 운영혁신을 위한 조직가치 증대 기능 - 국회도서관 주요부서 ····· 68
〈표 14〉 대외협력 및 운영혁신을 위한 조직가치 증대 기능 - 해외 유사기관 주요부서 ··· 69
〈표 15〉 기록물 관리 및 보존 기능 - 국회도서관 주요부서 ····· 70
〈표 16〉 기록물 관리 및 보존 기능 - 해외 유사기관 주요부서 ····· 71
〈표 17〉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실 운영 정원 ····· 72
〈표 18〉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인력 구성 ····· 73
〈표 19〉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운영 정원 ····· 73
〈표 20〉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운영 정원 ····· 74
〈표 21〉 국회도서관 정보관리국 운영 정원 ····· 75
〈표 22〉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 정보기술기반과 인력 구성 ····· 75
〈표 23〉 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 운영 정원 ····· 76
〈표 24〉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관리부 인력 구성 ····· 76
〈표 25〉 국회기록보존소 운영 정원 ····· 77
〈표 26〉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및 자료보존연구센터 인력 구성 ····· 77
〈표 27〉 국회부산도서관 운영 정원 ····· 78
〈표 28〉 국립세종도서관 및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인력 구성 ····· 78

〈표 29〉 의정관 서고 변동사항 ····· 80
〈표 30〉 국회도서관 회답 지원 서비스 SWOT 분석 ····· 89
〈표 31〉 국회도서관 데이터기반 서비스 SWOT 분석 ····· 93
〈표 32〉 국회도서관 콘텐츠 수집 및 보존 SWOT 분석 ····· 98
〈표 33〉 국회도서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SWOT 분석 ····· 102
〈표 34〉 회답 지원 서비스 개편을 위한 추진과제 중장기 로드맵 ····· 132
〈표 35〉 데이터기반서비스 개편을 위한 추진과제 중장기 로드맵 ····· 134
〈표 36〉 콘텐츠 수집 및 보존 개편을 위한 추진과제 중장기 로드맵 ····· 136
〈표 37〉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중장기 로드맵 ····· 139
〈표 38〉 기획관리관실 추진과제 ····· 141
〈표 39〉 의회정보실 추진과제 ····· 142
〈표 40〉 법률정보실 추진과제 ····· 143
〈표 41〉 정보관리국 추진과제 ····· 144
〈표 42〉 정보봉사국 추진과제 ····· 147
〈표 43〉 국회기록보존소 추진과제 ····· 149
〈표 44〉 국회부산도서관 추진과제 ····· 150
〈표 45〉 조직 단위별 세부 개편 방향 종합 ····· 151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범위 및 방법 ····· 3
<그림 2> 연구 추진 일정 ····· 4
<그림 3> 코이카 ODA 협력 운영 사례 ····· 26
<그림 4> 국립중앙도서관 ODA 협력 운영 사례 ····· 27
<그림 5> 미국 USAID ODA 협력 운영 사례 ····· 28
<그림 6> 캘거리대학교 도서관의 AI 챗봇 '티-렉스(T-Rex)' ····· 30
<그림 7> 빅케이스의 AI 프리뷰 및 AI 요약 화면 ····· 31
<그림 8> Scopus AI의 검색 화면 ····· 31
<그림 9> 군포시 중앙도서관 플라이북 AI 도서추천 서비스 ····· 32
<그림 10>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서재 ····· 34
<그림 11> 싱가포르 창이 공항 AI 체험공간 ····· 35
<그림 12>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시컬렉션(온라인전시) 화면 ····· 36
<그림 1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 예시 화면 ····· 37
<그림 14> 아시아문화박물관 아카이브의 '컬렉션' ····· 38
<그림 15> 미국 의회도서관의 Digital Collections 예시 화면 ····· 39
<그림 16>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VR Tour ····· 40
<그림 17>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S-Curation 화면 ····· 41
<그림 18> 맞춤형 도서 큐레이션 제공을 위한 이용자 설문 ····· 42
<그림 19> 한국고전종합DB 인물관계정보 예시 화면 ····· 43
<그림 20> 한국고전종합DB의 고전용어 시소러스 예시 화면 ····· 44
<그림 21> LBOX AI 예시 화면 ····· 45
<그림 22> LexisNexis의 AI를 활용한 법률 초안작성 ····· 45
<그림 23> 연도별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률 ····· 49
<그림 24> 국회도서관 조직도 ····· 54
<그림 25> 미국 의회도서관 조직도 ····· 58
<그림 26>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직도 ····· 59
<그림 27> 영국 국립도서관 조직도 ····· 60

〈그림 28〉 프랑스 국립도서관 조직도 ····· 61
〈그림 29〉 독일 국립도서관 조직도 ····· 62
〈그림 30〉 국회기록물 수집·보존 수량 증가 ····· 81
〈그림 31〉 국회도서관의 미래 비전 및 핵심 전략 ····· 88

# 국회도서관 조직·기능 발전 방향 연구

## 제 1장 서 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 대표 지식정보기관으로서, 오랜 기간 입법지원과 법률정보 제공, 국가 지식정보의 수집 및 보존, 국회기록물 관리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입법 환경의 다변화, 이용자의 정보 수요가 변화하면서 기존 도서관의 전통적인 역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곽승진 외, 2025). 환경의 변화와 함께 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은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AI 기반의 정보분석, 정책정보 큐레이션, 지능형 회답 서비스 등 고도화된 전략기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조직 운영체계의 재설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정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의회법률정보포털 운영, 국회 세종도서관 건립 이전, AI 지능정보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국회도서관, 2024c; 2025a; 2025b). 이러한 변화는 국회도서관 정보서비스의 범위와 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조직 내부의 역할 분담과 책임 체계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먼저 국회도서관은 장서 중심의 전통적인 수집·보존 기능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정보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메타데이터 자동화, 온라인 납본, 정책정보 분석 등 디지털 기반 업무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AI·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의정지원 서비스와 국가 지식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은 향후 도서관 기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국회도서관 2019a; 2022a). 특히 국회도서관의 고유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회답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서비스 범위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는 다양한 조직 부서의 업무와 연결되어 있어 조직 구조상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국회부산도서관 운영과 국회세종도서관 건립 추진, 국회광주도서관 설립 논의 등 분관 체계의 확대는 국회도서관 조직 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국회도서관 2018b; 2024a; 2024c). 본관-분관 간 기능 연계, 지역기반 정보서비스의 특화, 지역의회 지원 기능 강화(국회도서관 2023a), 본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은 물리적 공간 분산을

넘어 다관 체계에 부합하는 조직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국회도서관의 주요 변화는 단지 기술의 도입을 넘어, 전략 기능 중심의 조직 전환과 기능 통합, 역할 재조정, 전문 인력 재배치 등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조직 재설계를 전제로 한다. 이에 국회도서관이 변화하는 정책·기술 환경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 중심의 융합형 조직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도서관의 조직 운영 구조와 기능 배치 체계를 진단하고, 전략 기능 중심의 전환 가능성 모색

둘째, 디지털 전환, AI 기술 도입, 분관 확대, 기록원 설립 등 국회도서관 내외부 환경 변화가 조직 및 기능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셋째, 국내외 유사 기관의 조직·기능 혁신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벤치마킹 가능한 조직 운영 전략과 제도적 기반을 도출

넷째, 국회도서관의 핵심 기능 재정의와 미래 비전 수립을 토대로, 실행 가능한 조직 개편 방안과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안

본 연구는 국회도서관이 정책·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 중심의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지식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1.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서울 본관, 국회 부산도서관, 국회 세종도서관 등 관련 기관 조직 전반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입법·정책 지원, 법률정보 서비스, 회답서비스, 디지털 정보 수집·분석, 국회기록물 관리, 국민 정보서비스 등 국회도서관이 수행하고 있는 핵심 업무 전반을 검토하였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회도서관에서 수행한 주요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회도서관의 조직·기능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도서관의 조직 구조와 기능별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내부 기초자료 및 부서별 직제 및 업무 분장 현황, 연구 사업 보고서, 내부 회의자료 등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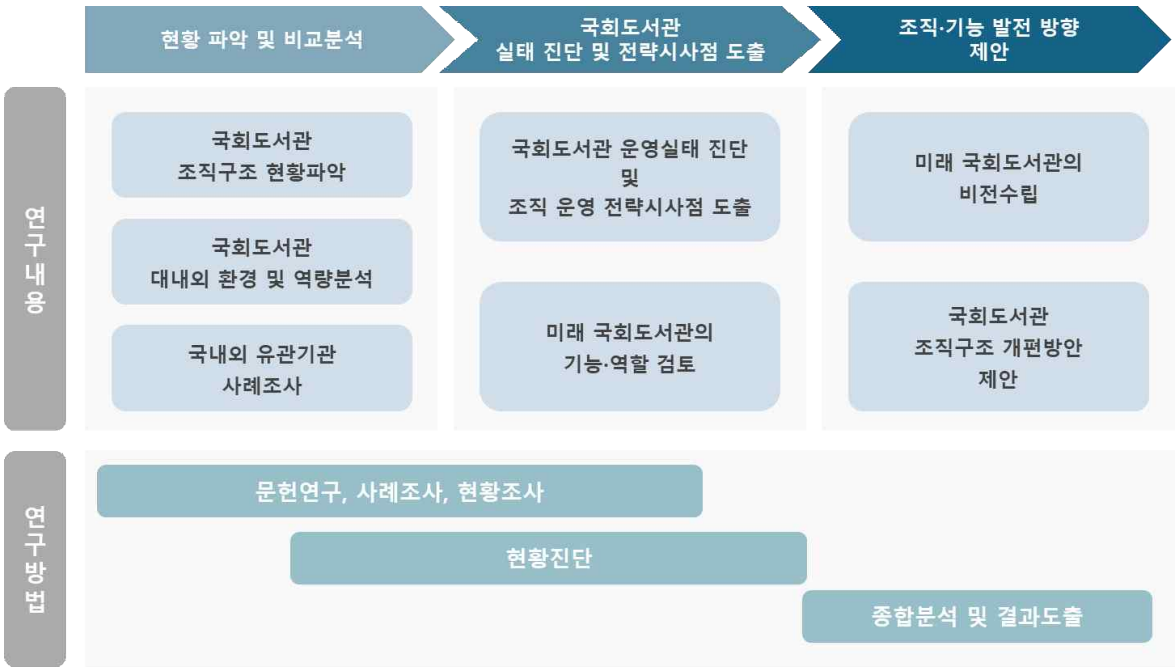
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조직 부서별 기능 수행 현황과 운영상 제약 요인을 파악하고, 주요 기능 간 업무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국회 세종도서관 건립·이전, 회답 서비스 고도화, AI·디지털 정보분석 기반 서비스 등 최근 국회도서관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조직 대응 방향과 내부 실행 조직을 검토하였다.

둘째, 문헌 및 국회도서관 운영현황 조사를 통해 국회도서관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및 국회도서관 역량을 분석하였다. 디지털 기술 발전, 데이터 기반 행정 확대, 이용자 행태의 변화, 분관 설립 등 환경 요인을 유형화하고, 각 요인이 조직 구조와 기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 과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국내외 유관기관의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국회도서관 조직 개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유관기관의 조직 구조, 기능 배치 방식, 분산형 운영 사례, 디지털 기반 조직 전환 전략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의 조직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현황 및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도서관의 기능 구조를 분석하고, 기능 중심의 조직 구성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능 연계 및 업무 중복, 전략기능 수행 역량을 기준으로 기능 구조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핵심 기능의 재정의와 역할 재배치 방향을 구조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회답 서비스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콘텐츠 수집 보존 기반 조직 설계 방안을 모색하고, 거버넌스 체계 실현 관점에서 실행 조건과 운영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범위 및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 추진 일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 추진 일정

## 1.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국회도서관의 기능 중심 조직 운영체계를 모색하고, 전략기능 중심의 조직 구성과 실행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능 간 중복 해소, 역할 분담의 명확화, 협업체계의 정비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기대효과와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의 확산 등 국회도서관 외부 환경 변화와 내부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중심의 최적화된 조직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기술 환경에서 국회도서관의 중장기 역할과 비전을 재정립하고, 향후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능의 효율적 재배치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조직 혁신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과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조직 개편(안)과 기능 분석 결과는 직제 개정이나 부서 신설·통합 등 실질적인 조직 설계 및 조정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회도서관 내부의 조직 혁신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국가기록원 등 유관기관과의 기능 연계와 협업체계 구축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국회 지식정보서비스의 전략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 2장 이론적 배경

## 2.1 문헌조사

### 2.1.1 입법정보제공 기관의 기능과 역할 변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입법정보서비스는 의회정보서비스와 법률정보서비스, 그리고 그 외 제공되는 인적・물적・공간적 자원을 모두 포함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최영나, 2015).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은 다양한 정보 제공 시스템과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박영희, 2007), 현재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등도 입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설립 목적,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 사항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과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최영나, 2015), 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능과 역할을 확장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의정 및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정보 수집・축적, 의정 기록 관리, 정책 연구 보조 등에 머물러 있던 입법정보서비스 기관에는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추어 이들 기관은 정보 접근성 강화, 서비스의 디지털화, 국민 참여 확대, 투명성 확보 등에 대응하며 재편되어 왔다. 특히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접근성이 높고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입법정보서비스 기관들은 그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운영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특히 팬데믹으로 비대면・온라인 의정활동이 증가하면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입법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디지털 기반 자료 확대, AI 기반 서비스 도입, 맞춤형 자료 지원,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공공성・투명성・접근성 강화가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도입을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향후 전략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Lemieux, 2016).

세계 도서관 및 정보 전문 서비스 기관의 이익을 대표하며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표준과 지침을 개발하는 국제도서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이하 IFLA)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회도서관 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하였다. IFLA(2022)는 의회도서관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 확대와 ICT 기반 자료 접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세계 각국 의회의 글로벌 조직으로서 민주적 거버넌스와 의회 제도의 정착,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IPU(Inter-Parli

amentary Union, n.d.)는 의회의 정보 자원 관리 전략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도구의 일상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입법정보서비스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 정보 접근성과 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2.1.2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정보서비스의 고도화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이용자들의 정보행태(information behavior)가 변화하면서 정보서비스 패러다임 또한 보다 이용자 중심, 기술 친화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정보기관들은 시스템・서비스에의 신기술 도입으로 이용자에게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 시기를 맞아 국회도서관 또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전통적인 도서관 역할을 넘어 사회통합과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곽승진 외, 2025).

팬데믹 상황의 도래로 이용자들의 디지털 활용 경험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었고, 주요 이용자인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들의 온라인 기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장윤서・김지현(2021)의 국회기록보존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국회 기록의 학술적 활용을 위한 정보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와 개인화 서비스 강화에 대한 수요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소연・김유승(2024)은 국회기록보존소의 의정활동 기록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용자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의 고유 서비스인 입법정보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 발달로 인한 의원 의정활동의 변화,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필요성 증대, 시민 참여 확대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기술 변화에 맞추어 세계 각국의 의회도서관들은 디지털아카이브, 온라인 브리핑,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을 통해 디지털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입법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용자 참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품질 개선에 매진하고 있다(IFLA, 2022).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데이터베이스 개선, 원격 협력 확대 등의 디지털 관련 전략은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전환에 대한 조치 및 의회 운영의 연속성과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언급되고 있다(IPU, 2022).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은 전 세계 의회의 디지털 수준을 조사해 세계 의회의 절반 이상(68%)이 디지털 전략을 구축하여 운영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57%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의정자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의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며 입법정보서비스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IPU, 2024). 관련하여 Koryzis 외(2021)는 36개국 의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데이터와 이용자가 디지털 의회 운영의 핵심 우선순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오픈데이터・가상 환경・인공지능 등이 주요 기술 트렌드로 주목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의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제도적・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개방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록관리적 측면에서도 기록관리 업무 효율성과 기록물 보존성 개선에 신기술 도입이 효과적임이 확인되고 있다. 강윤아・오효정(2023)은 생성형 AI 발전에 따라 기록관리 분야 역시 이에 대응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자기록관리 업무 지원과 기록정보서비스에 AI 기술을 실질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박지현・정연경(2024)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전자기록관리 전략을 분석하며, 국가 수준의 제도적 정비와 기술 도입・적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기록정보의 이용자 요구와 그에 대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정은희・차미경(2020b)은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이용자 인터뷰를 통해 정보자원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확인하고, 이용자 특성과 요구 분석을 기반으로 한 개인화 서비스와 검색 최적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Cifuentes-Silva 외.(2025)는 칠레 국회도서관이 인공지능과 시멘틱 웹 기술을 도입하여 법률 데이터 공개, 입법 문서 자동 태깅, 법률 통과 예측 모델 개발 등에서 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내부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었으며, 개방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 참여와 정부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기록보존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측면에 대한 연구로 Fryer(2015)는 영국 의회 기록보존소(Parliamentary Archives)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디지털 보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디지털 저장소를 구축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영국 의회 기록보존소는 장기 비용 문제와 공급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존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였으며, 디지털 자산 보존과 대국민 기록 접근성 확대를 통해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1.3 지방의회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기술의 발달에 따른 조직의 재편은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대두되기 시작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 등은 분산형 거버넌스의 기반이 되었으며, 조직 및 기관들은 기존의 하향식・중앙집중형 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탈중심적·분산적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며 거버넌스를 재구성하고 있다(권오성, 2017).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역시 분관 운영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국가 지식정보체계의 중추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관을 건립하여 지역 지식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의회도서관으로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서비스 품질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곽승진 외, 2025).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서 국가 지식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도서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분관 운영을 통한 분산형 거버넌스의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체계는 본관의 수장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은 물론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역량을 높이고 중앙-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국립중앙도서관, 2024).

의회도서관의 거버넌스 체제 강화를 위해 IFLA(2022)는 의회도서관이 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맞춤형 정보 자원의 개발·선정·관리 과정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의회도서관은 본관 외 건물이나 의원 숙소 공간을 활용하여 지점 컬렉션(Branch Collections)이나 위성(Satellite) 자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물리적 제약 없이 자료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지식정보 서비스를 담당하는 국가 수준 도서관의 경우 이미 거버넌스 체계를 분산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관의 기록물 소장 및 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지방 분권을 통한 책임성이 제고되며,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역시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회도서관의 경우, 일반적인 국가 수준 조직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정 및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산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도서관의 분산형 조직 운영의 목적과 차별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 2.2 주요 운영 사례

국회도서관의 조직 기능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유관 기관의 운영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국회도서관과 유사한 기능과 구조를 갖춘 국내외 기관을 선정하여, 조직 체계, 기능 배치, 운영 시스템, 서비스 모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기관별로 나타나는 강점과 한계를 도출하고 국회도서관의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정책·입법 지원 기능 강화, 디지털 기반 서비스 고도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 2.2.1 정책·입법 지원 기능 강화 사례

국회도서관의 정책·입법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 입법 지원 기관과 정책연구기관의 운영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 대상은 국회도서관과 유사한 정책·입법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로 선정하였다. 주요국 의회도서관으로는 미국 의회도서관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영국 하원도서관 연구 서비스,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독일 연방의회 학술서비스, 프랑스 국민의회·상원 의회 연구 서비스를 포함하였다(함성득, 임동욱, 2005). 또한 미국 정부 책임처(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회계감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등 정책연구기관과 Fiscal Note, Bloomberg Government 등 민간 전문기관을 분석 범위에 포함하였다. 국내 민간 기관으로는 삼성경제연구소(현 삼성글로벌리서치), 포스코경영연구원 등 국가적 수준의 전략연구기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주요 사례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맞춤형 회답 서비스 사례에서는 CRS의 600명 전문인력 기반 24시간 회답체계, 영국 하원도서관과 POST(Parliamentary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와의 연계, 일본의 의뢰·자발 조사 이원화, 독일의 Hotline W, 프랑스의 정부 서면질의 지원, 미국 GAO의 5일 긴급 대응체계 등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였다. 의원 전용 질의응답 체계와 전문인력 운영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공개형 분석 간행물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CRS의 다층적 보고서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veryCRSReport.com에 따르면 현재 22,471건의 CRS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의회 조사국의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영국 하원도서관의 Debate Packs, 일본·독일의 공개 보고 원칙

등 투명성과 시의성을 강조하는 간행물 운영을 분석하였다.

셋째, 입법정보 데이터 플랫폼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유럽의회 입법 열차(Legislative Train), Fiscal Note, Bloomberg Government 등 데이터 시각화와 AI 기반 정책정보 서비스 모델을 중심으로 발전 방향을 살펴보았다.

#### 2.2.1.1 맞춤형 회답 서비스 사례

맞춤형 회답 서비스는 국회의원의 개별 질의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입법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현재 각국 의회도서관과 정책연구기관은 전문인력 배치, 주제별 전문가 네트워크, 의원 전용 접근 체계 등을 통해 회답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도서관이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 의회도서관의 회답 서비스**

**1) 미국 의회도서관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1914년 설립한 미국 의회도서관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는 110여 년간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연방의회의 입법 활동을 전담 지원하고 있다. CRS는 변호사, 생물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6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약 76,000건에 달하는 요청에 응답하여 미국 의회의 정책이나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CRS, 2024).

CRS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철저한 기밀성 보장을 통한 의원별 질의 내용 비공개 처리 체계이다. 모든 질의와 응답은 요청한 의원에게만 제공되며,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 내용에 대한 정책적 견해 표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CRS, 2024). 응답 형태는 기밀 메모(Confidential Memoranda), 이메일 응답, 브리핑 북(Briefing Book), 구두 브리핑, 대면 세미나 등 의원의 요구와 상황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직 구성 측면에서 CRS는 American Law, Domestic Social Policy, Foreign Affairs・Defense・Trade 등 5개 연구부서와 정보조사 부서(Knowledge Services Group)로 구성되어 있으며(CRS, 2024),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복잡하고 전문적인 정책 이슈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의회 전용 시스템인 Mercury를 2023년 이후 Minerva로 개편하여 요청 추적 및 관리, 보고서 관리 및 배포를 자동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 2) 영국 하원도서관 Research Service

영국 하원도서관은 1818년 설립 이래 200여 년간 축적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과학 기술 의회 사무소(Parliamentary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와의 연계를 통해 고도의 전문 분야까지 지원하는 융합형 회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OST는 영국 의회에 기반을 둔 초당파적 연구 및 지식교환 서비스로, 최신 연구 증거와 전문성이 양원 의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POST, 2025).

영국 하원도서관의 회답 서비스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정보·분석 제공을 핵심 원칙으로 하여 하원 의원과 그 보좌진의 질의에 대해 이메일, 구두 브리핑, 문서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비공개 맞춤형 응답을 제공한다(House of Commons Library, 2025). 특히 전문 분야별 직접 연결을 통한 주제 전문가와 사서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여 질의 내용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융합형 정책지원 체계를 실현하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밀성을 보장하는 개별 질의응답 전담 서비스인 'Enquiry Service'의 운영이다. 이 서비스는 의원들이 정치적 부담 없이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House of Commons Library, 2025). 과학 기술 분야의 경우 POST와 연계하여 대응함으로써 단일 기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 3)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은 의뢰 조사와 자발 조사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독특한 능동형 회답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동적 정보제공을 넘어서는 선제적 입법 지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 및 입법고사국 소속 국회레퍼런스과가 회답 서비스를 총괄하며, 13개 조사실, 14개 과, 2개 과내실로 구성된 대규모 전문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일본 국립국회도서관, 2025).

의뢰 조사는 국회의원, 상·하원 위원회 및 정당 의원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질의응답 서비스로, 전문 조사 인력이 사실 검증, 문헌조사, 외국 입법 사례 분석 등 종합적 조사를 수행하여 맞춤형 회신을 제공한다. 응답 형식은 문서 복사, 도서 대출, 서면 보고서, 면담, 연구회 참석, 구두 브리핑 등 질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며, 대면 회의 참여도 가능하다.

자발 조사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거나 수요가 많은 주제에 대해 도서관이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선제적 정책 연구로, Issue Brief, 레퍼런스(Reference), Foreign Legislation 등의 간행물로 발간되어 공식 포털에 게시된다(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공식사이트, 2025). 이러한 이원화 체계를 통해 개별 질의에 대한 즉시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 정책 이슈에 관한

선제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의회의 다층적 정보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나. 정책연구기관의 회답 서비스 - 미국 정부 책임처 (GAO)

미국 정부 책임처(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미국 회계감사원)는 1921년 Budget and Accounting Act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정부 기관으로(GAO, 2025), 'Congressional Watchdog'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의회 요청 기반으로 연간 600건 이상의 조사 요청을 처리하는 대규모 맞춤형 감사·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AO는 단순한 정보제공 기관을 넘어서 정부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평가 전문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GAO의 회답 서비스는 철저한 의회 중심 서비스 원칙에 기반하여 의회 위원회, 소위원회, 개별 의원의 공식 서면 요청에 의해 수행된다(GAO, 2025). 조사 결과는 보고서 작성, 청문회 증언, 브리핑, 법적 의견서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응답 서비스로 제공된다. 또한 단기 데이터 분석, 백서 작성, 법안 검토 등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여 정책 현안에 즉시 대응하는 전문 입법 지원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GAO의 조직은 15개의 미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은 특정 주제 분야의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있다(GAO, 2025). 업무의 95%가 의회 요청 업무로 구성되어 있어 철저한 의회 중심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간 67.5억 달러의 절약 효과를 창출하여 입법부 견제 기능 실질화에 기여하고 있다.

### 다. 주요 시사점

맞춤형 회답 서비스 사례 분석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핵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미국 CRS의 600여 명 전문인력과 연간 76,000건 처리 체계에서 보듯이 대규모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한 상시 대응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영국 하원도서관의 POST 연계 모델처럼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제한된 자원으로도 광범위한 전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의 의뢰 조사와 자발 조사 분리 운영 사례처럼 수동적 회답과 능동적 연구의 이원화를 통해 개별 질의 대응과 선제적 정책 이슈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는 균형 잡힌 서비스 체계가 요구된다. 아울러 의원 전용 즉시 접근 플랫폼을 통한 신속 대응체계는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긴급 현안 대응에서 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 회답 서비스 제공 현황

| 항목 | CRS(미국) | HoC Library (영국) | NDL(일본) | GAO(미국) |
|---|---|---|---|---|
| **요청 경로** | 의원·위원회 상시 질의(비공개) | 의원·사무실 질의(비공개) | 의뢰조사 접수(비공개) + 자발조사(내부 기획) | 의회 공식 서면 요청 원칙 |
| **운영 체계** | 600여 명 전문가 구성, 5개 연구부서 + 조사정보조직 운영 | 주제 전문가-사서 매칭 시스템 구축, POST 연계 대응 | 조사입법고사국 산하 전문조직 구성(13개 조사실 등) | 15개 미션팀 기반, 특정 주제별 담당조직 운영 |
| **응답 형식** | 기밀 메모, 이메일 응답, 브리핑 북, 구두·대면 브리핑 등 | 이메일, 문서 제공, 구두 브리핑 등 | 문서 복사, 도서 대출, 서면 보고서, 면담, 회의 참석, 연구회 지원 등 | 보고서, 청문회 증언, 브리핑, 법적 의견서 등 |
| **공개 산출물** | 선정 간행물만 공개 | Research Briefings, Debate Packs 등 공개 | Issue Brief, Reference, Foreign Legislation 등 공식 포털 게시 | 감사보고서, 브리핑 문서 등 |

### 2.2.1.2 공개형 분석 간행물 사례

정보기관에서 발행한 분석 보고서들은 전문적인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일반 국민과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형 분석 간행물들은 의회 내부의 전문적 분석 역량을 사회 전체와 공유하여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가. 의회도서관의 공개형 분석 간행물

##### 1) 미국 의회도서관 의회조사국

미국 의회도서관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이하 CRS)은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입법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CRS는 Issue Briefs(IB), Research Memos(RM), Short Reports(RS), Long Reports(RL) 등으로 형태별 세분화된 다층적 보고서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CRS, 2024).

2018년부터 전면 공개로 전환하여 기밀이 아닌 보고서의 24시간 온라인 접근을 제공하며, 법안 진행과 정책 변화에 따른 지속적 보고서 갱신 및 이전 버전 보관을 통해 실시간 업데이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비당파적 객관 분석을 통해 의회 내 모든 정당에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공개형 분석 서비스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 2) 영국 하원도서관

영국 하원도서관은 Research Briefings와 Debate Packs를 통한 실시간 입법 지원 간행물 체계를 운영하여 의회 일정과 긴밀하게 연계된 시의성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회의 및 웨스트민스터 홀 토론 직전에 배경정보, 의회 자료, 언론보도를 종합 제공하는 토론 맞춤형 발간 체계와 매주 의회 일정에 맞춘 연구 브리핑을 통해 시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다(House of Commons Library, 2025).

Research Briefings(심층분석), Insights(신속분석), Debate Packs(토론지원)의 다층적 정보구조를 통해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구별 대시보드, 경제지표 인터랙티브 차트, 선거통계 등 직관적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토론 주제 발표 이후 신속한 전문 브리핑을 제공하는 즉석 대응체계와 주제별 연구 알람, 주간 경제업데이트, 현안 브리핑 등 맞춤형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3)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은 Issue Brief, The Reference, Foreign Legislation의 3단계 분석 체계를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의회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슈 브리프(신속), 월간지(심층), 해외 입법(비교)의 단계별 분석을 통해 단기 현안 대응부터 장기 정책 연구까지 아우르는 연구 체계를 실현하며, 주요국 입법 동향과 비교법적 분석에 특화된 전문간행물을 통해 해외 입법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일본 국립국회도서관, 2025).

특히 월간 연속간행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축적을 도모하며, 일본어와 영어 병행 발간으로 국제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3단계 연구 체계는 단기 현안 대응부터 장기 정책 연구까지 아우르는 균형 잡힌 의회 연구 생태계 구축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 4) 독일 연방의회

독일 연방의회는 의원 요청 기반 맞춤형 연구보고서(Ausarbeitung) 공개시스템을 통해 의회 투명성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의원 개별요청 보고서를 일정 기간 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원칙을 채택하여 의회 활동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의원 요청을 처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Deutscher Bundestag, 2025).

Ausarbeitungen(정식보고서), Sachstände(현황 정리), Dokumentationen(자료집) 등 형태별 차별화된 발간 체계를 운영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초당파성으로 여야 구분 없는 객관적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 자유법에 근거한 시민의 보고서 공개 요구권을 보장하여 시민 접근권을 실현하고 있다.

#### 5) 프랑스 상원

프랑스 상원(Sénat)은 1995년부터 30년 동안 연속 발간한 비교 입법 보고서(Études de législation comparée) 시리즈를 바탕으로 입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동일한 질문지를 기반으로 각국의 입법정보를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Le Sénat, 2025).

종합 요약(Synthèse)과 국가별 상세 분석의 2단계 분석체계를 기반으로 정책입안자의 편의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연구의 지속적 보완·갱신을 기반으로 입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헌법, 사법, 경제, 사회정책 등 분야별 체계화를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EU 통합 지원을 위한 유럽연합 정책과 회원국 대응 방안 분석을 전문화하고 있다.

#### 6) 호주 의회도서관

호주 의회도서관은 Bills Digests, Research Publications, Chronologies 통합 서비스를 통해 1976년부터 축적된 법안분석 노하우와 연대기 정리 방식을 활용하여 입법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76년부터 모든 중요 법안의 Bills Digests를 체계적으로 발간하여 장기간 축적된 분석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 이슈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연대기(Chronologies)로 체계적 정리하고 있다(Parliament of Australia, 2025).

Quick Guides(간편 가이드), Research Papers(심층분석), Parliamentary Handbooks(종합자료)의 3층 구조 간행물을 통해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며, 연간 Budget Review 시리즈로 예산안 쟁점별 심층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ParlInfo 통합플랫폼을 통해 모든 간행물 통합

검색 및 주제별·연도별 정렬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FlagPost 블로그를 통한 신흥 이슈 선제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 7) 유럽의회

유럽의회 유럽의회조사서비스(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이하 EPRS)는 At a Glance/Briefings와 EU Fact Sheets의 다층적 정보서비스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의회 정보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At a Glance(핵심 요약), Briefings(상세 분석), EU Fact Sheets(종합 정리) 의 단계별 심화 구조를 통해 다층적 정보구조를 실현하며, Legislative Train 시스템을 운영하여 EU 입법과정 전체를 실시간 추적하는 시각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European Parliament, 2025).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EU 정책 전 영역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제공하며, 복잡한 EU 정책을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럽 각국 의회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연구 허브 기능을 수행하며, 인터랙티브 지도, 데이터 시각화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의회 정보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 나. 정책연구기관의 공개형 분석 간행물

###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은 457호까지 발간된 보건복지 Issue & Focus와 다층적 간행물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연구기관 간행물의 모범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2025년 7월 457호까지 발간한 보건복지 분야 핵심 이슈 페이퍼(10-12페이지 분량)를 통해 신속한 현안 분석을 제공하며, Issue & Focus(신속분석), 보건복지 포럼(월간 심층분석), 보건 사회연구(학술지)의 다층적 간행물 체계를 통해 단계별 발간을 실현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 복지 패널, 의료패널 등 자체 구축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특화를 통해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국가 사회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구체적 정책 대안과 현안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간행물을 온라인 리포지토리를 통해 무료 공개하여 연구자·정책담당자 접근성을 극대화하며, 주제별 해시태그를 통해 검색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 2) 미국 정부책임처 (GAO)

미국 정부책임처(GAO)는 'Congressional Watchdog'을 통해 연간 수백 건의 감사·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여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Reports & Testimonies 체계를 통해 의회 청문회 증언과 연계된 보고서 발간으로 입법 과정을 직접 지원하며, 15개 미션팀이 해당 분야 심층분석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전문화된 조직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GAO, 2025).

또한, Quick-Read Reports, 정식보고서, Technology Assessments, 정기 시그니처 간행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회의 요구에 따른 신속한 조사·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상당한 정부예산 절약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High Risk List를 통해 정부 운영의 고위험 영역을 정기 발표하여 선제적 정책개선을 유도하며, 정기적으로 주요 보고서를 선정하여 핵심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

## 다. 주요 시사점

공개형 분석 간행물 사례 분석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간행물 체계 개선을 위한 핵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미국 CRS, 영국 하원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호주 의회도서관 등은 단기·중기·장기 분석물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간하며 공식 필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현안 대응력과 연구 심화를 동시에 확보하고, 정책결정자가 필요한 시점에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 품질을 높이고 있다. 또한 다수 기관이 전면 공개 원칙과 오픈 액세스를 채택하고 주제·날짜·유형·작성자 등 다차원 검색을 제공하여 정책정보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정보공개의 시기·형식을 제도화하고 검색·분류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공공 신뢰를 강화하고 국민·연구자·언론의 활용도를 확대하고 있다. 발간물을 의사일정, 법안 심사, 청문회 일정과 직접 연계하여 시의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안 페이지·위원회 활동과 분석 자료를 상호 참조하는 구조를 운영함으로써 일정 기반 발간 시스템을 통해 자료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정책 대응 속도를 향상시켜 의정활동과 분석 지원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비교 입법 표준화, 시각화 플랫폼, 대시보드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복잡한 입법·정책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국제 연구 교류를 촉진하며, 국제 표준과 최신 시각화 기술을 결합하여 정보 전달력과 분석 품질을 높이고 글로벌 연구 협력 및 시민 친화적 정책정보서비스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표 2> 공개형 분석 간행물 운영 현황

| 기관 | 간행물 라인업 | 운영 특징 |
|---|---|---|
| **미국 의회도서관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 Issue Briefs / Short Reports / Long Reports | 다층 보고 구조 운영, 주제별·시점별 업데이트, 정치적 중립성 기반 |
| **영국 하원도서관 House of Commons Library** | Research Briefings / Insights / Debate Packs | 본회의·토론 일정과 연계, 배경정보·언론자료 통합 제공, 주간 브리핑 |
|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National Diet Library (NDL)** | Issue Brief / The Reference / Foreign Legislation | 자발·의뢰 이원화, 주제별 연속 간행, 해외 입법 비교 특화 |
| **독일 연방의회 Wissenschaftliche Dienste (Bundestag)** | Ausarbeitungen / Sachstände / Dokumentationen | 의원 요청 기반 간행물 사후 공개, 정보자유법 기반 시민 접근권 보장 |
| **프랑스 상원** | Études de législation comparée | 표준화된 비교입법 프레임워크, 30년 축적된 DB |
| **호주 의회도서관 Parliament of Australia Library** | Bills Digests / Chronologies / Quick Guides / Research Papers / Parliamentary Handbooks | 법안분석 축적, 입법 연대기 정리, 예산 분석, 통합검색 운영 |
|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 | At a Glance / Briefings / EU Fact Sheets | 시각화 기반 입법 모니터링 (Train System), 인터랙티브 도구, 디지털 친화 설계 |
| **미국 정부책임처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 Reports & Testimonies / Quick-Read Reports / Technology Assessments | 청문회·보고서 연계, 고위험군 발표(High Risk List), 다형태 간행물 운영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 Issue & Focus / 보건복지포럼 / 보건사회연구 | 패널데이터 기반 실증분석, 3단계 간행물 구조, 온라인 리포지토리 제공 |

### 2.2.1.3 입법정보 데이터 플랫폼 사례

입법정보 데이터 플랫폼은 복잡하고 방대한 입법정보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시각화하여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전통적인 문서 중심의 정보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작용 기반의 능동적 정보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정책결정자와 시민들의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주목할 만한 데이터 플랫폼 기반 정보서비스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의회 입법정보 데이터 플랫폼

#### - 유럽의회 유럼의회조사서비스(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

유럽의회 유럼의회조사서비스(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이하 EPRS)는 공공 입법정보 시각화·브리핑 플랫폼을 통해 우선순위 및 위원회별 입법 진행 상황과 배경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EPRS는 유럽의회의 정책 연구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복잡한 EU의 정치 체제와 다층적 입법과정을 시민과 정책결정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European Parliament, 2025).

EPRS의 핵심 서비스인 Legislative Train Schedule은 EU 집행위원회의 우선순위와 개별 입법 파일을 시각화하여 진행도를 표시하는 시스템으로, 복잡한 EU 입법과정을 철도 운행 시스템에 비유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시스템은 각 입법안의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이를 색상과 아이콘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직관적인 이해를 돕도록 설계되었다.

우선순위 체계는 EU 집행위원회의 정치적 우선순위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해서 업데이트되며, 임기별·체계별 변동을 투명하게 보여준다. 이용자는 집행위원회 우선순위와 유럽의회 위원회를 기준으로 원하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고, 제공되는 필터·연계 구조를 통해 진행 절차 상태별 시각적 구분을 통해 원하는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 플랫폼은 EU Fact Sheets 및 EPRS Think Tank와 교차 연결되어 종합적인 정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 나. 민간 입법정보 데이터 플랫폼

민간의 입법정보 데이터 플랫폼은 모기관의 자원과 지원을 바탕으로 발전된 고도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정책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결정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더욱 정교하고 예측 기반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1) Fiscal Note

Fiscal Note는 미국의 정부 정책 추적 및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로, 정부 정책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Fiscal Note, 2025).

Fiscal Note의 주요 서비스는 입법 추적 서비스로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입법 관련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AI 정책 분석으로 법안 내용, 통과 가능성, 영향도 등을 분석한다. 정부 조달 정보를 통한 계약 현황 추적과 로비 관리 시스템을 통한 의원 접촉 및 관계 관리 지원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한 실시간 정책 알림 시스템으로 입법 절차 변화 시 신속한 알림을 제공하여 정책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 2) Bloomberg Government (BGOV)

Bloomberg Government(BGOV)는 Bloomberg Industry Group 소속으로 정부 업무 전문 통합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BGOV는 의회 사무소, 업계 협회, 연방 계약업체, 로비스트 등 광범위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정부 업무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Bloomberg Government, 2025).

BGOV의 주요 서비스는 정부 뉴스로 다수의 소스에서 실시간 정책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법 추적을 통해 연방 및 주 법안을 추적하고 AI 요약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 업무 관련자들을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 정부 방명록을 통해 의원, 공무원, 담당자 연락처를 제공하고, 연방 조달 정보를 통해 정부 계약 정보와 입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다. 주요 시사점

해외의 주요 입법정보 데이터 플랫폼들은 공통적으로 법안·정책·예산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수집하여 구조화하고 연계하는 다차원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표 3>과 같이 이들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함으로서 현안 대응과 분석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시각화 연계 방안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정보 이용 및 정책 판단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들은 국회도서관이 미래지향적 입법정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통합, 시각화 혁신, AI 기술 도입, 개인화 서비스, 하이브리드 운영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 입법정보 데이터 플랫폼 사례

| 플랫폼 | 핵심 기능 | 탐색 기준 | 연계/시각화 | 적용 포인트 |
|---|---|---|---|---|
| EPRS – Legislative Train | 입법 진행도 시각화·브리핑 | 집행위 우선순위 / 위원회 / 절차상태 | Think Tank·EU Fact Sheets 교차연결 | 의사일정·의안 데이터+브리핑 결합 UI 모델 |
| FiscalNote | 입법추적·AI분석·알림·로비관리 | 법안 전주기 | 알림/대시보드 | 알림·개인화·요약 기능 참조 |
| BGOV | 뉴스·입법추적(AI 요약)·연락처·조달정보 | 연방·주 | 통합 포털형 | 통합검색/연락처/조달 결합형 모델 |

### 2.2.2 분산형・협력형 조직 운영 사례

#### 2.2.2.1 분산형 조직 운영 사례

분산형 조직이란 본관 외 별도의 거점을 설치하여 본관의 기능・자료・업무를 분리하고 업무를 분산적으로 부담하는 운영 형태를 가리킨다. 정보자원 및 기록물을 관리하는 정보서비스 기관은 분산형 조직 운영 방식을 통해 보존관, 주제 특화관, 지역 거점관 등 정보 관리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산함으로써 본관(중앙관)의 공간 및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장기적 차원에서 수집・관리하는 자원의 보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증진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점을 고려하며 국내외 다양한 정보서비스 기관들은 오늘날 분산형 조직 운영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내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국외 주요 국가의 국가 수준 도서관의 조직 운영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 1) 국내

국회도서관은 국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자들의 의정 및 입법 관련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정보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중앙관인 국회도서관과 보존관인 국회부산도서관으로 공간 및 업무를 분산하고 있다. 국회도서관과 국회부산도서관은 모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연구도서관이나 국회부산도서관의 경우 국민을 위한 열린도서관으로서 대중의 입법정보서비스 접근성을 강조한다. 2관 체제의 분산형 시스템를 통해 중앙관의 보존 공간을 확보하고 지식과 문화의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세 개 관으로 분산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중앙관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납본된 도서관자료를 국가문헌으로서 보존・관리하는 납본도서관으로 기능을 담당한다(국립중앙도서관, n.d.). 국립세종도서관은 2013년 세종시에 개관한 국립중앙도서관의의 지역 최초 분관으로서, 정책자료를 수집하고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국립중앙도서관, n.d.).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2006년 서울시 강남구에 설립되어 개관하였으며 전 세계의 어린이・청소년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며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 진흥과 이를 위한 콘텐츠 개발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n.d.).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3관 체제를 통해 납본, 정책, 어린이・청소년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하였으며 이용자의 특성을 세심히 고려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4> 국내 도서관 분관형 조직 운영 사례

| 기관명 | 분관 형태 | 특징 |
|---|---|---|
| 국회도서관 | **2관 체제**<br>- (중앙관) 국회도서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연구도서관<br>- (보존관) 국회부산도서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연구도서관, 국민을 위한 열린도서관 | 중앙관의 보존 공간을 확보하고 지식과 문화의 지역균형발전 고려함 |
| 국립중앙도서관 | **3관 체제**<br>- (중앙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도서관<br>- (분관)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 수집 및 정책정보서비스, 지역 공공도서관<br>- (분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자료 및 서비스 제공 | 정책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 2) 국외

국외의 다양한 국립도서관 또는 기타 국가 수준에서 운영되는 도서관 또한 분산형 조직 운영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국립도서관 및 의회도서관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의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은 의회도서관, 고밀도 보존서고, 국립시청각보존센터 3관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 중앙관, 보존관, 시청각자료 보존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회도서관은 납본도서관으로서 국내 국립중앙도서관 중앙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연구도서관의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고밀도 보존서고는 신문보존서고로서 문헌제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국립시청각보존센터는 영화, 콘서트 등의 예술·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각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관리하는 보존관으로서 운영된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이러한 3관 구성의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중앙관의 보존 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國立國會圖書館) 또한 3관 체제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국립도서관이며, 도쿄 본관, 간사이관, 국제어린이도서관으로 업무와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다. 중앙관인 도쿄 본관은 미국 의회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납본된 도서관자료를 국가 문헌으로서 관리하는 납본도서관인 동시에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연구도서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간사이관은 국립국회도서관 소속의 분관이자 보존관으로서 운영되는 전자도서관으로, 과학기술분야의 학술연구자료와 아시아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제공하는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서, 중앙관의 장서 공간을 확보하고 어린이 이용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분관으로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국립중앙도

서관 소속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유사하다.

영국의 국립도서관인 대영도서관(The British Library)은 중앙관-보존관 구성의 2관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관인 국립도서관은 납본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보존관인 스파 분관은 신문보존서고로서 기능하며 문헌제공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대영도서관의 분관 시스템은 여러 지역에 난립한 다수의 국립도서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운영 방식이며, 이러한 점에서 집중식 시스템으로서의 특징을 보인다.

독일의 국립도서관(Deutsche Nationalbobliothek) 또한 영국 대영도서관과 마찬가지로 2관 체제로 운영된다. 중앙관인 프랑크푸르트관과 보존관인 라이프치히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랑크푸르트관은 국립도서관의 중앙관으로서 역시 납본도서관의 지위를 가진다. 라이프치히관은 음악 자료를 위한 열람실 및 전시 공간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두 분관은 독일의 분단으로 인해 동독과 서독 지역에 건립되어 이원화 체계로서 발전한 사례이다.

프랑스의 국립도서관(Bibliotheque National de France)은 한 개의 중앙관과 6개의 분관으로 구성된 7관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 분관이 수집 자료의 종류와 수행 기능에 따라 6개의 분관과 보존관이 세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 국가의 도서관 체계와 구별된다. 중앙관인 미테랑관은 납본도서관이며, 비쉬 생-조르주 기술센터와 조엘 르 퇴울 보존센터는 보존관으로서 각각 디지털 자료 및 문서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나머지 4개 분관은 문화예술 분야의 자료를 미술 및 문화유산, 문학, 음악, 공연예술 등 세부 분야에 따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관련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슐리외관은 미술사, 문화유산, 특수 유형의 자료의 수집·관리와 관련 정보서비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스날관, 오페라관, 장 빌라르관은 각각 문학자료, 음악자료, 공연예술자료를 중심으로 도서관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분관 체계는 프랑스 혁명 이후 사립도서관들이 국립도서관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다수의 분관이 운영되기 시작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표 5> 국외 도서관 분관형 조직 운영 사례

| 국가 | 기관명 | 분관 형태 | 특징 |
|---|---|---|---|
| 미국 | 의회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 **3관 체제**<br>- (중앙관) 의회도서관: 납본도서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연구도서관<br>- (보존관) 고밀도 보존서고: 신문보존서고, 문헌제공서비스 운영<br>- (보존관) 국립시청각보존센터: 시청각 자료 보존관, 영화·콘서트 등 개최 | 분관을 통해 중앙관을 중심으로 보존 공간을 확보함 |

| | | | |
|---|---|---|---|
| 일본 | 국립국회도서관<br>(國立國會圖書館) | **3관 체제**<br>- (중앙관) 도쿄 본관: 납본도서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연구도서관<br>- (보존관) 간사이관: 전자도서관, 과학기술분야 학술연구자료 및 아시아 자료 중심<br>- (분관) 국제어린이도서관: 어린이전문도서관 | 중앙관의 장서 공간을 확보하고 어린이 이용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관을 설립함 |
| 영국 | 대영도서관<br>(영국 국립도서관)<br>(The British Library) | **2관 체제**<br>- (중앙관) 영국국립도서관: 납본도서관<br>- (보존관) 보스턴 스파 분관: 신문 보존서고, 문헌제공서비스 제공 | 여러 지역에 난립한 다수의 국립도서관을 통합하여 분관을 건립한 집중식 시스템의 특성을 보임 |
| 독일 | 독일<br>국립도서관<br>(Deutsche Nationalbobliothek) | **2관 체제**<br>- (중앙관) 프랑크푸르트관: 납본도서관<br>- (보존관) 라이프치히관: 음악 자료를 위한 열람실과 전시 공간 마련 | 국가 분단으로 인해 동부와 서부 지역에 각각 국가도서관을 건립하여 이원화 체제로 발전함 |
| 프랑스 | 프랑스<br>국립도서관<br>(Bibliotheque National de France) | **7관 체제**<br>- (중앙관) 미테랑관: 납본도서관<br>- (분관) 리슐리외관: 미술사, 문화유산, 특수유형 자료<br>- (분관) 아스날관: 문학자료<br>- (분관) 오페라관: 음악자료<br>- (분관) 장 빌라르관: 공연예술자료<br>- (보존관) 비쉬 생-조르주 기술센터: 디지털화 자료<br>- (보존관) 조엘 르 퇴울 보존센터: 문서 보호・복원 | 프랑스 혁명 이후 사립도서관들을 국립도서관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특화된 다수의 분관을 운영함 |

위 국내외 국립도서관의 분산형 운영 사례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각 나라의 국립도서관은 역사적 배경과 국가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분관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분산형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즉, 오늘날 각국의 국립도서관 분관 체계는 도서관 조직이 목적에 따라 분화되거나 지역별 또는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던 도서관이 국립도서관으로 편입되는 등 복잡한 역사・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각국의 분산형 운영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분관은 설립 목적과 수행 기능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중앙관의 보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거나 특수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보존관 유형으로, 대부분의 국립도서관이 채택하고 있는 분관 형태이다. 두 번째 유형은 특정 주제나 자료 유형을 중점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주제 특화형 분관으로, 문화예술 및 특수유형 자료, 과학기술 및 아시아 특

화 자료, 정책 자료 등을 담당하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국내 국립중앙도서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 특화형 분관으로, 국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과거 일부 특정 분관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학술연구자료를 기반으로 문헌 제공 서비스를 주요 기능으로서 수행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그 기능이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분관 유형은 모두 국가 문헌 및 기록 관리, 광범위한 이용자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립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 형태임을 보여준다.

#### 2.2.2.2 협력형 조직 운영 사례

협력형 조직 운영은 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인프라・인력・표준 등 다양한 측면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운영 체계를 가리킨다. 의회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은 이러한 협력형 체계를 통해 주로 정보 인프라 구축, 사서 및 정보서비스 인력 양성, 서비스 표준 수립 등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또는 타 국가(특히 개발도상국)의 도서관 조직 역량 강화와 운영 개선을 도모한다. 나아가 이는 기관 간 장기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식 외교의 기반 마련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국내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이하 코이카)와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USAID 등은 원조 공여 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정보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ODA 사업을 통해 협력형 조직 운영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 1) 국내

코이카(KOICA)는 외교부 소속 정부출연기관으로 국내 ODA를 총괄하며 무상원조 프로젝트의 기획과 집행을 전담하고 있다. 코이카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1991년 설립된 이래 해외 개발이 시급한 국가의 보건의료,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정부, 민간기업, NGO 등과 협력하여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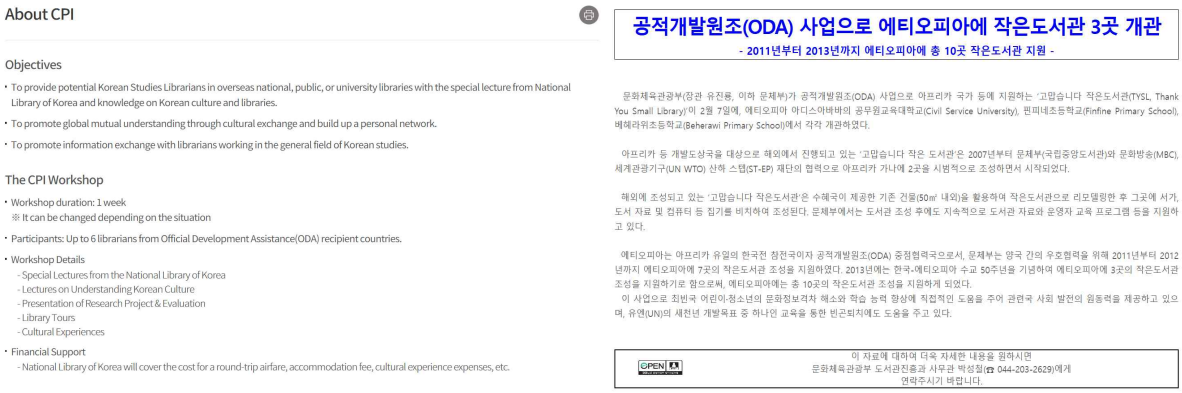
코이카가 수행한 도서관 관련 ODA 사례로는 ‘베트남 경찰대학교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코이카의 예산 지원 아래 도서관 분야 정보시스템 기업인 퓨처누리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로, 단순한 장비 구축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연수를 포함한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해당 프로젝트는 2017년 코이카 성과 우수 사례로 효율

성・효과성・파급효과・지속가능성 등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지원 과정에서 한국의 전자도서관 기술과 IT 역량을 전파하고 베트남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도 증가하였다(박현정, 2018).

2025년 진행된 앙골라 콴자 노르테주 루칼라시 교사 양성학교 '이러닝 교육센터 준공' 사업의 경우 코이카의 예산 총괄 집행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러닝 실, STEM 실, 도서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센터 준공을 통해 이러닝, STEM, 성평등, 기초 읽기교육 등 현대적 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인프라 확충과 교사 역량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였다(박현수, 2025).

<그림 3> 코이카 ODA 협력 운영 사례
(베트남 경찰대학교 도서관시스템 오픈 행사(좌)와 앙골라 교사양성학교 이러닝교육센터 준공식(우))

국립중앙도서관 또한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분야에 있어 ODA 협력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5년부터 문화파트너십 이니셔티브(CPI)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외 사서 역량 강화를 지원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장기 문화 교류 사업으로, 2006년부터는 해외 사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2025년 기준 23개국 63명의 사서가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문헌정보학 전문가들에게 특강・연구・발표 기회를 제공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n.d.).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MBC, 세계관광기구(UNWTO) 산하 스텝(ST-EP) 재단과 협력하여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007년 가나에 두 곳의 작은도서관을 시범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무원교육대학교, 핀피네초등학교, 베레하위초등학교에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Thank You Small Library, TYSL)'을 개관하였다. 해당 사업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서가, 도서, 컴퓨터 집기 등을 갖춘 도서관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개관 이후에도 자료 지원과 운영자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About CPI

Objectives

- To provide potential Korean Studies Librarians in overseas national, public, or university libraries with the special lecture from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knowledge on Korean culture and libraries.
- To promote global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cultural exchange and build up a personal network.
- To promote information exchange with librarians working in the general field of Korean studies.

The CPI Workshop

- Workshop duration: 1 week
  ※ It can be chang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 Participants: Up to 6 librarians from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recipient countries.
- Workshop Details
  - Special Lectures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Lectures on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 Presentation of Research Project & Evaluation
  - Library Tours
  - Cultural Experiences
- Financial Support
  - National Library of Korea will cover the cost for a round-trip airfare, accommodation fee, cultural experience expenses, etc.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에티오피아에 작은도서관 3곳 개관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에티오피아에 총 10곳 작은도서관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아프리카 국가 등에 지원하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TYSL, Thank You Small Library)'이 2월 7일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공무원교육대학교(Civil Service University), 핀피네조등학교(Finfine Primary School), 베헤라위조등학교(Beherawi Primary School)에서 각각 개관하였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2007년부터 문체부(국립중앙도서관)와 문화방송(MBC), 세계관광기구(UN WTO) 산하 스텝(ST-EP) 재단의 협력으로 아프리카 가나에 2곳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해외에 조성되고 있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수혜국이 제공한 기존 건물(50㎡ 내외)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한 후 그곳에 서가, 도서 자료 및 컴퓨터 등 집기를 비치하여 조성된다. 문체부에서는 도서관 조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서관 자료와 운영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이자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으로서, 문체부는 양국 간의 우호협력을 위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에티오피아에 7곳의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였다. 2013년에는 한국-에티오피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에티오피아에 3곳의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에티오피아에는 총 10곳의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 사업으로 최빈국 어린이·청소년의 문화정보격차 해소와 학습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관련국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엔(UN)의 새천년 개발목표 중 하나인 교육을 통한 빈곤퇴치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진흥과 사무관 박성철(☎ 044-203-26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4〉 국립중앙도서관 ODA 협력 운영 사례

(문화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좌)와 에티오피아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우))

국내 협력형 조직 운영 사례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국내 협력형 조직 운영 사례

| 기관명 | 운영 사례 | 내용 |
|---|---|---|
| 코이카(KOICA) | 베트남 경찰대학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2017) | - 민간기업인 퓨처누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 참여, 코이카 ODA 우수 사례로 선정됨<br>- 효율성, 효과성, 파급효과, 지속 가능성 등에서 그 성과와 영향력을 인정받음 |
| | 앙골라 교사양성학교 이러닝 교육센터 건립(2025) | - 앙골라 콴자노르테주루칼라시의 교사 양성학교에 이러닝(e-learning) 교육센터를 준공<br>- 교육센터는 이러닝실, STEM실, 도서관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 센터를 통해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를 위한 이러닝, STEM, 성평등,<br>- 기초 읽기교육 등 현대적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됨 |
| 국립중앙도서관 | 문화 파트너십 이니셔티브(CPI)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2005~) | - 2005년부터 진행한 해외 사서 문화동반자 이니셔티브 교육 훈련 프로그램<br>-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문화 간 유대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장기 문화 교류 사업<br>- 2006년부터 해외 사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2025년 기준 23개국 63명의 사서가 참여함 |
| | 에티오피아 작은도서관건립(2014) |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공무원교육대학교, 핀피네초등학교, 베헤라위초등학교 세 곳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함<br>-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도서관 시설 및 장비를 배치함<br>- 도서관 조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서관 자료 및 운영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 |

### 2) 국외

국외 ODA 사업을 통한 협력형 운영 사례로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중심으로 한 협력 사업을 들 수 있다. 미국은 USAID, 대통령 말라리아 이니셔티브(PMI), 에이즈 구호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PEPFAR) 등 주요 원조 집행 기관을 통해 ODA 사업을 수행한다. 이 가운데 USAID는 전체 미국 ODA의 약 50%를 담당하며, 그 사업은 ODA 예산을 통해 집행된다(한국국제협력단, n.d.).

대표적 운영 사례로는 2024년 에티오피아 공공도서관 보수 및 장비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USAID는 에그나 르 에그나 청소년 건강·개발 기구와 협력하여 에그나 르 네그나와 카미라 도서관 및 청소년 센터를 재건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갈등 해결 및 또래 중재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도서관과 청소년 공간에는 책·책상·테이블·컴퓨터 등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내부의 사이언스 카페 도서관에도 유사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U.S. Embassy Ethiopia, 2024).

<그림 5> 미국 USAID ODA 협력 운영 사례
(에티오피아 공공도서관 보수 및 장비 지원 사업)

<표 7> 국외 협력형 조직 운영 사례

| 국가 | 기관명 | 운영 사례 | 내용 |
|---|---|---|---|
| 미국 | 미국<br>국제개발처<br>(USAID) | 에티오피아 공공도서관 보수·장비 지원(2024) | - 에그나르 에그나 청소년 건강 및 개발 기구(EgnaLe EgnaYouth Health and Development Organization)와 협력하여 도서관 및 청소년 센터를 재건<br>- 청소년 대상 갈등 해결 및 또래 중재 교육을 제공<br>- 공간 운영을 위한 장비와 자원을 제공 |

### 2.2.3 AI・디지털 서비스 특화 사례

AI를 적용한 디지털 서비스는 이용자 중심 정보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기술 발전과 함께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 또한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도서관 역시 기존의 AI・디지털 서비스를 개선하고 온라인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AI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활용의 네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국내외 유관기관의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였다.

#### 2.2.3.1 AI 서비스 사례

AI를 적용한 서비스는 챗봇, 요약 서비스, 도서 추천, 업무 자동화, 오프라인 체험 공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대표적 AI 서비스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운영 사례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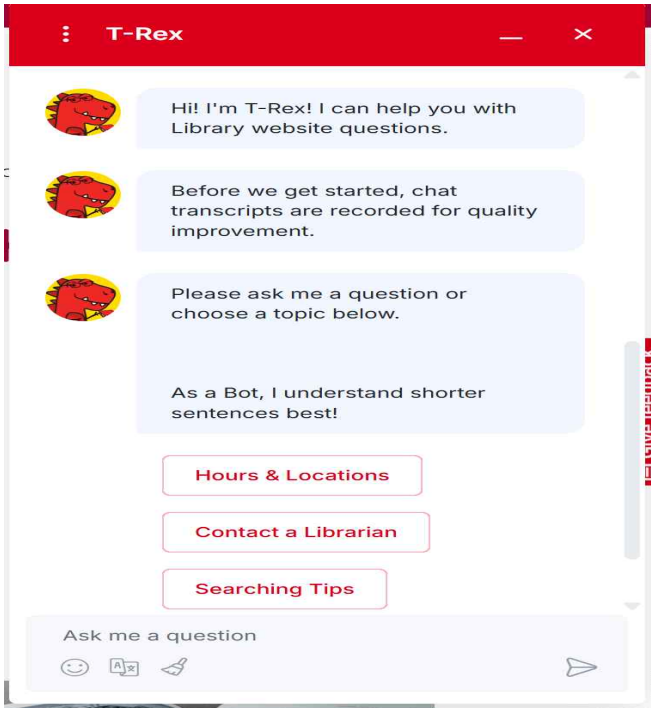
##### 가. 챗봇 서비스

챗봇은 생성형 AI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인간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응답하는 프로그램으로, 국회도서관을 비롯한 많은 도서관에서 도서관 공간 및 이용 방법 안내, 열람실 예약 현황, 도서 검색 등의 서비스에서 이용하고 있다(민영태, 곽승진 2023). 대표 사례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중앙도서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페이지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구축되어, 해당 도서관에 관련된 질문에만 답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자연어 대화 방식으로 질문이 가능하며,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답변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26개국 언어로 문의 사항에 답변이 가능해 외국인 유학생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답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답변마다 출처 및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국회도서관이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챗봇처럼 챗봇 서비스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표현하여 서비스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관의 상징이나 개성을 살린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친근감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의 캘거리 대학교 도서관(Library of Calgary University)은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이용자 질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에 제공하던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AI 기반 레퍼런스 챗봇인 ‘티-렉스(T-Rex)’로 변경하였다. 캘거리 대학교의 마스코트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Rex)’를 아이콘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 고유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을 위해 과거 참고질의

질문들을 분석하여 챗봇으로 대답 가능한 질문을 선정, 테스트 과정을 거쳐 답변의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현재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이용자를 지원하며 전체 레퍼런스 질문의 절반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그림 6> 캘거리대학교 도서관의 AI 챗봇 '티-렉스(T-R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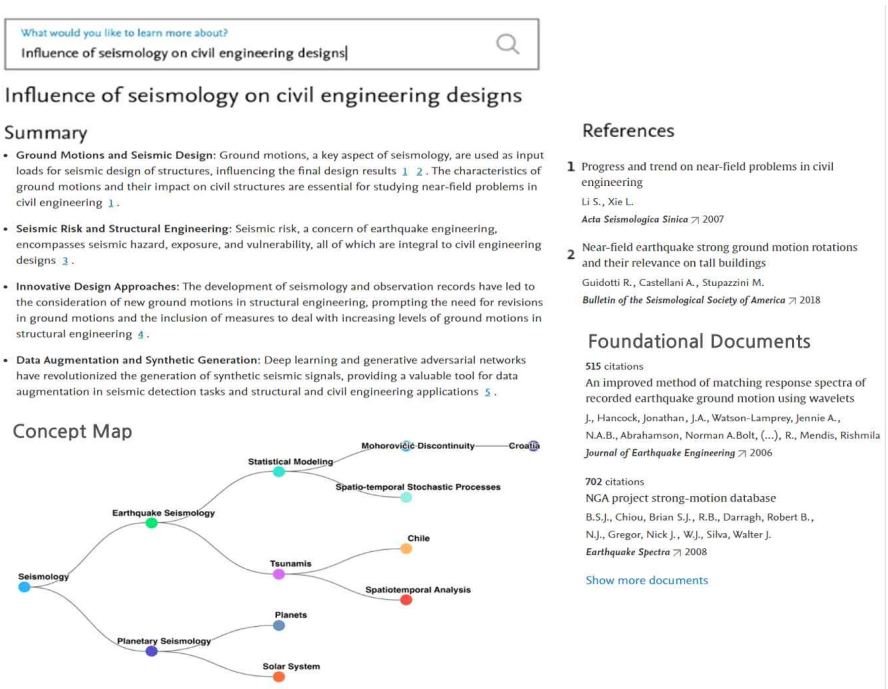
### 나. 요약 서비스

AI 요약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텍스트, 문서,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에서 핵심 내용을 추출하고 요약해 주는 서비스로 교육, 의료, 비지니스,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는 정보자원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방대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해 준다는 점에서 리걸테크 분야에서 특히 활용도가 높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AI 시사 분석 '아르고스'에서 이슈 키워드별 AI 100자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사 케이스로 AI 기반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케이스'는 'AI 프리뷰'와 'AI 요약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프리뷰는 검색 목록에서 판례 제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필요한 판례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I 요약 기능은 판례 상세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AI 요약본으로, 전문을 읽지 않아도 판례의 쟁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7> 빅케이스의 AI 프리뷰 및 AI 요약 화면

한편 AI 요약 제공 시 자료의 출처를 함께 표기하면 요약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출판사 Elsevier에서 구축한 초록·인용 데이터베이스 Scopus는 생성형 AI 기반의 'Scopus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copus AI는 이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대화형으로 질문을 입력하면 각 검색 결과마다 간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약(Summary)과 참고문헌(References)을 함께 제공한다. 이외에도 Scopus AI는 검색 결과를 시각적으로 매핑하는 Concept Map, 최근 2년간의 연구를 분석해 연구 트렌드를 제시하는 Emerging themes, 추가적인 탐색을 위한 관련 질의를 제공하는 Go deeper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 탐색을 지원한다.




<그림 8> Scopus AI의 검색 화면

### 다. 도서 추천 서비스

AI를 활용한 추천서비스(recommendation service)는 이용자의 과거 행동이나 데이터 선호도를 분석하여 관심있을 만한 상품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서관 정보센터 분야에서는 도서 추천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AI 도서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의 연령대, 관심사, 관심 분야, 관심 도서 등을 입력하면 AI가 맞춤형으로 도서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대출 기록과 취향 및 선호도를 분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곽우정, 노영희 2021). 국내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서비스로 서울 중구구립도서관, 경기 용인시립도서관 등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적 특징과 독서 취향, 개인별 독서 이력을 분석하여 AI가 추천 도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9> 군포시 중앙도서관 플라이북 AI 도서추천 서비스 (군포시 공식블로그)

반면, 도서관 자체 시스템이 아닌 외부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로 서울 강남구립논현도서관, 군포시 중앙도서관 등에서는 '플라이북 AI 도서추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플라이북 AI는 이용자의 나이, 성별, 직업, 기분, 관심사 등을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는 서비스로 도서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책의 리뷰, 위치, 다른 이용자가 함께 대출한 도서 정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책 위치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어

특정 도서관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만국립공공정보도서관(國家公共資訊圖書館, National Library of Public Information)에서도 AI를 기반으로 한 도서 추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소장 도서 조회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AI 도서 추천 서비스는 GPT-4o와 Embedding Model을 결합한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 추천 도서 목록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가 대출했던 도서의 주제와 유형, 최근 독서 경향을 분석한 뒤 스마트 추천 메커니즘을 통해 가장 적합한 도서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최근 2년간의 대출 기록을 기반으로 자주 대출하는 이용자와 드물게 대출하는 이용자를 구분하여 차별화된 추천 방식을 적용한다. 자주 대출하는 이용자는 대출 특징을 분석한 후 독서 선호도를 보충 반영하여 도서를 추천하고 있으며, 드물게 대출하는 이용자는 독서 관련 질문 응답과 관심 독서 선택 과정을 거쳐 추천 도서를 제공한다.

### 라. 업무 자동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는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로 문서처리, 데이터 분석, 고객응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도서관 분야에서는 장서 점검, 주제색인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서 점검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로 여수 이순신 도서관과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서 점검 로봇'이 있다. 장서 점검 로봇은 도서관 내부를 순회하며 잘못 배치된 도서를 찾아, 내부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장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순신 도서관의 경우 AI 알고리즘으로 수만 권의 도서를 점검하는 데 단 6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아 사서들의 업무 환경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용환경 측면에서도 로봇에 장착된 센서가 이용자들의 동선을 감지하여 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있어 안전성 측면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주제색인 업무에 AI를 활용한 대표적 사례로 핀란드 국립도서관(Kansalliskirjasto, National Library of Finland)은 자동 주제색인 도구인 'Annif'를 개발하였다. Annif는 텍스트 기반 문서의 분류와 기술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AI 응용프로그램으로 자연어 처리 및 머신러닝 도구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색인 작업을 진행한다. 이용자가 통제 어휘집을 선택하고, 이미 색인된 문서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면 Annif가 신규 문서에 대한 주제어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Annif는 다국어를 지원하며, 다양한 주제 어휘집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현재 Annif는 독일, 스웨덴, 폴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핀란드 위배스퀼래대학교 대학교를 비롯해 여러 대학 리포지터리에서는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의 주제색인 작업에 Annif를 이용하고 있다. 독일 국립도서관과 폴란드 국립도서관에서도 자

동 주제색인을 위해 Annif를 도입하였으며, 스웨덴 국립도서관은 학술 출판물을 자동 분류하기 위해 Annif를 이용한다. 이외에도 핀란드 방송사 YLE는 온라인 뉴스 기사에 주제 태그를 부여하는 데 Annif를 활용하며, 핀란드 출판사 Storia Oy는 Annif를 통해 출간 예정 도서의 메타데이터를 생성한다.

### 마. 오프라인 체험 공간

이용자들의 정보 활용 경험을 확장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비롯한 박물관과 기록관 등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에서는 VR・AR・AI 기술을 접목한 오프라인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실감형 체험관인 '실감서재'를 통해 인터랙티브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활용한 북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테이블 위에 종이책을 올려놓으면 '한줄 브리핑', '읽기 나침반', '멀티미디어 정보' 등이 제공되며, 책을 움직일 때마다 반응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실감서재'와 연동된 스마트 책장을 통해 직관적인 도서 탐색이 가능하고, 'AI 사서'를 통해 개인 맞춤형 도서도 추천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체험한 모든 내용은 QR코드로 저장할 수 있어,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서재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National Library Board)는 '유나이티드 스퀘어'와 '창이 공항 T3 터미널'에 중국 고전 문학을 주제로 한 AI 체험 공간을 개설하였다. 해당 공간

에서는 생성형 AI 기반의 챗북인 ‘ChatBook: Journey to the West’를 통해 책과 대화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챗북을 통해 고전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과 영어 또는 중국어 대화할 수 있다. 챗북 앞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하거나 키보드로 타이핑하여 대화할 수 있으며, 챗북은 중국어 음성으로 응답하고, 화면에는 영어와 중국어 텍스트가 표시된다.

<그림 11> 싱가포르 창이 공항 AI 체험공간
(the straits times, 2025.1.24.사진: 신타로 타이)

조사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다양한 영역에서 AI·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도서관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AI 챗봇 개선, AI 요약 서비스 확대, AI 도서 추천 서비스 도입, AI 업무 자동화, AI 오프라인 체험 공간 운영 등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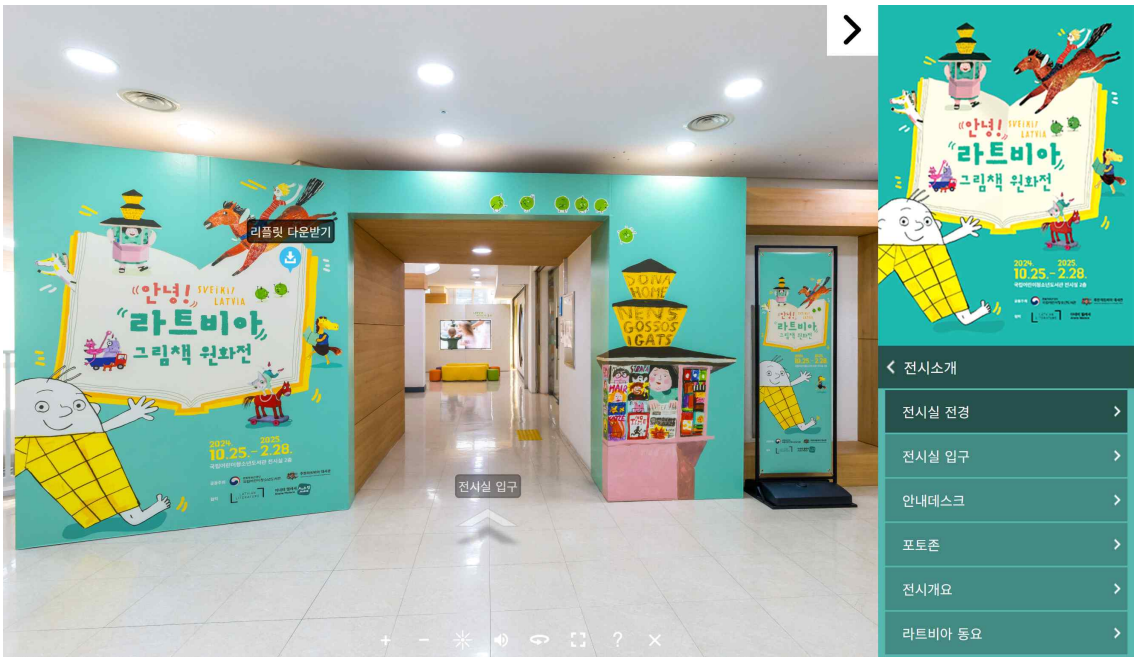
### 2.2.3.2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사례

도서관이 소장한 정보 콘텐츠들을 어떻게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고찰하기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였다. 대부분 온라인 전시, 디지털 컬렉션, VR 투어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알리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사례를 살펴보고 국회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방향성과 아이디어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가. 온라인 전시

온라인 전시는 기존 오프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던 정보자원을 온라인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미 도서관과 박물관 등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대체로 온라인 전시는 오프라인 전시를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종료된 전시를 기록·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국가대표 정보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온라인 전시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오프라인에서 개최된 전시·행사를 온라인으로 다시 관람할 수 있는 '전시컬렉션(온라인전시)'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면 360도 VR을 통해 실제로 전시 현장을 둘러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큐레이터의 해설 동영상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오프라인 전시를 온라인으로 구현한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유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으며, 360도 VR을 통해 실제 전시장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림 12>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시컬렉션(온라인전시) 화면

해외의 경우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에서는 'EXHIBITIONS'을 통해 문화, 기억, 역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온라인 전시를 제공하고 있다. EXHIBITIONS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 전시를 소개하고, 지난 전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온라인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전시도 마련하고 있다. 이용자가 관람하고자 하는 전시를 선택하면 전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물론 전시 품목, 후원자 목록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전시물은 사진, 영상, 그림, 음성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로 구성되어 이용자에게 다채로운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이용자가 전시의 흐름과 맥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방식을 적용한 온라인 전시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국회도서관(国立国会図書館, National Diet Library)의 ‘Digital Exhibitions’에서는 도서관이 소장한 특이 자료에 대하여 해설과 함께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Digital Exhibitions는 크게 국립국회도서관의 전시와 국제어린이문학도서관의 전시로 구분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주로 이미지 아카이브 중심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진으로 보는 메이지・다이쇼 시대’, ‘에도 시대의 일본-네덜란드 교류’와 같이 특정 시대와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전시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 나. 디지털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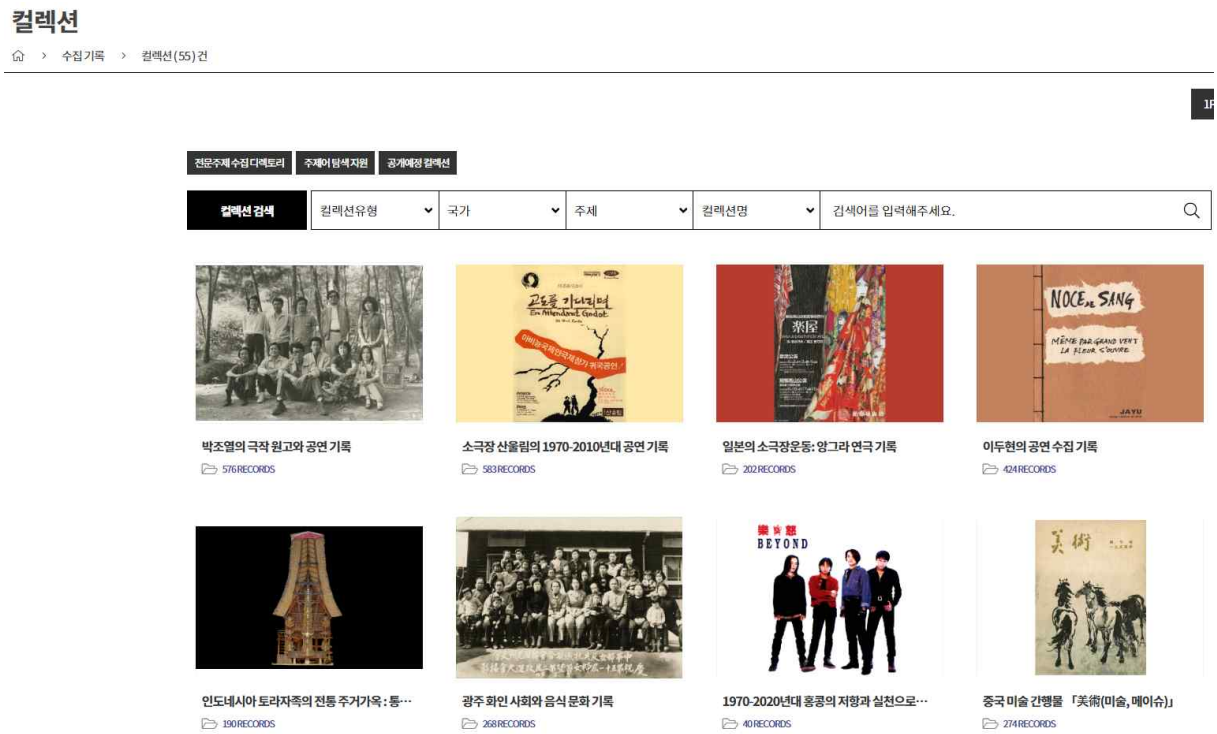
디지털 컬렉션은 각 기관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를 주제・유형별로 컬렉션을 만들어 온라인 환경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단일 정보자원으로 존재하던 주제별 맥락에 맞게 묶어 보여줌으로써 정보원의 가치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이용자의 자료 탐색과 흥미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경우 도서・문헌뿐만 아니라 신문, 사료, 기록물, 미술작품, 곤충・의학・음악・농학 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다. 각 컬렉션은 간략한 개요와 세부 컬렉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컬렉션들은 계층 구조로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컬렉션 내의 디지털 자료는 고화질로 원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상세한 메타데이터도 함께 제공된다.

〈그림 1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 예시 화면
(한국병합사료 > 강제보호・병합의 사료 > 운양호사건 > 日省錄 高宗 12년 乙亥 8월 24, 25, 26일자 기사)

디지털 컬렉션 제공 시 컬렉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함께 제공하면, 자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도 향상된다. 아시아문화박물관 아카이브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보유 중인 기록, 사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세한 설명이 담긴 다양한 ‘컬렉션’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소극장 산울림의 1970-2010년대 공연 기

록’, ‘광주 화인 사회와 음식 문화 기록’, ‘인도네시아 토라자족의 전통 주거가옥 : 통코난 기록’ 등 다양한 주제와 시대를 아우르는 컬렉션이 특징이다. 각 컬렉션은 배경, 범위, 내용, 정리체계까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온라인으로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순 없지만, 열람 및 이용 조건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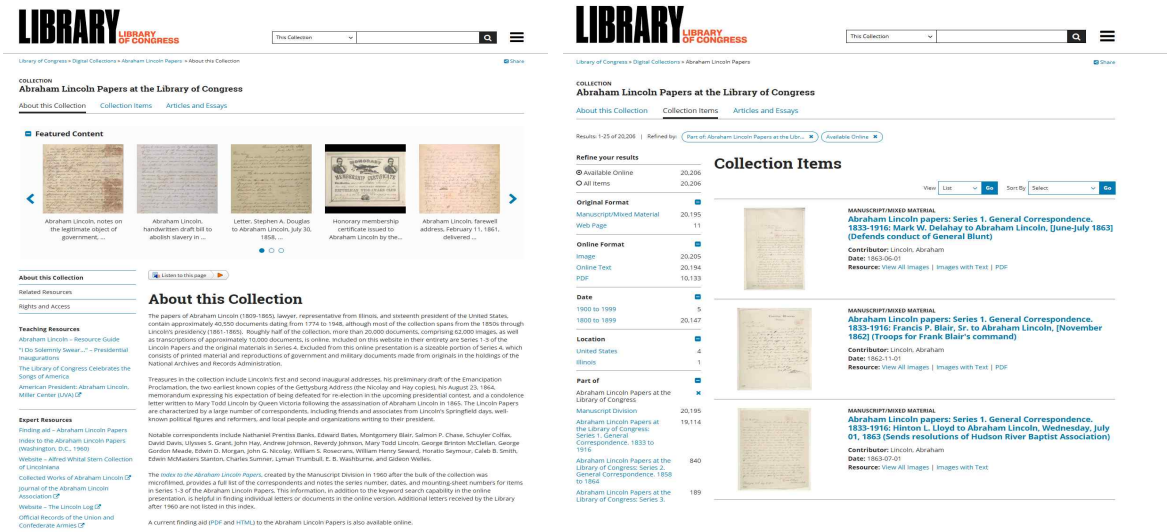



<그림 14> 아시아문화박물관 아카이브의 ‘컬렉션’

해외의 국가대표도서관들도 소장하고 있는 자관 고유의 정보자원을 기반으로 디지털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国立国会図書館)은 ‘DIGITAL COLLECTION’을 통해 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소장자료와 수집한 디지털 자료를 이용자가 검색・열람・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희귀 고문서, 검열 자료, 제국의회 자료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컬렉션을 다수 구축하고 있으며, 컬렉션 내의 디지털 자료(Digitized Contents)는 고화질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자료에는 상세한 메타데이터가 함께 표기되며, 다운로드 및 공유도 가능하다. 특히, 일본 국회도서관의 DIGITAL COLLECTION은 이미지 검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도 ‘Digital Collections’을 통해 문서, 기증품, 기록물, 웹 아카이브, 사진, 녹음 등 다양한 자료를 디지털 컬렉션으로 제공한다.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링컨 문서(Abraham Lincoln Papers at the Library of Congress)’,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진전(African American Photographs Assembled for 1900 Paris Exposition)’, ‘진주만 공격 이후 거리의 사람들(After the Day of

Infamy: “Man-on-the-Street” Interviews Following the Attack on Pearl Harbor)’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 컬렉션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각 컬렉션은 컬렉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컬렉션 항목, 권리 및 접근 안내, 연관 자료 등을 함께 제공한다. 컬렉션 내의 디지털 자료(Collection Items)는 pdf, 이미지, 텍스트가 포함된 이미지 등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자료에 대한 설명과 메타데이터도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 또한, 페이지 읽기 기능(Listen to page)을 통해 난독증이나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원활하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림 15> 미국 의회도서관의 Digital Collections 예시 화면
(Abraham Lincoln Papers at the Library of Congress)

### 다. VR 투어 서비스

국내외 도서관에서는 VR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투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가상공간에서 도서관을 탐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VR Tour’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기획되었다. 모바일 기기만 있다면 이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도서관 내의 모든 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도서관 탐방에만 그치지 않고, 안내가 필요한 곳이면 시설 이용 및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안내 동영상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VR Tour는 실제 VR 기기를 착용하여 진행한다.

이와 유사하게 캐나다 의회도서관(The Library of Parliament, Canada)도 ‘Parliament: The Virtual Experience’ 서비스를 통해 상원, 하원과 의회도서관 등을 가상으로 체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과거 캐나다 의회 건물이 장기 보수로 폐쇄됨에 따라 캐나다 의회도서관과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가상으로 의회 및 의회도서관을 탐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학교로 가상현실교실키트(a Virtual Reality Classroom Kit)를 배송하여 학생들이 교실에서 VR 기기로 의회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림 16>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VR Tour

대부분의 정보기관에서는 자관이 소장 중인 정보자원의 디지털화를 통해 소장자료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국회도서관에서도 스토리텔링 중심의 VR·온라인 전시, 유형별 디지털 컬렉션, VR 투어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도서관은 기관의 특성상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방대한 양의 의회 민주주의·법률 주제 특화 정보자원을 소장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디지털 형식으로 가공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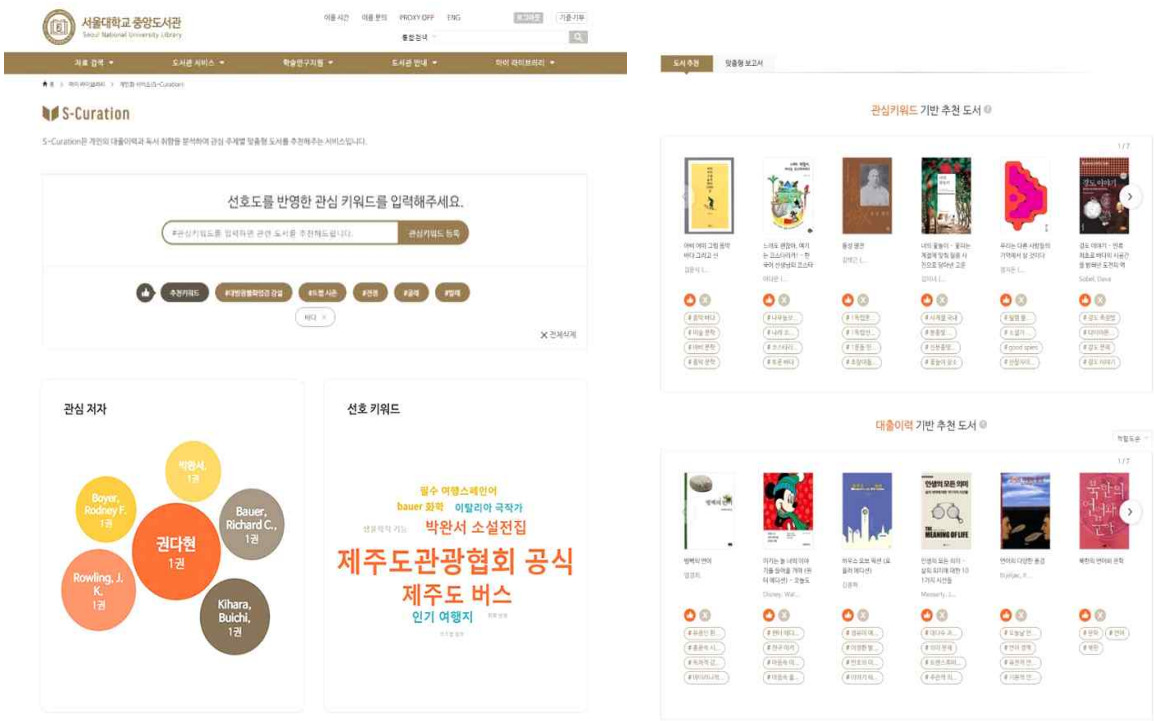
### 2.2.3.3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사례

국내외 정보제공 기관들은 이용자들의 대출 이력과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개인별 도서 추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 맞춤형 도서 큐레이션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는 정보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은 물론 이용자와 도서관의 유대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많은 도서관들이 이용자에게 더욱 최적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서비스 사례로 대구통합도서관에서는 이용자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능동형 도서 추천’과 ‘맞춤형 도서 추천’의 2가지 방식으로 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다. 능동형 도서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도서를 추천하는 서비스이다. 키워드는 중복 포함 최대 3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마음에 드는 키워드가 없다면 새로운 키워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는 도서 활동 이력, 성별, 나이, 지역 등 실시간 자료를 바탕으로 도서를 추천하는 서비스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독서 취향이 유사한 이용자를 찾아내고, 그 이용자가 읽은 도서 중 읽지 않은 도서를 추천한다. 능동형 도서추천 서비스는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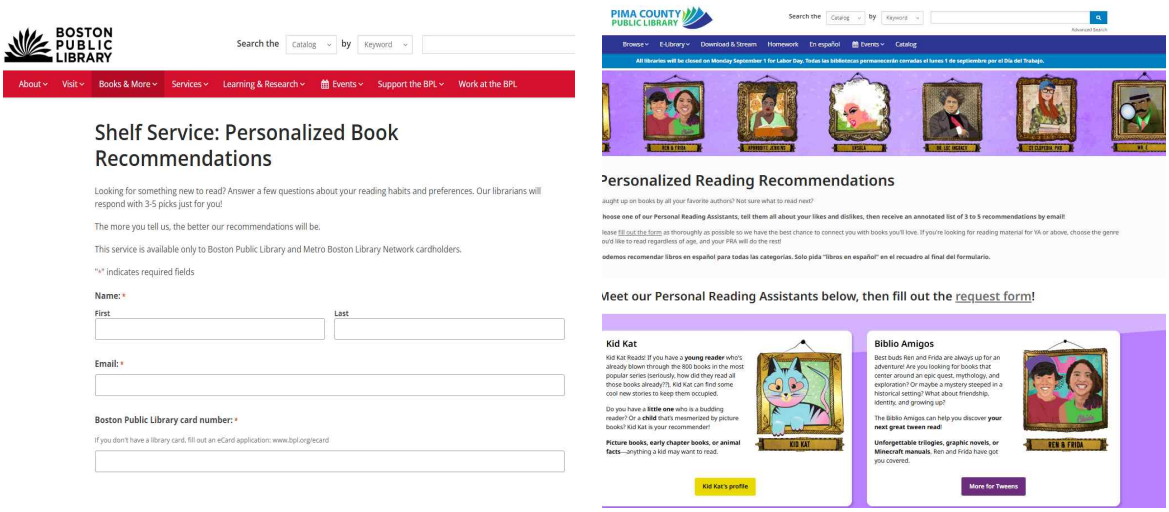
이와 유사하게 법원도서관도 이용자의 관심 카테고리에 따라 전자책·오디오북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법원도서관 전자책서비스의 '나를 위한 추천'에서는 관심 카테고리를 등록하면 전자책 또는 오디오북 중 원하는 분야의 자료를 추천받을 수 있다. 전자책의 관심 카테고리는 법률도서와 법원도서관 간행물으로 구성되며, 오디오북의 관심 카테고리는 소설, 시/에세이, 자기계발, 판례공보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17>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S-Curation 화면

한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S-Curation'를 통해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S-Curation'은 중앙도서관에서 축적된 대출 이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도서를 추천하기 위한 북큐레이션 서비스이다. 개인의 도서 대출 이력과 독서 취향을 분석하여 관심 주제별 맞춤형 도서를 추천한다. 'S-Curation'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가 추천받고 싶은 도서의 키워드를 등록하면 이를 기반으로 추천

도서 목록이 생성된다. 둘째, 대출 이력에 ‘좋아요’ 또는 ‘싫어요’를 선택하면 이를 반영하여 추천 도서를 새롭게 제시한다. 셋째, 개인별 대출 이력을 분석한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통계 정보 및 분석 결과는 차트·그래프·워드 클라우드 등 시각화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 맞춤형 도서 큐레이션 제공을 위한 이용자 설문
(보스턴 공립도서관(좌), 피마카운티공립도서관(우))

해외의 많은 도서관에서는 대체로 온라인 설문과 이메일 통신을 통해 이용자 맞춤형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스턴 공립도서관(Boston Public Library), 피마카운티 공립도서관(Pima County Public Library), 카네기 도서관(Carnegie library) 등에서는 이용자가 도서관 웹사이트나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자신의 독서 취향, 선호 장르, 관심 주제 등을 입력하면 사서가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추천 도서를 안내한다. 이는 다소 아날로그적인 방식일 수 있으나, 양방향 소통을 통한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서관과 이용자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축적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도서 큐레이션으로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국회도서관 이용자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맞춤형 큐레이션은 이용자에게 더욱 유용한 서비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의 정보이용내역, 선호도, 관심 키워드 등을 반영하고,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인화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면 이용자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국회도서관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2.3.4 데이터베이스 활용 사례

국내외 주요 지식정보자원 기관들은 기관만의 고유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검색·분석·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검색 및 시각화 서비스와 리걸테크 기반의 법률 데이터베이스 활용의 두 가지 세부 유형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이 벤치마킹하기 적합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 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검색 및 시각화 서비스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인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전종합DB는 고전번역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방대한 규모의 한문고전 문헌 자료를 제공하는 종합 데이터베이스이다. 고전번역서 서지정보 검색, 고전번역서 각주정보 검색, 인물관계정보, 고전용어 시소러스 등 한국고전종합DB만의 특화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가 소장자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한국고전종합DB의 '인물관계정보'는 한국문집총간 해제,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 고전번역서 각주정보 등에 수록된 역사 인물의 기본정보와 관계 정보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한 서비스이다. 인물에 대한 혈연, 혼맥, 문인, 교유 등의 관계와 얽힌 사건을 네트워크 선으로 표시하고, 입체적 인물관계망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인물과 사건 간의 연관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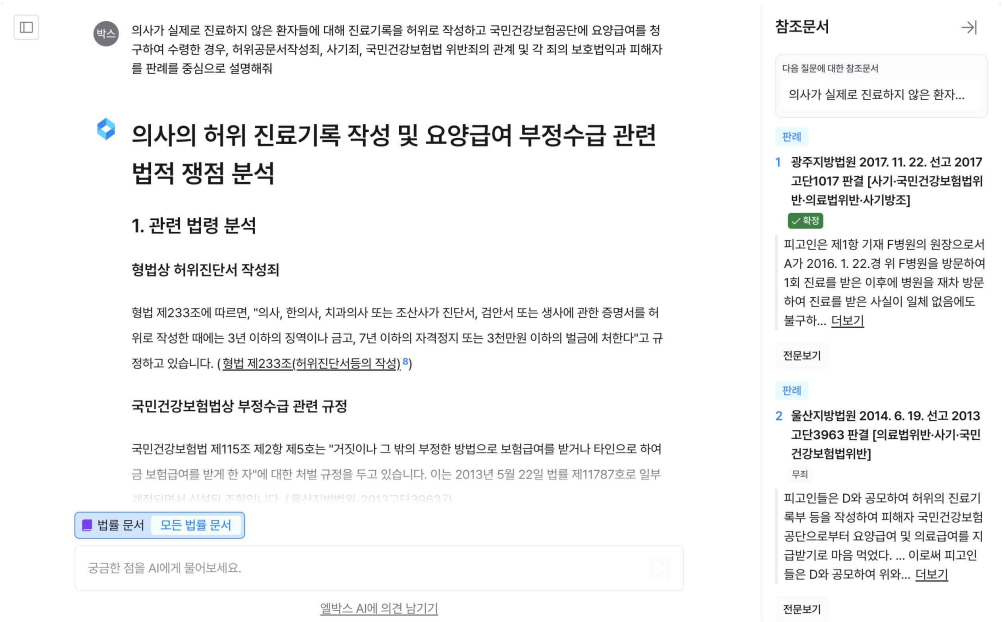
<그림 19> 한국고전종합DB 인물관계정보 예시 화면

한국고전종합DB의 ‘고전용어 시소러스’는 한국문집총간을 기반으로 고전문헌에 등장하는 전문·고유 용어를 정리한 사전이다. 과거 여러 형태로 표현했던 용어들을 표제어 기준으로 통제어(우선어), 유의어, 관련어, 상하위어 등의 관계를 규정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정보검색을 제공한다. 특정 용어를 검색하면 용어 정의는 물론 해당 용어가 사용된 시대, 지역, 유형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사형 관계도를 통해 용어와 관련된 어휘들을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그림 20> 한국고전종합DB의 고전용어 시소러스 예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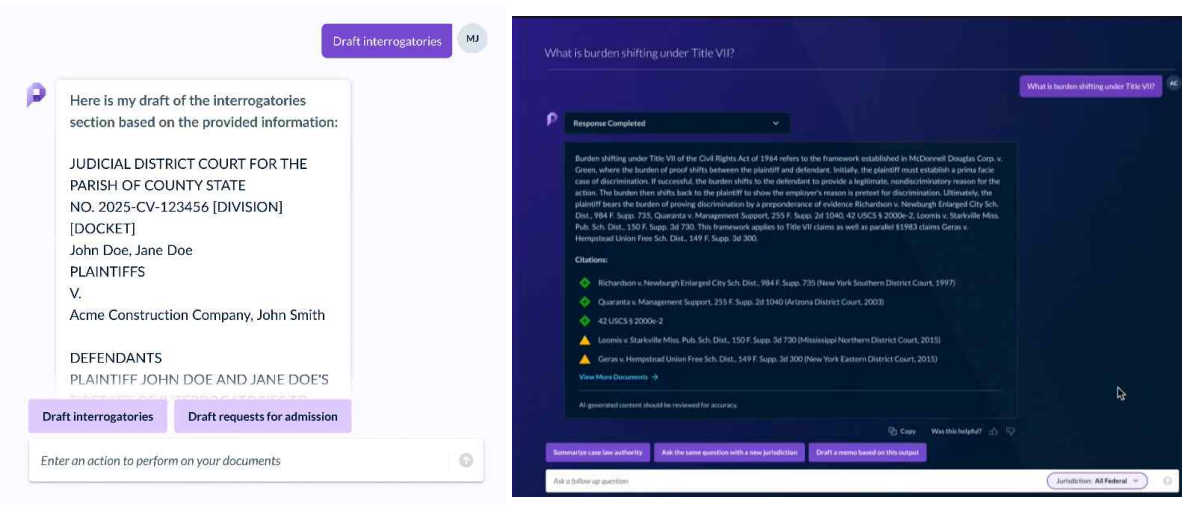
## 나. 리걸테크 기반의 법률 데이터베이스 활용

LBOX(엘박스)는 국내 최대 판례 검색 서비스로 법률전문가용 AI 서비스인 ‘LBOX AI’를 제공하고 있다. LBOX AI는 방대한 법률·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직관적인 검색 시스템으로 이용자의 질의 의도를 분석하고 필요한 문서를 찾아 적절한 답변을 생성한다. 이용자는 자연어로 질문할 수 있으며, LBOX가 보유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시한다. LBOX AI는 판례 검색 서비스 외에도 AI를 활용한 법률 문서 작성과 문서 분석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길고 복잡한 문서의 요지를 분석하여 시간순으로 정리하거나, 사실관계, 쟁점, 주장 등을 파악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업무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그림 21> LBOX AI 예시 화면

LexisNexis(렉시스넥시스)는 대표적인 상업 법률 데이터베이스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법률 정보와 최신 이슈 등을 제공한다. 법률, 규제, 비지니스 정보등 전세계 법령이나 판례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널리 사용되고 있다. Lexis는 'Lexis+ AI'를 통해 출처가 분명한 법률정보를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률 초안 작성, 검색 및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인 맞춤형 법률 AI 비서인 Protege와 Lexis의 콘텐츠를 결합하여 효과적인 법률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22> LexisNexis의 AI를 활용한 법률 초안작성

사례 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정보제공 기관들이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라 할 수 있다. 특화된 자원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일수록 다양한 시각화 방안을 통해 이용자에게 새로운 접근점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입법정보라는 특화된 자원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회도서관의 지식정보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3장 국회도서관 운영 현황

## 3.1 환경변화와 국회도서관의 대응

국회도서관은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지식정보 경쟁력을 책임지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맞추어 국회도서관에게 요구되는 역할 또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국가 지식정보 중추로서의 국회도서관 위상 확립을 위해 지식자원의 체계적 수집・관리・보존 등에 대한 국회도서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및 정보격차 해소 기여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전문화되고 이용 행태가 다양해지면서 개인 맞춤, 이용 편의성 증대 등과 같은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강화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도서관의 외부 환경 측면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술・정보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AI・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이 촉구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융합・활용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보다 고도화된 지식서비스가 국회도서관에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국회도서관은 관련 전략 및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은 1) 기반구축 단계, 2) 디지털전환 단계, 3) AI・데이터 기반 서비스 고도화 단계의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 과제는 도서관 기초역량 강화, 효율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정보자원 관리체계의 구축과 서비스 효율성 평가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 초기 검토와 제1분관(부산관)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직확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국회도서관, 2015; 2016; 2017a; 2018a; 2018b). 그 다음 시기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며 국회도서관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률정보, 의정지원, 전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을 시도하였고, 제2분관 건립 검토와 부산관 서비스 구체화 등 분관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국회도서관, 2020a; 2020b; 2020d; 2021a; 2021b; 2021c; 2021d). 최근의 과제는 AI 기반 지식검색과 의정서비스 모델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의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 동시에 데이터 구조화, 세종관 건립 논의 등의 연구를 통해 기술 심화와 분관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국회도서관, 2022a; 2022e; 2023a; 2023b; 2023c; 2024c; 2024d).

이러한 지속적 노력의 결과로 현재 국회도서관은 중대한 변화의 전환점에 서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현재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이전 대상이다. 또한 국가 지식정보 역량 강화와 지방의회 및 지역연구자들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고, 지역 정

보격차 해소를 위한 호남지역 국회광주도서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국회도서관, 2024a). 이에 더해, 제22대 국회 핵심사업으로 ‘국회기록원 설립’이 제안되면서 국회기록원 독립 역시 논의중에 있다으며, 국회도서관 정보관리국에서는 선제적 AI 기술 도입과 활용을 위한 조직 신설이, 정보봉사국에서는 장서관리 업무를 전담할 장서관리과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 3.1.1 의정정보 지원을 위한 회답서비스 운영

국회도서관의 핵심역할은 법제적 근거를 통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국회법 제22조는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법 제1조는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도서관법 제2조는 도서관이 의회·법률의 조사·회답·제공 등 국회 지원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회답서비스가 국회도서관의 법정 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회답내규」, 「국회도서관 직제 시행규칙」 등 내부 규정을 통해 회답절차와 담당부서 운영의 구체적 근거로 체계화 되어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 회답서비스는 국회도서관만의 고유업무로 자리잡고 있다. 회답서비스는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내 입법관련 기관(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즉시성 높은 질의에 사실기반·중립적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핵심 기능으로, 사실검증, 자료조사, 국내외 입법례 탐색을 포함하는 전문 정보서비스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회답은 정보의 수집에서 정리, 보존, 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결합한 산출물로, 단순한 자료제공을 넘어 입법활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로 기능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회답서비스와 유사한 의정정보 지원 서비스는 해외 주요국 의회도서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일반보고서를 2018년부터 Congress.gov에서 공개하는 한편, 개별의원 맞춤형 질의·메모랜덤 등은 기밀관계를 유지하는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하원도서관은 의원 기밀요청 서비스(Confidential Request Service for MPs)를 제공하며, Research Briefings, Debate Packs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캐나다 의회도서관은 연구·참고서비스를 통해 의원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HillNotes, HillStudies, Legislative Summaries 등 다양한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조사 및 입법고사국은 국회의원 의뢰에 기반한 ‘依頼調査(의뢰조사)’ 체계를 운영하여 접수-배정-회신-축적의 전주기 프로세스를 제도화 하고 있다.

이러한 고유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국회도서관을 둘러싼 입법지원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세종시 소재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서비스 확장 및 협력 역할이 기대되는 한편,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국회의원의 자료 접근성 저하와 원격 이용의 제약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국회도서관, 2024a; 2024c). 또한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데이터 시각화 등 새로운 정보제공 방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 현안에 대한 적시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과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국회도서관, 2022b; 2024c). 변화하는 입법환경 속에서 국회도서관의 회답서비스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국회도서관의 고유업무인 회답서비스는 지속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회답서비스의 핵심 목표는 국회의원에게 전문적인 사실 정보를 시의적절한 형식으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자도서관 학술DB, 자체 외국법률 DB, AI 시사분석 '아르고스'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의회·법률정보 회답서비스는 여러 측면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방대한 기초자료와 정보 인프라 측면에서는 70여 년간 축적된 860만 장서와 4억 면의 원문 DB 등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공공기관·싱크탱크 정책자료 등 신뢰도 높은 웹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더해 AI 시사분석 '아르고스'를 활용한 융합형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그 효용성을 높이고 있다. 높은 신뢰성과 정확성 면에서는 데이터 관리 전문 의회 사서의 검증을 거친 신뢰도 높은 사실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만족도 조사 결과 국회의원실에서 '신뢰성 높은 정보'. '명확한 사실 자료'가 핵심 강점으로 평가되었다. 서비스 규모와 속도 측면에서는 연간 6천여 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그림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24년 기준 회답 건수가 전년 대비 12.9% 증가하는 등 최다·최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속도를 단축하고 있다.

<그림 23> 연도별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률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표 8>과 같이 이용자 요구에 맞춘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의 공개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해 회답 DB를 구축하여 외국 정책·입법례 14,420건을 내부 공개하고 번역자료 3,797건을 대국민 공개하는 등 활용도를 증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2026년 오픈 예정인 '국회빅데이터플랫폼'의 핵심 데이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표 8> 국회도서관 회답서비스 제공 형식의 다양성

| 구분 | | 내용 |
|---|---|---|
| 사실조사형 | 정책 | 현황, 통계, 사례, 각계의견, 언론보도, 입법경과, 판례, 의안 등 객관적 사실정보 |
| | 입법 | |
| 즉답·목록형 | 원문 | 파일, 기사링크 |
| | 자료 | 참고정보원 |
| 번역형 | 정책 | 싱크탱크 보고서, 외신보도 |
| | 법률 | 외국법령 |
| 빅데이터 분석형 | | 지능형 의정정보서비스 아르고스 활용 |

회답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과 고도화 필요성이 입법지원 관련 국회도서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회답 품질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회답요구 증가 및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차별화된 고품질 회답을 제공하고, 분산된 정보원의 검색 기능을 통합하며, 검색 결과의 최신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AI 챗봇 등 지능형 질의응답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AI 보좌관' 연구를 통해 전문가 DB와 연계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법령자료에 특화된 '국가전략정보플랫폼'과 같은 통합 정보체계 구축이 제안되었다(국회도서관, 2019b; 2020b; 2021c; 2022b; 2023b).

의정정보 지원과 관련하여 정책지원 및 의회정보서비스 전략 수립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의회 및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회도서관의 입법지원 및 관련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해당 연구에서 도출된 국회도서관 현황 및 개선 사항으로는 증거기반 입법을 뒷받침할 객관적·정량적 자료 부족, 국회도서관 데이터셋 서비스 개선 필요,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 시스템 체계화 등이 확인되었다. 제안된 전략으로는 증거기반 입법 및 입법평가 지원 강화, 입법통계서비스 구축, 데이터 기반 'AI 의회 보좌관' 서비스 도입 추진,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구축 및 의정활동 기록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국회도서관, 2020a; 2021c; 2022a; 2022b; 2023d). 또한 서비스 평가 및 성과 분석 연구에서는 도서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탐구하며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증명을 통한 예산확보 및 이용자 인식 제고, 객관적 성과평가를 통한 실질적 서비스 개선 방안 모색, 도서관 핵심인력인 사서의 전문성과 역량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회도서관 서비스와 사서에 대한 다차원적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성과측정 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인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국회도서관, 2016; 2017b; 2020c).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최신의 지식정보에 바탕을 둔 입법·의정활동은 국회 역량의 증진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는 국가 지식정보의 핵심 인프라인 국회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적시에 적합한 정보를 국회의원 등에게 제공하는 회답 지원 서비스는 국회도서관만의 고유한 핵심 기능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단순한 자료제공 기관의 역할을 넘어 국가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 지식 플랫폼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회도서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은 입법부의 권위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 3.1.2 디지털전환 대응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

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국회도서관의 서비스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발전으로 증거 기반 입법 및 의사결정의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AI 상용화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국가전략정보플랫폼의 신속한 개발과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국회도서관, 2020a; 2022a). 또한 AI 윤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술혁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윤리 정책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국회도서관, 2022d). 아울러 미래지향적 도서관 서비스 추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기반 미래지향적 서비스 전략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통합을 통한 이용자 친화적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AI, 시각화 도구, 메타버스 등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국회도서관, 2019b; 2022d; 2024a; 2024c).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국회도서관의 AI 기반 서비스 구축 현황으로 정보관리국 데이터융합분석과가 주도하는 AI 시사분석 ‘아르고스’는 뉴스 및 소셜데이터를 분석하고 국회도서관의 자료 등 국회 내·외부자료와 융합하여 의정현안과 관련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기관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이슈키워드, 법률과 이슈. 정책과 이슈. 이시각 브리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정보실에서는 ‘입법과 통계’ DB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법률과 밀접한 통계데이터를 상임위원회별, 주제별, 법률별로 체계화해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는 2023년

1,065건, 2024년 508건의 신규 구축과 기구축 1,066건의 갱신을 통해 데이터 최신성과 완결성을 추구하며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객관적 근거자료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동시에 미래지향적 서비스 기반 확장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 사업은 다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빅데이터플랫폼’(AI국회)의 단계적 구축사업을 통해 AI 지능형 검색·분석 서비스를 위한 외국 입법례·정책사례 데이터셋을 구축할 예정이며, 정보관리국은 데이터 분석 및 AI 학습용 데이터셋인 복합서비스 데이터셋 구축사업을 통해 디지털 원문의 표·그림 등 기초데이터, 국회·지방의회 회의록 데이터셋,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학위자 관계망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부터 현재까지 입법·정책관련 용어 3,200어를 신규 구축하고, 기구축 용어 19,300어를 매년 정비하여 정보검색과 활용의 정확성을 높이는 언어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구축된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보관리국에서는 이용자 접점에서의 AI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통합 AI 챗봇 서비스를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국회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 모바일 웹페이지에 제공하여 실시간 문의에 대응하고 AI 100자 요약 및 자료요약서비스를 통해 방대한 원문자료의 핵심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용자 검색어의 다국어 자동번역 기능으로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자료를 포괄하는 글로벌 정보검색 환경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국가전략정보포털’에서는 2023년 개발, 2024년 고도화, 2025년 실시간 질의응답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는 단계적 발전을 통해 AI 기반 요약·번역 지능형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디지털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도서관의 일환으로 수행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중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 및 디지털 플랫폼 개발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탐색, AI 도입 전략 수립 등 디지털전환 시대 국회도서관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국회도서관, 2018a; 2020a; 2020b; 2022e; 2023c). 또한 기존 지식검색, 법률정보서비스 등에 AI·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고, AI 보좌관, 지능형 전자도서관 등 데이터 기반 신규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였다(국회도서관, 2021a; 2021c; 2022d; 2023d). 이에 더해 AI와 문화·예술을 융합한 전시 서비스 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의 기술 적용 또한 시도하였다(국회도서관, 2021d). 이러한 기술 탐색, 서비스 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 강화, 지식 구조화 등의 다각적 연구는 국회도서관이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식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디지털자원 수집 및 지식자원 관리 체계의 구축과 관련된 연구로, 디지털 정보자원인 메타데이터, 통계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국가 지식자산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입법지원을 위한 연속간행물, 통계, 의정활동기록물 등 다양한 디지털 자원의 망라적이고 체계적인 수집 방안을 연구했으며, 디지털 리포지토리 및 DB

구축, 메타데이터 품질관리, 자료 위계 및 지식정보 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국회도서관, 2015; 2022b; 2024b; 2024d). 또한 수집된 지식자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여 맞춤형·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성공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한 조직·인력 확충 및 법·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국회도서관, 2022a).

## 3.2 국회도서관 조직구조 및 인력 운영 현황

국회도서관은 설립 이후 조직 체계 정비와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입법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기획관리관실, 의회정보실, 법률정보실, 정보관리국, 정보봉사국, 국회기록보존소, 국회부산도서관으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는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회도서관의 조직 체계와 인력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국회도서관 조직 전체를 조망하여 기능별 부서 배치와 운영 체계를 개관하고, 미국 의회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영국·프랑스·독일 국립도서관 등 해외 주요 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조직 운영 방식의 특징과 차별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입법활동 지원, 자원관리·서비스, 대외협력·운영혁신, 기록물 보존 등 주요 기능별 부서 현황과 역할을 정리하고, 각 부서별 인력 규모를 통해 조직 역량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도서관 조직·인력 운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조직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3.2.1 국회도서관 및 유관기관 조직 현황

#### 1) 국회도서관 조직 현황

국회도서관은 현재 2실 4국 1관 22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부서는 입법지원을 위한 전문 정보서비스, 국가지식정보자원 관리, 기록보존, 대국민 정보서비스라는 국회도서관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주요 부서별 조직 현황은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국회도서관 조직도

기획관리관은 기획담당관실과 총무담당관실의 2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도서관의 전반적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은 국회도서관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종합하고 기관 운영 조정을 담당하는 기획 부서로 기획, 예산·감사, 법무·교육, 홍보, 국제협력의 5개 담당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국회도서관 기본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 수립·조정, 예산 편성·배정, 감사업무, 조직·정원관리 및 법규 제·개정, 직원연수 및 교육훈련, 대내외 홍보, 국제회의 및 대외협력, 입법활동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 홍보 업무 등으로 기관의 전략적 방향 설정과 효율적 운영기반을 제공한다. 총무담당관실은 국회도서관 운영기반을 제공하는 부서로 서무 관리, 인사, 경리 담당을 포함한다. 주요 업무는 정·현원 관리 및 인사 운영, 시설·청사 관리, 물품관리 등의 시설 운영, 예산집행·결산 등의 재정업무로 국회도서관의 안정적·효율적 운영환경을 지원한다. 기획담당관실의 전략적 기획과 홍보, 대외협력, 총무담당관실의 운영지원 등을 통해 기획관리관실은 국회도서관의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회정보실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고유부서로, 총 4개 과(정치행정정보과, 경제사회정보과, 국외정보과, 공공정책정보과)로 조직되어 과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치행정정보과는 의회정보서비스 기획·홍보, 정치·행정 분야의 의회정보회답 및 자료발간, 독도 관련 자료조사·발굴, 국회지방의회의 정포털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제사회정보과는 경제·사회 분야의 의회정보회답과 자료발간을 담당하고, 국외정보과는 국외자료의 조사·번역 제공 및 의회정보회답, 『최신외국정책정보』 등의 자료발간, 최신 국외정책과 번역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공공정책정보과는 국내외 정책·연구자료 수집, 국가전략정보포털 운영 등 국가전략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제공을 담당한다. 의회정보실은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과정, 정책 결정 과정에 필요한 포괄적이고도 전문적인 정보지원 체계를 구축·제공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정책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법률정보실의 경우, 4개 과(법률정보총괄과, 법률번역관리과, 외국법률정보과, 국내법률정보과)로 이루어져 입법활동에 필요한 법률전문 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법률정보총괄과는 법률정보서비스 기획·운영 및 홍보, 법률장서 개발, 법률정보센터·의원 열람실 운영·관리, 의회법률정보포털 운영, 법률정보기관 간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률번역관리과는 외국법률 번역, 외국법률번역DB 구축·제공으로 외국 법률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전문서비스를 담당한다. 외국법률정보과는 지역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국외법률정보회답, 최신 외국법률정보 조사·발간 등의 심층적 외국법률 정보서비스를 지원한다. 국내법률정보과는 국내법률정보회답, 『Data&Law』 발간, 입법과 통계 서비스 등 국내 법률분야와 관련한 종합적 정보관리와 서비스를 담당한다. 이와 같이 국내외 법률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다국어 번역서비스를 통해 법률정보실은 입법활동에 필요한 최신 법률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정보관리국은 전자정보정책과, 데이터융합분석과, 전자정보제작과, 정보기술개발과의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도서관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중심으로 디지털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첨단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자정보정책과는 학술지·학위논문·공공정책자료 등 원문DB 구축과 도서관 정보화 및 전자도서관 정책, 전자도서관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데이터융합분석과는 AI 시사분석 '아르고스' 개발·관리,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 등 지능형 정보분석 서비스를 담당한다. 전자정보제작과는 입법·정책·학술자료의 원문·초록DB 구축,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 등 디지털 콘텐츠 구축 업무를 수행하며, 정보기술개발과는 정보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무, 전산장비 및 보안시스템 운영 등 기술적 인프라를 담당한다. 이처럼 정보관리국은 전략적 기획, 지능형 분석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구축, 기술 인프라 지원을 연계하여 디지털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회 입법활동과 국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정보봉사국은 전통적인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로, 자료수집과, 자료조직과, 열람봉사과의 3개 과로 구성되어 자료수집부터 조직, 서비스 제공까지 도서관 운영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료수집과는 국내외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구입·납본, 웹DB 구독, 국회제출·생산자료 수집, 국제교환·기증을 통한 자료수집 등 체계적인 장서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자료조직과는 국내외 자료의 분류·목록 및 교정, 『금주의 서평』, 『금주의 신간』 발간, 목차·표지이미지 DB 구축 등 전문적 자료조직 업무를 수행한다. 열람봉사과는 각종 자료실 운영, 국내외 상호대차서비스, 지식문화프로그램 운영, 서고관리 등 종합적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업무 수행을 통해 정보봉사국은 체계적 장서개발, 전문적 자료 정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바탕으로 전통적 도서관 가치와 현대적 정보요구를 균형있게 충족시키는 종합적 도서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국회의원과 국민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의 귀중한 역사와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기록정책과와 기록관리과 2개 과로 구성되어 기록물의 정책수립부터 실직적 관리까지 기록관리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기록정책과는 기록물관리 정책기획, 국회기록물관리 관련 법규 제·개정, 국회기록물 공개 및 열람서비스, 기록콘텐츠 개발 등 기록관리의 정책적 방향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기록관리과는 기록물 평가·폐기, 기록물 DB 구축, 국회기록물통합관리시스템 운용, 기록물 보존 및 서고관리, 구술채록 및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 수집·정리 등 기록물의 실질적 관리와 보존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국회기록보존소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무적 관리·보존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국회의 역사적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하는 전문적 기록관리체계를 통해 국회의 역사적 유산을 후세에 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부산도서관은 국회도서관의 분산보존과 지역특화 서비스를 담당하는 분관으로, 기획관리과, 정보관리과, 정보서비스과의 3개 과로 구성되어 수도권에 집중된 의회도서관 기능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지역특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획관리과는 국회부산도서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대외협력 및 홍보, 예산・결산 및 청사관리, 디지털보존실 운영 등 전략적 운영과 대외관계를 총괄한다. 정보관리과는 국내외 자료 구입 및 특화자료 수집, 본관 장서 이관, 자료 분류・목록・교정 등 특화 장서구축과 분산보존 기능을 담당한다. 정보서비스과는 자료실 운영, 지방의회서비스 전시실 운영, 지식문화프로그램 등 이용자 및 지역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국회부산도서관은 전략적 기획, 특화 장서구축과 분산보존,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영남권 정보서비스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정보접근 불균형 해소와 전국적 정보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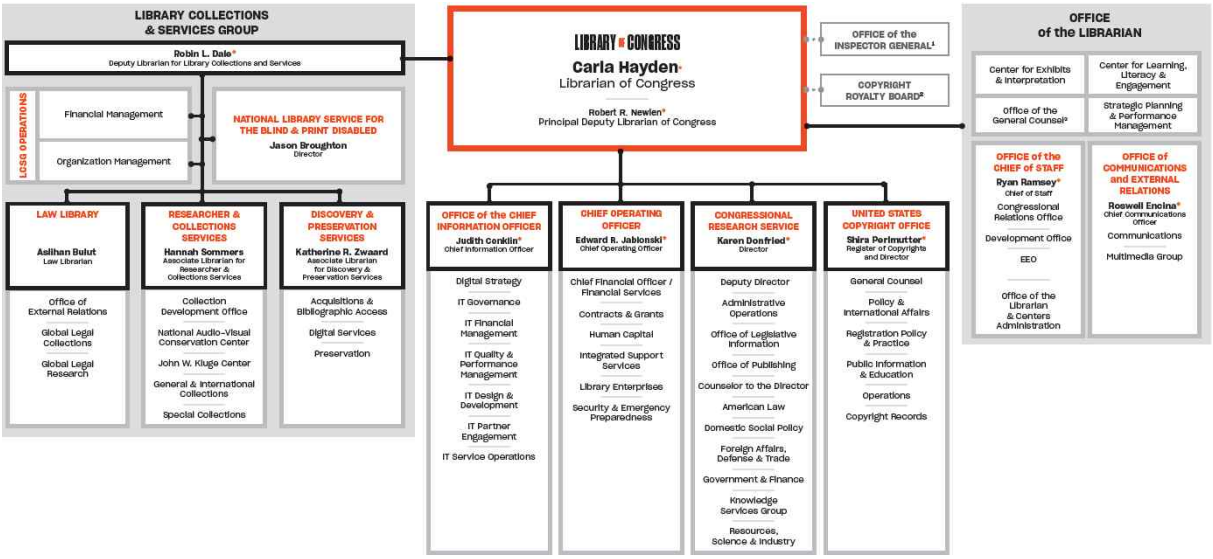
### 2) 유관기관 조직 현황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관의 목표와 역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은 그 구성과 기능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입법지원, 국가지식정보자원 관리 등의 국회도서관 핵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을 위해 우선 해외 유관기관인 미국 의회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영국・프랑스・독일 국립도서관의 조직구성과 특징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회도서관과 해외 유관기관 간 조직체계 차별점 및 향후 조직・기능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 및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① 미국 의회도서관

미국 의회도서관은 관장과 수석부관장, 도서관 컬렉션 및 서비스 그룹 부관장이 주요 업무를 분담하는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조직을 살펴보면 먼저 도서관 컬렉션・서비스 그룹(Library Collections and Services Groups, LCSG)과 그 아래의 법률도서관, 연구자・컬렉션 서비스, 발굴 및 보존 서비스, 시각 및 인쇄물장애인을 위한 국립도서관서비스(NLS)가 핵심부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고정보책임자실(Office of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OCIO), 의회조사국(CRS), 미국 저작권청(USCO), 최고운영책임자실(Office of the Chief Operating Officer, COO), 의회도서관장실, 커뮤니케이션・대외협력실 등이 관장 직속 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의회조사국은 의회의 입법・정책 분석을 전담하며, 저작권청은 저작권 등록과 정책을 담당하고, 최고정보책임자실은 IT 전략과 디지털 서비스를 전담한다. 또한 감사관실과 저작권료 위원회가 별도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조직 구성은 <그림 25>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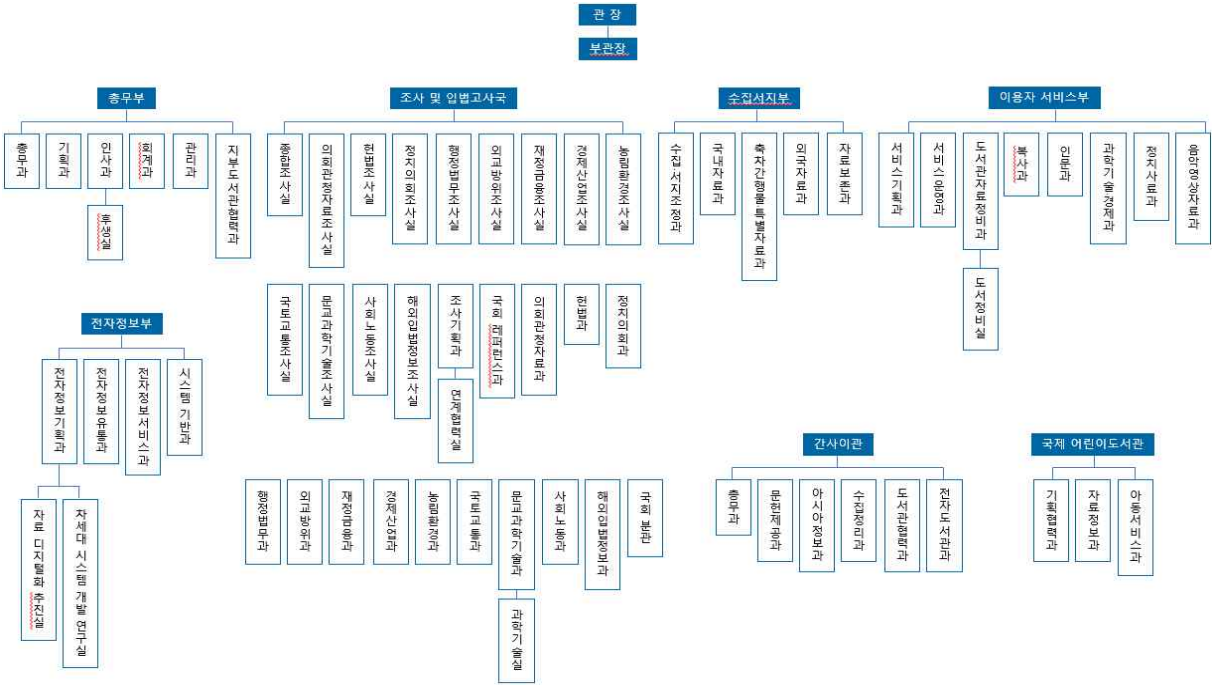

<그림 25> 미국 의회도서관 조직도

미국 의회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의회조사국과 저작권청 등 고도로 전문화된 관장 직속 부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회조사국은 의회의 입법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기능하며, 저작권청은 국가 저작권 정책과 등록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최고정보책임자실을 별도로 두어 의회도서관의 디지털전환과 IT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각·인쇄물 장애인을 위한 특수서비스 기관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의회도서관은 전통적 도서관 기능에 더해 입법지원, 저작권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적 국가기관의 특성을 보여준다.

②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관장과 부관장의 최고 운영진 체계하에 총무부, 조사 및 입법고사국, 수집서지부, 이용자서비스부, 전자정보부의 5개 핵심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관(도쿄) 외에 간사이관과 국제어린이도서관의 2개 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독자적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본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특히 조사 및 입법고사국은 헌법, 정치의회, 행정법무, 외교방위, 경제산업, 농림환경, 국토교통, 문교과학기술, 사회노동, 해외입법정보 등 세분화된 조사실과 과를 운영하여 입법정보 조사와 국정과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자정보부는 전자정보 기획부터 유통, 서비스, 시스템 개발 연구까지 디지털 정보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차세대 시스템 개발 연구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조직구성은 <그림 2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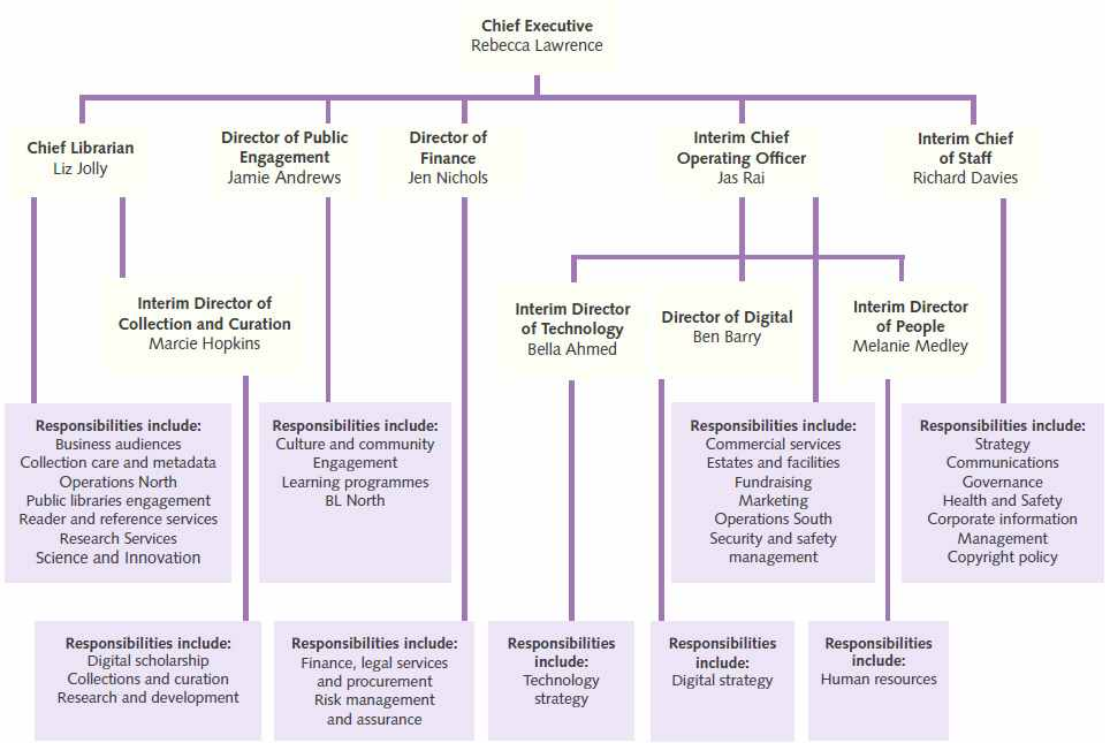

<그림 26>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직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특징으로는 입법부 소속 도서관으로서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제별로 고도로 세분화된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제어린이도서관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대상 자료와 서비스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와 최고재판소에 27개 지부 도서관을 설치하여 전국적인 정보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중앙집중형 조직과 분산형 네트워크를 결합한 독특한 운영방식을 보여준다.

③ 영국 국립도서관

영국 국립도서관은 관장(Chief Executive) 아래 9명의 국장급(Director) 책임자들이 주요 부문을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중 수석 사서(Chief Librarian)는 장서관리 및 메타데이터, 이용자 서비스, 연구 서비스, 과학 및 혁신 등 도서관 고유업무를 전문적으로 총괄하며, 대외협력국장(Director of Public Engagement)은 문화 및 지역사회 참여와 학습 프로그램을 전담한다. 재무국장(Director of Finance)은 재무, 법률 서비스, 리스크 관리를,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수익사업, 시설 관리, 마케팅, 보안 등 도서관 운영 인프라를 총괄한다. 주목할 점은 기술국장(Director of Technology)과 디지털국장(Director of Digital)을 각각 두어 기술 전략과 디지털 전략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획국장(Chief of Staff)이 조직전략,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저작권 정책 등을 담당해 전략적 운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일부 직책에서는 임시 체계를 병행하고 있어 조직

개편이나 인사 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립도서관의 조직 구성은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영국 국립도서관 조직도

영국 국립도서관의 특징은 기관 운영의 총책임자인 관장(Chief Executive)과 도서관 업무 전담 책임자인 수석 사서(Chief Librarian)를 분리하여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이다. 수석 사서가 장서부터 디지털 연구까지 도서관 전문 영역을 폭넓게 담당하면서도 대중 참여와 수익사업을 별개 부문으로 두어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이루는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다.

④ 프랑스 국립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관장과 사무총장, 3명의 부총장으로 구성된 최고 운영진 아래 운영되며, 이사회와 학술위원회 등의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조직은 크게 컬렉션 부서(Direction des Collections), 서비스 및 네트워크 부서(Direction des Services et des réseaux), 행정 및 인사 부서(Direction de l’ Administration et du personnel)의 3개 핵심부서와 전략 및 연구부서, 유럽 및 국제관계 부서, 문화 및 박물관 개발 부서 등의 전문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컬렉션 부서는 음악, 연극, 지도 및 도면, 판화 및 사진, 고문서, 화폐 및 고대유물 등 형태별 전문과와 철학・역사・인문과학, 법률・경제・정치, 과학기술, 문학예술 등 주제별 부서를 운영하여 자료의 형태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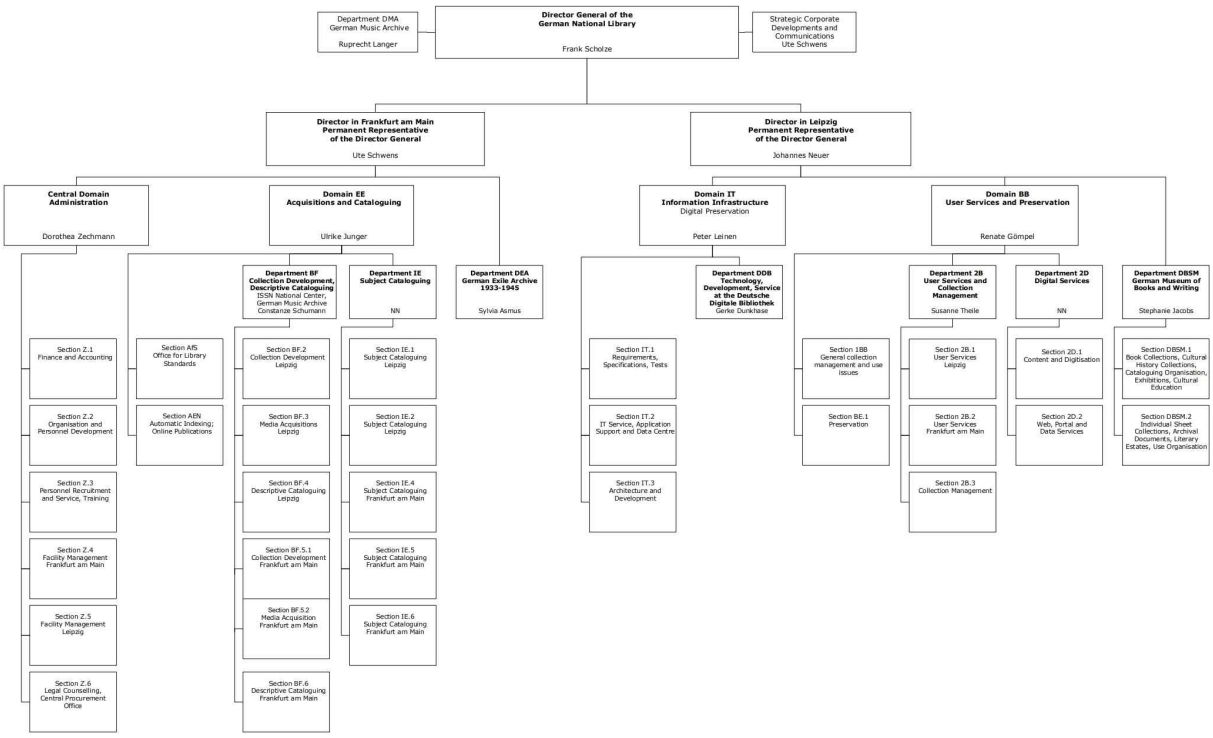
제에 따라 세분화된 조직구조를 보인다. 또한 아스날 도서관, 오페라 도서관·박물관 등 산하 전문기관들을 포괄하여 운영 중에 있다. 서비스 및 네트워크 부서는 메타데이터, 보존, 협력, 납본, 디지털서비스, 정보시스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디지털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을 별도의 부서로 운영해 기술 전문성을 강화한다. 행정 및 인사부서는 법무, 예산, 기술지원 등 도서관 운영을 뒷받침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조직구성은 <그림 28>과 같다.

<그림 28> 프랑스 국립도서관 조직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자료의 형태별·주제별로 고도로 세분화된 전문부서 체계와 박물관, 전시, 출판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문화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인다. 유럽 및 국제관계를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학술위원회를 두어 체계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다.

⑤ 독일 국립도서관

독일 국립도서관은 관장 아래 프랑크푸르트관과 라이프치히관에 각각 부관장을 둔 이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조직은 행정 영역(Central Domain), 수집 및 목록 영역(Domain EE), 정보인프라 영역(Domain IT), 이용자 서비스 및 보존 영역(Domain BB)의 4개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 아래 기능별 부서와 섹션들이 배치되어 있다. 행정 영역은 재무, 인사, 시설관리, 법률 자문 등을 담당하고 수집 및 목록 영역은 컬렉션 개발과 기술목록, 주제목록 작성을 프랑크푸르트와 라이프치히에서 나누어 담당한다. 정보인프라 영역은 IT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디지털 보존을 총괄하며, 특히 독일 디지털도서관의 기술개발과 서비스를 전담하는 부서(Department DDB)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 서비스 및 보존 영역은 이용자 서비스, 컬렉션 관리, 디지털 서비스, 물리적 보존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독일 망명자 아카이브(Department DEA), 독일 도서·저술 박물관(Department DBSM), 독일 음악 아카이브(Department DMA) 등 전문 특화 부서들도 운영되고 있다. 독일 국립도서관의 조직 구성은 <그림 29>와 같다.




<그림 29> 독일 국립도서관 조직도

독일 국립도서관의 주요 특징은 물리적 보존과 디지털 보존을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담당하는 분화된 보존 체계이다. 또한 자동색인, 온라인 출판물 처리, 디지털 장기보존에 이르는 디지털 전주기 업무를 체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를 위한 전담 부서를 별도로 두어 국가적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프랑크푸르트와 라이프치히 두 관이 기능을 분담하면서도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보인다.

### 3.2.2 기능별 조직 운영 현황

국회도서관의 조직 기능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부서별 업무를 기능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국회도서관이 1) 국회 입법활동 지원, 2) 지식자원 관리 및 활용 선도, 3) 대외협력 및 운영혁신을 통한 조직가치 증대, 4) 기록물 관리 및 보존이라는 네 가지 핵심 기능을 축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각 기능별 세부내용과 해외 유사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회 입법활동 지원 기능은 국회 활동을 위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회답 지원 서비스는 의회정보실과 법률정보실에서 담당하는 국회도서관의 고유기능으로, 국회의원 및 입법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의회정보조사회답을 작성하고 회답시스템을 관리하여 입법, 정책, 국정현안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자료 및 정보제공은 정보봉사국과 정보관리국이 담당하며, 자료열람 및 정보 검색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입법정보 포털 서비스의 경우 의회정보실에서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을, 법률정보실에서는 ‘의회법률정보포털’을 운영하며 외국 입법·정책사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관리국은 ‘의회법률정보포털’의 서비스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전략정보포털’ 시스템을 개발·유지관리한다. 입법과 통계 분야에서는 법률정보실이 주요 통계 대시보드 등의 콘텐츠 구축·관리와 통계데이터 조사를 담당하고, 정보관리국이 ‘입법과 통계’ 시스템 및 지능형 법률검색 서비스를 개발·관리하여 입법 관련 통계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AI 기반 서비스 확대 분야에서는 정보관리국이 AI 시사분석 ‘아르고스’ 개발·운영과 통합 AI 챗봇 개발·유지관리를 주도하며, 의회정보실에서는 AI 요약·번역 서비스를 관리한다.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정보관리국이 전담하여 ‘AI시사정보브리핑 ARGOS’ ‘VIEW’ 등 데이터 분석서비스 기획·운영, ‘팩트북’ 입법 데이터 분석 지원, 국회도서관 빅데이터 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시각화 및 인포그래픽 제작 지원을 통해 복잡한 입법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도서관 주요 부서의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입법활동 지원 기능 - 국회도서관 주요부서

| 세부 기능 | 주 수행 부서 | 주요 역할 |
|---|---|---|
| **회답 지원 서비스** | 의회정보실, 법률정보실 | - 의회정보조사회답 작성 및 회답시스템 관리<br>- 정책연구보고서, 법률정보제공 서비스 |
| **자료 및 서비스 제공** | 정보봉사국, 정보관리국 | - 자료열람 및 정보 검색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 정보서비스 |
| **입법정보 포털 서비스** | 의회정보실, 법률정보실, 정보관리국 | -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 운영<br>- ‘의회법률정보포털’ 운영 및 시스템 통합 운영<br>- ‘국가전략정보포털’ 시스템 개발·유지 관리 |
| **입법 통계** | 법률정보실, 정보관리국 | - 주요 통계 대시보드 콘텐츠 구축·관리<br>- 통계데이터 조사 및 법률정보자료 검색 서비스 제공<br>- ‘입법과 통계’ 시스템 및 지능형 법률검색 서비스 개발·관리 |
| **AI 기반 서비스 확대** | 정보관리국, 의회정보실 | - AI 시사분석 ‘아르고스’ 개발·운영<br>- 통합 AI 챗봇 개발·유지 관리<br>- AI 요약·번역 서비스 관리 |
| **데이터 분석 서비스** | 정보관리국 | - ‘AI 시사정보브리핑 ARGOS’ ‘VIEW’ 등 데이터 분석서비스 기획·운영<br>- ‘팩트북’ 입법데이터 분석 지원<br>- 국회도서관 빅데이터 연구센터 운영<br>- 데이터 시각화 및 인포그래픽 제작 지원 |

해외 주요국의 유관기관들도 이와 유사한 입법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들이 확인된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조사 및 입법고사국은 의원을 대상으로 한 입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분석·평가와 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입법준비를 위한 의안 기초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의회조사국(CRS)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을 전담 지원하며, 입법과정의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하고 주요 정책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우 전문 분야별 세분화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저작권청을 통해 국가 저작권법 관리와 국내외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의회자문을 제공하며, 저작권법 및 정책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회의 저작권 검토 청문회에 참여한다. 또한 법률도서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자료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대법원·법원·행정기관뿐 아니라 법조계·학계·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연구·분석·참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자료 컬렉션의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입법활동 지원과 관련된 해외 유사기관의 조직 현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입법활동 지원 기능 - 해외 유사기관 주요부서

| 세부 기능 | 기관명 | 주 수행 부서 | 주요 역할 |
|---|---|---|---|
| **입법 관련 자료 수집・분석**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 조사 및 입법고사국 | - 의원 대상 입법지원 서비스 제공<br>- 법률안 및 기타 안건 분석・평가 및 자료 수집・분석<br>- 입법준비 위한 의안 기초 준비 |
| **입법과정 전 단계 지원 및 주요 정책 연구** | 미국 의회도서관 | 의회조사국 (CRS) | -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전담 지원<br>- 입법과정 전 단계 지원<br>- 주요 정책문제 보고서 작성<br>- 전문가 의회 증언 지원 |
| **저작권법 관련 지원** | 미국 의회도서관 | 미국 저작권청 | - 국가 저작권법 관리<br>- 국내외 저작권 문제 의회 자문<br>- 저작권법 및 정책 전문지식 제공<br>- 의회 저작권 검토 청문회 참여 |
| **법률 연구・분석・참고서비스** | 미국 의회도서관 | 미국 의회 법률도서관 | - 세계 최대규모 법률자료 컬렉션 보유<br>- 의회・대법원・법원・행정기관・법조계・학계・일반대중 대상 서비스 제공<br>- 연구・분석・참고서비스 제공<br>- 법률자료 컬렉션 개발・관리 담당 |

국회도서관은 회답 지원 서비스부터 AI 기반 데이터 분석에 이르는 포괄적 입법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일본, 미국 의회도서관과 같이 의원 대상 정보서비스 및 법률정보의 제공을 기본 기능으로 가짐과 동시에 AI시사분석 서비스와 빅데이터 센터 운영, 데이터 시각화 등의 서비스 고도화에도 힘쓰고 있다. 다양하며 꾸준히 발전 중인 입법지원 기능 현황은 국회도서관이 국가 입법과정에서 고유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지식자원 관리 및 활용 선도 기능으로, 국회도서관이 국가지식정보체계의 구심점이 되며 지식자원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지식자원을 총괄하고 국내외 정보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납본을 관리하며, 인쇄・디지털 자원의 영구적 보존과 전문적 수장 관리 등을 담당한다.

자료수집 영역은 정보봉사국에서 국내외 자료, 특수자료, 비도서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구입과 납본을 통한 기본적 자료확보 및 국회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전세계 기관과의 교환・기증・기탁을 통한 국제적 자료수집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관련 자료는 특히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정감사, 청문회, 임시회 제출자료 등을 수집하고 국회 생산자료와 의원정책자료, 위원회 및 회관 내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자료관리 영역에서는 정보봉사국이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각각에 대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분류·목록·교정을 실시하고, 비도서 자료와 온라인 납본까지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메타데이터 구축은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제작과가 국내 공공정책정보 디지털자료 메타데이터 작성과 학위논문 메타데이터 입력사업을 관리하며, 학술지 및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 DB 구축을 통해 검색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디지털전환 및 데이터 혁신은 정보관리국의 핵심 업무로, 국회전자도서관 시스템 고도화 및 DB 구축·운영과 데이터 기반 지능형 플랫폼 운영 및 서비스 개발을 수행한다. 또한 국가서지 작성·배포와 메타데이터 표준 준수를 통해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고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지식정보체계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 지식자원 관리 및 활용 선도를 위한 국회도서관 주요 부서의 현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지식자원 관리 및 활용 선도 기능 - 국회도서관 주요부서

| 세부 기능 | 주 수행 부서 | 주요 역할 |
|---|---|---|
| **자료수집** | 정보봉사국 | - 국내, 해외, 특수자료 수집<br>- 국회 관련 자료 체계 관리<br>- 국제교환, 기증, 기탁 통한 자료수집 네트워크 운영 |
| **자료관리** | 정보봉사국 | - 분류·목록·교정 수행 및 관련 용역업무 관리<br>- 온라인 납본자료 관리 |
| **메타데이터 구축** | 정보관리국<br>전자정보제작과 | - 국내 공공정책정보 디지털자료 메타데이터 작성<br>- 학위논문 메타데이터 입력사업 관리<br>- 학술지 및 간행물 기사색인 DB 구축사업 관리 |
| **데이터 혁신** | 정보관리국 | - 국회전자도서관 시스템 고도화 및 DB 구축·운영<br>- 데이터 기반 지능형 플랫폼 운영·서비스 개발<br>-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상호운용성 추진 |

해외 주요국 국립도서관 역시 유사한 지식자원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수집서지부와 도서관자료정비과를 통해 자료수집·정리업무를 담당하며, 전자정보부에서 디지털화와 전자정보서비스를 전담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서비스 및 네트워크 본부에서 메타데이터 관리와 디지털콘텐츠 관리를 수행하고, 컬렉션 부서에서 지도·도면, 판화·사진, 고문서, 음악, 멀티미디어 등 자료 형태별 세분화된 전문관리를 담당한다. 독일 국립도서관은 IE 부서에서 자동색인과 온라인 출판물 관리를, BF 부서에서 컬렉션 개발과 기술목록 작성을 수행하며, 미국 의회도서관과 영

국 국립도서관도 각각 전담부서를 통해 컬렉션 개발과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식자원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해외 유사기관의 조직 현황은 <표 12>와 같다.

<표 12> 지식자원 관리 및 활용 선도 기능 - 해외 유사기관 주요부서

| 세부 기능 | 기관명 | 주 수행 부서 | 주요 역할 |
|---|---|---|---|
| **자료수집**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 수입서지부, 도서관자료정비과 간사이관-문헌제공과 국제어린이도서관-자료정보과 | - 자료 수집・정리 업무<br>- 도서관 자료정비 |
| **디지털 자원 관리**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 전자정보부 | -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br>- 전자정보서비스 기획 및 제공 |
| | 프랑스 국립도서관 | 서비스 및 네트워크 부서 | - 정보조직 및 메타데이터 관리<br>- 디지털화 및 디지털콘텐츠 관리 |
| | 독일 국립도서관 | IE 부서, 정보인프라 디지털보존 영역 | - 자동색인, 온라인 출판물 관리<br>- IT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지원 및 데이터센터 |
| **컬렉션 개발・관리** | 미국 의회도서관 | 연구자 및 컬렉션 서비스(RCS) | - 컬렉션 개발 및 컨퍼런스 등 학술 행사 개최 |
| | 영국 국립도서관 | 컬렉션 및 큐레이션 담당 | - 컬렉션 관리 및 메타데이터<br>- 컬렉션 및 큐레이션 |
| | 프랑스 국립도서관 | 컬렉션 본부 | - 지도 및 도면과, 판화 및 사진과, 고문서과<br>- 화폐・메달・고대유물과, 음악과, 음향・영상・멀티미디어과 |
| | 독일 국립도서관 | BF 부서 | - 컬렉션개발, 매체수집, 기술목록 등 |

국회도서관의 지식자원 관리 및 활용 선도 기능은 자료수집부터 디지털혁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의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표준화와 지능형 플랫폼 운영을 통한 디지털 전환은 국가 지식정보체계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세 번째는 대외협력 및 운영혁신을 통한 조직가치 증대 기능이다. 협력 네트워크 확장은 의회정보실, 법률정보실, 정보관리국, 국회기록보존소, 국회부산도서관이 담당하며, 상호협력을 통한 자료공유와 이용 효율화,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회정보실은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와 협업하여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을 운영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과 국회와 지방의회 간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하였다. 또한 법률정보실은 한국법제연구원, 전국대학법학도서관 협의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법률정보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보관리국은 공공·대학·전문도서관과의 학술정보상호협력협정을 통해 자료의 활용과 공유범위를 확대하였다.

도서관 정보화 혁신은 정보관리국 주도로 도서관 정보화 기획 및 대외협력을 담당하고, AI 등 최신 기술을 도서관 서비스에 접목하며, 인공지능 관련 직원교육 개발과 챗봇 운영을 통해 조직 내 디지털 역량 강화와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대국민 서비스 강화는 기획관리관실, 정보관리국, 국회부산도서관이 담당하여 이용자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및 교육·홍보·문화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국민의 지식정보 이용 기회를 증대하고 있다. 특히 국회부산도서관을 통한 지역거점 특화 서비스 개발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내부역량 및 운영 효율화는 기획관리관실, 정보관리국, 국회부산도서관이 사서 역량 개발 지원과 도서관 운영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대외협력 및 운영혁신을 위한 조직가치 증대를 위한 국회도서관 주요 부서의 현황은 <표 13>과 같다.

<표 13> 대외협력 및 운영혁신을 위한 조직가치 증대 기능 - 국회도서관 주요부서

| 세부 기능 | 주 수행 부서 | 주요 역할 |
|---|---|---|
| **협력 네트워크 확장** | 의회정보실,<br>법률정보실,<br>정보관리국,<br>국회기록보존소,<br>국회부산도서관 | - 상호협력 통한 자료 공유·이용 효율화<br>- 문화·교육·행정 등 유관기관과 교류 및 협력 강화 |
| **도서관 정보화 혁신** | 정보관리국 | - 도서관 정보화 기획 및 대외협력 주도<br>- 최신기술 도서관 서비스 접목<br>- 인공지능 직원교육 개발 |
| **대국민 서비스 강화** | 기획관리관실,<br>정보관리국,<br>국회부산도서관 | - 보편적 접근성 보장 및 교육·홍보·문화 프로그램 확대<br>- 지역거점 특화 서비스 개발 |
| **국회도서관 내부역량 및 운영 효율화** | 기획관리관실,<br>정보관리국,<br>국회부산도서관 | - 사서 역량 개발 지원<br>- 도서관 운영 시스템 효율성 제고 |

해외 유사기관 역시 대외협력 및 운영혁신 기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협력 네트워크 확장 분야에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총무부와 간사이관 총무과, 도서관협력과를 통해 지부도서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영국 국립도서관은 디지털부서와 컬렉션 및 큐레이션 부서에서 대외 마케팅 및 브랜드 관리,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협력을 담당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유럽 및 국제관계 부서와 협력과를 통해 국제기구 및 해외도서관과의 협력, 도서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운영혁신 분야에서는 미국 의회도서관이 최고운영책임자와 사서국을 통해 도서관 관련 사업관리와 균등고용기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영국 국립도서관은 인사부서에서 조직전략 수립 및 혁신, 조직운영체계 개선을 담당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전략 및 연구 부서에서 장기전략 수립 및 혁신을, 독일 국립도서관은 전략적 조직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조직 및 인사개발 부서를 통해 전략 수립과 조직발전, 조직혁신 및 인력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관 정보화 혁신 분야에서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최고정보책임자실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강화 기관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구축 및 유지, IT 보안과 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하며, 영국 국립도서관은 기술부서와 디지털부서를 통해 IT 혁신 및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국립도서관은 독일디지털도서관 기술·개발·서비스 부서를 통해 디지털혁신 협력을 전담하고 있다. 대외협력 및 운영혁신을 통한 조직가치 증대와 관련된 해외 유사기관의 조직 현황은 <표 14>와 같다.

<표 14> 대외협력 및 운영혁신을 위한 조직가치 증대 기능 - 해외 유사기관 주요부서

| 세부 기능 | 기관명 | 주 수행 부서 | 주요 역할 |
|---|---|---|---|
| 협력 네트워크 확장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 총무부 간사이관-총무과, 도서관협력과 | - 지부도서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 도모 |
| | 영국 국립도서관 | 디지털부서, 소장품 및 큐레이션 담당 부서 | - 대외 마케팅 및 브랜드 관리<br>-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협력 |
| | 프랑스 국립도서관 | 유럽 및 국제관계 부서, 협력과 | - 국제기구 및 해외도서관과 협력<br>- 도서관 간 협력 및 네트워크 |
| 운영혁신 | 미국 의회도서관 | 최고운영책임자, 사서국 | - 도서관 관련 사업 관리<br>- 균등 고용 기회 프로그램 |
| | 영국 국립도서관 | 인사부서 | - 조직전략 수립 및 혁신, 조직운영체계 개선 |
| | 프랑스 국립도서관 | 전략 및 연구본부 | - 장기전략 수립 및 혁신 |
| | 독일 국립도서관 | 전략적 조직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조직 및 인사개발 부서 | - 전략수립 및 조직발전<br>- 조직혁신 및 인력개발 |
| 도서관 정보화 혁신 | 미국 의회도서관 | 최고정보책임자실 | - 데이터중심, 디지털 강화 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구축 및 유지<br>- IT 보안, 네트워크 운영, 최종 사용자 서비스 제공 |
| | 영국 국립도서관 | 기술부서, 디지털부서 | - IT 혁신 및 디지털전환, 디지털혁신 |
| | 독일 국립도서관 | 독일디지털도서관 기술·개발·서비스 부서 | - 디지털 혁신 협력 |

국회도서관의 대외협력 및 운영혁신 기능은 네트워크 확장부터 디지털혁신까지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해외 유사기관과 마찬가지로 전담조직을 통한 체계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 운영을 통한 지방의회와의 연계와 AI 기반 서비스의 확대는 국회도서관이 미래지향적 국가 지식정보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 번째는 기록물 관리 및 보존 기능으로 의정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회의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보존하고 후세에 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기록물 생애주기인 수집·보존·평가·활용 전 과정을 관리하며, 관련 정책 기획과 기록물 공개 및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록물 수집 영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기록물 조사·수집 등과 국회의장단 및 주요 인사 구술채록을 통해 근현대 의정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기록물 정리·관리 체계화 영역에서는 보존기록물 정리·기술 용역사업과 국회기록물 DB 구축 용역사업을 관리하여 기록물의 체계적 분류와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록물 공개 여부 분류사업을 통해 투명성과 보안성의 균형을 유지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물리적 보존 영역에서는 서고 시설 관리 및 보존환경 개선 용역사업을 관리하며, 보존회의록 등 기록물 복원 관리와 기록물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 용역사업을 통해 훼손된 기록물의 복원과 예방적 보존관리를 수행한다. 기록물 활용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회 주요 기록」 동영상 제작 및 구축 용역사업을 관리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국회 기록물이 단순 보존대상을 넘어 민주주의 교육과 역사학습의 핵심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록물 관리 및 보존을 위한 국회도서관 주요 부서의 현황은 <표 15>와 같다.

<표 15> 기록물 관리 및 보존 기능 - 국회도서관 주요부서

| 세부 기능 | 주 수행 부서 | 주요 역할 |
|---|---|---|
| **기록물 수집** | 국회기록보존소 |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기록물 조사·수집·해제·발간 용역사업 관리<br>- 국회의장단, 주요인사 구술채록 용역사업 관리 |
| **기록물 정리·관리** | 국회기록보존소 | - 보존기록물 정리·기술 용역사업 관리<br>- 국회기록물 DB 구축 용역사업 관리<br>- 기록물 공개여부 분류 사업 |
| **기록물 물리적 보존** | 국회기록보존소 | - 기록물서고 시설 관리 및 보존환경 개선 용역사업 관리<br>- 훼손 기록물 복원 및 예방적 보존관리 수행(용역사업) |
| **기록물 활용 서비스** | 국회기록보존소 | - 국회기록정보 활용 웹 콘텐츠·전시·자료집 발간<br>-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운영 |

해외 주요국 국립도서관들도 전담부서를 통해 기록물 보존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자원보존 분야에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컬렉션 부서 내 화폐・메달・고대유물과, 판화・사진과, 고문서과, 희귀문서보존관을 통해 특수자료의 전문적 보존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 국립도서관은 독일망명자아카이브(DEA) 부서에서 나치 정권하 망명작가, 예술가, 지식인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하며, BF 부서에서 독일음악 아카이브를, 독일 도서・저술 박물관에서 개별 지면 소장품, 기록문서, 문학유산을 관리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의 보존에 특화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자원관리 분야에서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자료보존과를 통해 자료의 물리적 보존 및 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도서관은 발굴 및 보존서비스 부서에서 물리적・디지털 소장자료 보존 및 관리, 외부 보관시설 및 컬렉션 관리・보존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자 및 컬렉션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 컬렉션의 총체적 관리, 컬렉션 서지작성 및 검색요구 충족, 시청각자료 보존까지 포괄적인 자료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록물 관리 및 보존과 관련된 해외 유사기관의 조직 현황은 <표 16>과 같다.

<표 16> 기록물 관리 및 보존 기능 - 해외 유사기관 주요부서

| 세부 기능 | 기관명 | 주 수행 부서 | 주요 역할 |
|---|---|---|---|
| 자원 보존 | 프랑스 국립도서관 | 컬렉션 부서 | - 화폐・메달・고대유물과, 판화 및 사진과, 고문서과<br>- 희귀문서보존관 |
| | 독일 국립도서관 | DEA 부서(독일 망명자아카이브 1933-1945) | - 나치 정권하 망명작가, 예술가, 지식인 관련 자료 수집・보존 |
| | | BF 부서 | - 독일음악 아카이브 |
| | | 독일 도서・저술 박물관 | - 개별 지면 소장품, 기록문서, 문학유산 |
| 자원관리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 자료보존과 | - 자료의 물리적 보존 및 관리 전담 |
| | 미국 의회도서관 | 발견 및 보존서비스(DPS) | - 물리적, 디지털 소장자료 보존 및 관리<br>- 외부 보관시설 및 컬렉션 관리・보존 |
| | | 연구자 및 컬렉션 서비스(RCS) | - 도서관 컬렉션 총체적 관리<br>- 컬렉션 서지작성 및 검색요구 충족<br>- 시청각 자료 보존 |

국회도서관의 기록물 관리 및 보존 기능은 수집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여 의정사 보존을 위한 종합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기록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구술채록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통한 기록활용 서비스는 전통적 기록물 보존 기능을 넘어 민주주의 교육과 역사전승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 3.2.3 조직별 인력구성 현황

국회도서관의 조직구조 및 기능 현황 검토 다음으로는 부서별 인력구성을 통해 실질적 운영 현황을 알아보려 한다. 또한 유사기관이자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을 대상으로 부서, 인력 구성 등을 비교·검토해 국회도서관의 상대적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두 기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 국가 지식정보체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기능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부서별 인력규모, 구성 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국회도서관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실 운영 정원은 42명으로 기획담당관실과 총무담당관실로 나뉘어 있다. 기획담당관실과 총무담당관실의 정원은 각각 19명, 23명으로 2급부터 전문경력관 가군까지 여러 직급의 공무원들이 기획 및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실의 과별 상세 인력 구성은 <표 17>과 같다.

<표 17>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실 운영 정원

| 부서명 | | 기획담당관실 | 총무담당관실 | 총계 |
|---|---|---|---|---|
| 일반직<br>(연구직, 임기제 제외) | 2급 | 1 | - | 40 |
| | 3급 | 1 | - | |
| | 4급 | 1 | 2 | |
| | 5급 | 3 | 2 | |
| | 6급 | 9 | 11 | |
| | 7급 | 1 | 5 | |
| | 8급 | - | 1 | |
| | 9급 | 2 | 1 | |
| 일반임기제 | 9호 | - | 1 | 1 |
| 전문경력관 | 가군 | 1 | - | 1 |
| **계** | | **19** | **23** | **42** |

(2025년 기준)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기획연수부는 169명 인적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략기획과, 기획총괄과, 도서관 인재개발과, 국제교류홍보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외에도 공무직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회도서관과는 다른 인력구조를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의 부서별 인력 구성은 <표 18>과 같다.

<표 18>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인력 구성

| 부서명 | 기획연수부(169명) | | | |
|---|---|---|---|---|
| | 운영지원과 | 기획총괄과 | 도서관 인재개발과 | 국제교류홍보팀 |
| **공무원 (현원/정원)** | **37**/38 | **11**/11 | **8**/9 | **10**/11 |
| **공무직** | 97 | - | 1 | 5 |
| **총원(명)** | **134** | **11** | **9** | **15** |

(2024년 기준)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실은 42명의 인력으로 입법지원 기관인 국회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69명의 대규모 조직으로 전략기획, 행정지원, 인력개발, 대외협력 등 종합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와 비교할 때, 국회도서관이 전문적 입법지원에 특화된 집중적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은 정치행정정보과, 경제사회정보과, 국외정보과, 공공정책정보과로 구성되어 총 59명의 인력이 국회의원 대상 의회정보회답 및 입법지원 전문 정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의 과별 상세 인력 구성은 <표 19>와 같다.

<표 19>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운영 정원

| 부서명 | | 정치행정정보과 | 경제사회정보과 | 국외정보과 | 공공정책정보과 | 총계 |
|---|---|---|---|---|---|---|
| 일반직 (연구직, 임기제 제외) | 1급 | 1 | - | - | - | 48 |
| | 3급 | 1 | 1 | 1 | 1 | |
| | 4급 | 1 | 1 | 1 | 1 | |
| | 5급 | 2 | 1 | 1 | 1 | |
| | 6급 | 7 | 4 | 2 | 6 | |
| | 7급 | 1 | 2 | 2 | 3 | |
| | 8급 | 1 | - | 1 | 1 | |
| | 9급 | 3 | - | - | 1 | |
| 일반임기제 | 5호 | - | - | 1 | - | 1 |
| 전문경력관 | 가군 | - | - | 7 | - | 10 |
| | 나군 | 2 | 1 | - | - | |
| **계** | | **19** | **10** | **16** | **14** | **59** |

(2025년 기준)

국립중앙도서관을 살펴본 결과, 의회정보실과 대응하는 전문부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정보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도서관은 입법부 소속 국가도서관으로서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뒷받침하는 역할에 특화되어 있어 전문적 의회정보서비스를 위한 별도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회정보실이 담당하는 회답서비스, 정책동향 파악, 국외 의회정보 수집 등의 업무는 입법과정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용적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업무 특성상 일반적인 도서관 정보서비스와는 서비스 대상, 제공하는 정보 등의 성격이 상이하다. 이처럼 전문적인 의회정보서비스 조직을 두고 있다는 점은 국회도서관이 갖는 입법지원기관으로서의 독특한 위치를 반영한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은 법률정보총괄과, 법률번역관리과, 외국법률정보과, 국내법률정보과로 구성되어 총 4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법률정보 전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과별 상세 인력 구성은 <표 20>과 같다.

<표 20>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운영 정원

| 부서명 | | 법률정보총괄과 | 법률번역관리과 | 외국법률정보과 | 국내법률정보과 | 총계 |
|---|---|---|---|---|---|---|
| 일반직 (연구직, 임기제 제외) | 1급 | 1 | - | - | - | 31 |
| | 3급 | - | 1 | - | - | |
| | 4급 | 2 | 1 | 3 | 2 | |
| | 5급 | 1 | - | - | - | |
| | 6급 | 5 | 4 | 2 | 2 | |
| | 7급 | - | - | - | 1 | |
| | 8급 | 3 | - | - | - | |
| | 9급 | 1 | 2 | - | - | |
| 일반임기제 | 5호 | - | - | 2 | - | 3 |
| | 6호 | - | - | - | 1 | |
| 전문경력관 | 가군 | - | 1 | 5 | - | 10 |
| | 나군 | 1 | - | - | 2 | |
| | 다군 | - | - | - | 1 | |
| **계** | | **14** | **9** | **12** | **9** | **44** |

(2025년 기준)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법률정보 전문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 비교대상을 찾을 수 없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일반적 참고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법률정보를 다루고 있는 반면, 국회도서관은 입법지원 특화 기관으로서 법률정보 전문조직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구성은 법률정보 제공이라는 국회도서관의 고유한 기능적 특성을 나타내며, 국회도서관이 단순 도서관 기능을 넘어 입법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임을 보여준다.

국회도서관 정보관리국은 전자정보정책과, 데이터융합분석과, 전자정보제작과, 정보기술개발과로 구성되어 총 61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국회도서관의 디지털전환과 정보기술 업무 및 데이터 분석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정보관리국의 과별 상세 인력 구성은 <표 21>과 같다.

<표 21> 국회도서관 정보관리국 운영 정원

| 부서명 | | 전자정보정책과 | 데이터융합분석과 | 전자정보제작과 | 정보기술개발과 | 총계 |
|---|---|---|---|---|---|---|
| 일반직 (연구직, 임기제 제외) | 2급 | 1 | - | - | - | 58 |
| | 3급 | 1 | - | - | - | |
| | 4급 | 1 | 2 | 2 | 2 | |
| | 5급 | 1 | 1 | 2 | 3 | |
| | 6급 | 6 | 2 | 9 | 14 | |
| | 7급 | 1 | 2 | 3 | 1 | |
| | 8급 | 1 | - | 1 | 1 | |
| | 9급 | 1 | - | - | - | |
| 전문경력관 | 나군 | - | 2 | - | - | 3 |
| | 다군 | - | - | - | 1 | |
| **계** | | **13** | **9** | **17** | **22** | **61** |

(2025년 기준)

국회도서관 정보관리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식정보운영부(지식정보서비스과 64명 제외)는 38명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협력기획과와 정보기술기획과로 구성되어 디지털도서관 기획,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도서관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지식정보서비스과 제외)의 부서별 인력 구성은 <표 22>와 같다.

<표 22>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 정보기술기반과 인력 구성

| 부서명 | 지식정보운영부(38명) | |
|---|---|---|
| | 디지털정보기획과 | 정보기술기반과 |
| **공무원 (현원/정원)** | **19**/20 | **14**/15 |
| **공무직** | 4 | 1 |
| **총원(명)** | **23** | **15** |

(2024년 기준)

국회도서관 정보관리국은 61명의 인력으로 입법지원을 위한 종합적 정보기술 업무를 수행하며, 4개 과로 세분화된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 중 정보관리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2개 과 38명 규모의 조직과 비교할 때, 국회도서관은 데이터융합분석 등 입법지원을 위한 고도화된 정보기술 기능에 집중하는

반면,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전국 도서관의 정보화 지원에 중점을 두는 정보기술 분야의 기능적 차별화 및 조직 구성을 보여준다.

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은 자료수집과, 자료조직과, 열람봉사과로 구성되어 총 82명의 인력으로 자료 수집·조직, 이용자 정보서비스 등 도서관 기본업무를 수행한다. 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의 과별 상세 인력 구성은 <표 23>과 같다.

<표 23> 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 운영 정원

| 부서명 | | 자료수집과 | 자료조직과 | 열람봉사과 | 총계 |
|---|---|---|---|---|---|
| 일반직<br>(연구직, 임기제 제외) | 2급 | 1 | - | - | 74 |
| | 3급 | 1 | - | - | |
| | 4급 | 1 | 1 | 2 | |
| | 5급 | 3 | 2 | 3 | |
| | 6급 | 8 | 9 | 15 | |
| | 7급 | 3 | 3 | 5 | |
| | 8급 | 5 | 3 | 3 | |
| | 9급 | - | 2 | 4 | |
| 일반임기제 | 9호 | - | - | 7 | 7 |
| 전문경력관 | 나군 | 1 | - | - | 1 |
| **계** | | **23** | **20** | **39** | **82** |

(2025년 기준)

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식정보관리부(고문헌과 14명 제외)는 169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서개발과, 온라인자료과, 국가서지과의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외에도 공무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납본수집, 국가서지 작성, 국제표준번호 운영 등 국가도서관 고유 기능에 특화된 조직구성을 갖추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관리부의 부서별 인력 구성은 <표 24>와 같다.

<표 24>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관리부 인력 구성

| 부서명 | 지식정보관리부(169명) | | |
|---|---|---|---|
| | 장서개발과 | 온라인자료과 | 국가서지과 |
| **공무원<br>(현원/정원)** | 21.5/25.5 | 11.5/14 | 23.5/32 |
| **공무직** | 41 | 17 | 42 |
| **총원(명)** | **62.5** | **28.5** | **65.5** |

(2024년 기준)

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은 82명의 인력으로 자료 수집·조직, 이용자 정보서비스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하며, 3개 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169명의 대규모 조직으로 국가 차원의 납본수집, 국가서지 작성, 국제표준번호 운영 등에 특화된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

보관리부(고문헌과 14명 제외)와 비교할 때, 국회도서관이 상대적 소규모 조직으로 입법 지원 기관의 특성에 맞춘 효율적 자료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반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서의 광범위한 기능 수행을 위한 대규모 조직 운영의 차이를 보여준다.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는 기록정책과, 기록관리과로 구성되어 총 27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직 19명, 연구직 7명, 전문경력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보존 등 국회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의 과별 상세 인력 구성은 <표 25>와 같다.

<표 25> 국회기록보존소 운영 정원

| 부서명 | | 기록정책과 | 기록관리과 | 총계 |
|---|---|---|---|---|
| 일반직 (연구직, 임기제 제외) | 2급 | 1 | - | 19 |
| | 3급 | 1 | - | |
| | 4급 | 1 | 1 | |
| | 5급 | 1 | 2 | |
| | 6급 | 2 | 2 | |
| | 7급 | 1 | 4 | |
| | 8급 | 1 | 1 | |
| | 9급 | 1 | - | |
| 연구직 | 계장급 연구관 | 1 | - | 7 |
| | 연구사 | 2 | 4 | |
| 전문경력관 | 다군 | - | 1 | 1 |
| **계** | | **12** | **15** | **27** |

(2025년 기준)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지식정보관리부 내 고문헌과(14명)와 자료보존연구센터(14명)에서 국회기록보존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부서와 센터에서는 고문헌 관리,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자료보존 기본계획 수립,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복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관련 부서별 인력 구성은 <표 26>과 같다.

<표 26>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및 자료보존연구센터 인력 구성

| 부서명 | 지식정보관리부(14명) | 자료보존연구센터(14명) |
|---|---|---|
| | 고문헌과 | |
| **공무원 (현원/정원)** | 10/11 | - |
| **공무직** | 4 | - |
| **총원(명)** | **14** | **14** |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의 인력 구성을 살펴본 결과, 27명의 인원으로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에 특화된 운영방식을 보이고 있다. 28명의 유사한 규모로 고문헌 관리와 자료 보존연구를 담당하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비교할 때, 인력규모는 비슷하지만 국회기록보존소는 의정기록이라는 특정 영역에 집중하는 반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 자료보존을 담당하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국회도서관이 입법부 소속기관으로서 의정사 보존이라는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화된 조직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부산도서관은 기획관리과, 정보관리과, 정보서비스과로 구성되어 총 45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지역거점 분관으로 특화 장서 수집 및 국회도서관 자료 분산보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부산도서관의 과별 상세 인력 구성은 <표 27>과 같다.

<표 27> 국회부산도서관 운영 정원

| 부서명 | | 기획관리과 | 정보관리과 | 정보서비스과 | 총계 |
|---|---|---|---|---|---|
| 일반직 (연구직, 임기제 제외) | 3급 | 1 | 1 | 1 | 20 |
| | 4급 | 3 | 2 | 1 | |
| | 5급 | - | - | - | |
| | 6급 | 5 | 3 | 3 | |
| | 7급 | - | - | - | |
| | 8급 | - | - | - | |
| | 9급 | - | - | - | |
| 연구직 | 계장급연구관 | - | - | 1 | 1 |
| 일반임기제 | 2호 | 1 | - | - | 23 |
| | 9호 | 3 | 10 | 9 | |
| 전문경력관 | 나군 | - | - | 1 | 1 |
| **계** | | **13** | **16** | **16** | **45** |

(2025년 기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회부산도서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세종도서관(124명)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44명)은 각각 기획관리과, 정책자료과, 서비스운영과와 기획관리과, 기획협력과, 정보서비스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들의 인력 구성은 <표 28>과 같다.

<표 28> 국립세종도서관 및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인력 구성

| 부서명 | 국립세종도서관(124명) | | |
|---|---|---|---|
| | 기획관리과 | 정책자료과 | 서비스이용과 |
| **총원(명)** | **56** | **25** | **43** |

(2025년 기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44명) | | |
|---|---|---|
| 행정지원과 | 기획협력과 | 정보서비스과 |
| **14** | **12** | **18** |

(2025년 기준)

국회부산도서관은 45명의 인력으로 지역거점 분관으로 운영되는 반면, 국립세종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주제별, 대상 연령별 기능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로 다른 운영방식을 보여준다. 국회부산도서관이 지역적 협력과 자료 분산보존에 중점을 두는 반면, 국립세종도서관은 정책자료과 등을 통해 정부정책정보 전문서비스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특정 연령층 대상 서비스에 각각 특화되어 있어,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전략으로 분관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3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 및 조직 개편 현황

국회도서관은 현재 조직운영과 확장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관의 물리적·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지식정보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분관 설립 추진과 서울 본관, 부산·세종 분관 간 기능 재정립 등 특화업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지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급증하는 국회기록물에 대처하고 입법부 고유 기록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기록원 설립논의와 이에 따른 조직·인력·시스템 재정비,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체계 확립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본관·분관과 지방의회, 정부 부처, 지역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 정보관리 체계 구축과 대외 협력 네트워크 확장, 인공지능 기반 지식서비스 도입, 지방의회 지원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배경으로 본 장에서는 국회도서관의 분관 설립과 조직개편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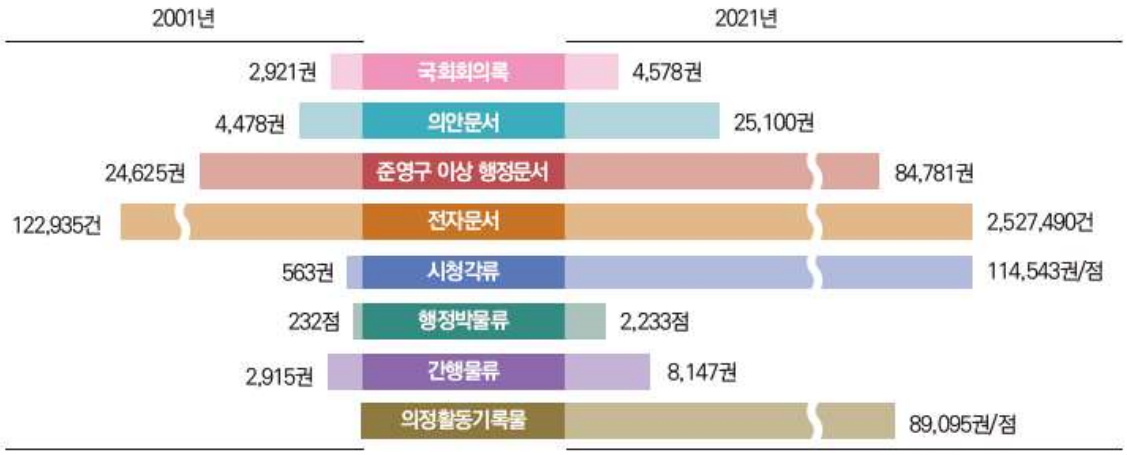
### 3.3.1 분관 설립 추진과 기능 분담

국회도서관은 서울 본관의 물리적·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지식정보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분관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분관 설립의 주요 배경은 공간적 한계 극복 및 자료보존의 필요성과 지역정보 접근성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이다(국회도서관, 2024a).

먼저 공간적 한계 극복 및 자료보존의 필요성이 분관 설립의 가장 직접적 배경이 되고 있다. 서고공간 부족으로 인한 물리적 제약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료량에 비해 보존공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표 29>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의정관 서고 상황이 변화하고 <그림 30>와 같이 국회기록물 수집과 보존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서고면적의 축소와 급격한 장서유입으로 인해 2026년부터 서고별 조기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서고 수장 능력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표 29> 의정관 서고 변동사항

| |
|---|
| [2021년] - 기록보존소 행정박물 서고(331m$^2$). 멀티미디어 서고(254m$^2$) 설치 |
| [2022년] - 국가전략정보센터 설치(학위논문 4만4천 책 유입) |
| - 사회과학자료실, 인문자연과학자료실 열람석 확대(도서 17만 책 유입) |
| [2023년] - 미래연구원 이전 설치(정기간행물 23만 책 유입) |
| [2024년] - 디지털정보센터 재배치(참고도서 3만4천 책 유입) |
| → 서고 면적축소 및 급격한 장서유입으로 서고 조기포화 예정(2026년) |




〈그림 30〉 국회기록물 수집・보존 수량 증가

동시에 지역정보 접근성 강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도 중요한 추진 동력이다. 지방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정보접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국적 정보서비스 균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의 분관 운영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지원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목표 또한 분관 설립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지식정보 역량을 국가 차원으로 확장하고 국가 정보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지식정보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분관 설립의 필요성은 관련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문헌자료의 수장능력 확대 및 분산 소장, 아날로그・디지털 자료의 분산보존을 통한 재난관리 대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지식거점 구축 등이 분관 설립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곽승진 외, 2025). 미국의 경우 입법아카이브센터(Center for Legislative Archives)가 지역기관과 연계한 분산형 서비스 체계를 운영하여 참고할 만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국회도서관, 2024b).

이러한 배경에 따라 현재 국회도서관은 국회부산도서관을 설립・운영 중이며, 이후에는 국회세종도서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고, 국회 광주도서관 건립 또한 추진하고 있다. 자료의 분산 보존 이외에도 국회부산도서관은 의회도서관의 역할과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국가문헌 보존, 지역 맞춤정보 제공, 시민 문화・교육 공간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국회도서관, 2018b; 2021b; 2023b). 건립 예정에 있는 국회세종도서관은 입법・정책 지원과 정부부처와의 연계, 정책자료 제공을 담당할 예정이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식정보의 거점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회도서관, 2024c).

국회도서관의 지역별 서비스 확산은 단순한 물리적 확장을 넘어 국가 지식정보 접근의 형평성 제고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자료 수장능력 확대와 효율적 장서 보존관리라는 현실적 필요에서

출발했지만, 지속적 출판물 증가에 대비하고 지식정보 역량을 국가차원에서 확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국회도서관, 2024a). 국회부산도서관은 영남지역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립되어 이용자 도서관 서비스의 편의와 지역문화 육성을 동시에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회도서관 본관과의 유기적 운영을 통해 국가 문헌 인쇄본의 분산보존 및 의회기록물의 영구보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국회도서관, 2018b). 한편 국회도서관은 국회세종도서관 건립을 통해 의회도서관으로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 및 입법지원조직의 입법·정책 연구지원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국회도서관, 2024c).

나아가 현재 국립도서관이 서울, 경기도, 세종, 부산에 주로 분포해 있고 호남권에는 전무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호남지역(광주) 분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도서관, 2024a). 특히 디지털자료 보존 및 활용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디지털 중심의 분관 건립이 필요하며, 연구단지가 집중 조성되어 있고 학술연구정보 운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대전 지역이 국회 디지털도서관 건립의 적합지로 분석되고 있다(국회도서관, 2020d). 이와 같은 다관 체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능의 재정립과 업무 분담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서울 본관, 부산, 세종의 3관 체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도서관 서비스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도서관의 기능·역할을 재정립하고, 공통 업무와 특화 업무의 유기적 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요 업무 분담 방안으로는 서울 본관의 의회정보실, 법률정보실 주요 업무를 국회세종도서관으로 이전하는 것과 부산·세종 분관이 각각 해당 권역의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발간 자료 수집을 책임 수행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국회도서관, 2018b; 2023b; 2024c).

지역기반 정보인프라와 관련한 국회도서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분관이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지식정보 네트워크 확장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국회도서관, 2018b; 2020d; 2021b; 2023b; 2024a; 2024c). 국회부산도서관이 운영 중이고, 국회세종도서관은 건립 예정이며 국회광주도서관이 추진 중인 현재의 상황에서 국회도서관 분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본관-분관 간 역할 분담 및 운영체계를 갖추고 분관 정체성에 맞는 지역특화 자료, 서비스를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다관 운영체계에 맞는 조직개편 과 그에 따른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학술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확장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 3.3.2 국회기록원 설립 및 기록물 관리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의정활동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 등의 기능을 담당하여 의장단, 의원, 정당 등의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을 비롯한 기타 국회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록보존과 관련한 국회도서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국회기록보존소에게 요구되는 개선 사항으로 근현대 의정사 기록의 체계적 수집체계 구축, 생생한 역사기록을 위한 구술사료 수집 프로젝트 확대 및 체계화, 변화하는 의정활동 환경에 대응한 의정활동 기록물의 수집 범위 확대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과제들은 국회기록보존소가 입법부 고유의 기록물 수집・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국회기록원 설립 논의의 배경에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 첫째, 현행 기록관리 체계의 한계이다. 급증하는 국회기록물에 비해 보존공간과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수집 ・관리 시스템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또한 개선이 필요하여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능 개편 등 체계적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국회도서관, 2017a). 특히 국회 의정활동 기록은 공적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국회 기록관리 관련 법령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없어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이관하고 수집하기에 제한적인 상황이다(국회도서관, 2024b).

둘째, 입법부 기록관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요구이다. 국회 기록은 행정부의 기록과 다른 입법부 고유의 특성과 맥락을 지니므로, 행정부인 국가기록원과는 차별화된 독립적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 업무의 체계화, 전산화,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입법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김유승, 2011).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국회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적 근거와도 궤를 같이한다.

셋째, 국회기록의 민주적・역사적 가치이다. 국회기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핵심 사료이자 입법 활동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로서, 이러한 고유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미래세대가 활용하기 위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기록관리기관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국회도서관, 2017a; 2024b). 미국의 경우에는 국립기록관리청 산하의 입법아카이브센터가 위원회 등에서 생산되는 공식 의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영국 의회아카이브는 의회에서 생성된 기록의 선별적 아카이빙과 의회 역사 연구에 기여하는 기록 확보 활동을 수행하여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국회도서관, 2024b).

국회도서관의 기록물 관리 관련 연구에서는 국회기록보존소의 두 가지 주요 발전 방향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는 국회 분관 체제를 활용한 기록물 관리 기능 연계로, 국회부산도서관에 의회기록물 영구보존 및 지역기록물 수집 기능을 부여하는 것과 본관-분관 간 기록물 관리업무의 효율적 분산 및 협력체계 구축 가능성을 모색하였다(국회도서관, 2021b; 2024a). 두 번째는 통합형 지식정보서비스 '라키비움(Larchiveum)' 모델의 도입이다. 이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복합 모델로, 국회 관련 지식정보의 통합 관리와 소장 자원의 가치 증진 및 활용도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국회도서관, 2018b).

한편, 앞서 언급한 개선 방안들과 별개로 국회기록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향후 국회기록 관리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를 확대 및 개편할 것인지,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을 설립하되 국회도서관과 공동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의의 토대가 된 '국회기록보존소 조직진단 및 체계 개편 방안 연구'에서는 입법부 영구 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의 위상과 역할을 정의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조직 및 인력구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회기록물의 증가량 대비 이를 보존할 공간 및 전문인력의 절대적 부족 문제와, 기록물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개선 필요성, 국회 내 소속기관 간 기록물 관리 협력체계의 보완 등이 주요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편 방안으로는 기록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관리체계 세분화, 국회기록보존소 조직 및 전문인력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기능을 융합한 복합문화공간인 라키비움 모델을 도입을 통한 소장자원의 가치 증대, 그리고 이러한 조직개편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편을 통해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핵심 역할을 강화하고 국회 기록정보 관리의 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3.3.3 조직 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 이슈

기관 내부의 조직개편 방안인 분관 설립 추진, 국회기록원 설립 논의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환경과 이용자 요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력 강화, 네트워크 구축이 국회도서관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기관 단독의 역량으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식정보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기 어려워진 현재,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한 전략과제이다. 국회도서관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본관-분관 간 내부 협력을 넘어 지방의회, 정부기관, 해외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국회도서관이 추진 중인 협력 및 거버넌스 체계 관련 현황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의회 지원 강화는 분관 네트워크의 확산과 연계되어 국회도서관 거버넌스 협력체계의 핵심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자료를 국회와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인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을 운영하여 중앙과 지방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있으며, 의회정보실을 통해 208개 지방의회와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국회부산도서관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정보센터 기능을 수행하며, 직접적 자료수집 및 발간 업무보다는 기존 의정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통해 고도화된 의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국회도서관, 2021b). 향후 지방의회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 등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함께, 지방의회의 요구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특화된 의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존의 일방향적 지방의정 뉴스레터를 구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양방향 정보서비스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국회도서관, 2023b).

둘째,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국내외 협력체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회도서관의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데 중요한 축으로 기능한다. 국내 학술정보 분야에서는 7,707개 공공·대학·전문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자료교환 및 국회 전자도서관 원문DB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각 도서관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국가학술정보 신경망' 협력 모델 도입 연구를 수행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참여 도서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국회도서관, 2018a; 2020d; 2024a). 의회·법률정보 분야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동세미나를 운영하고 법학자료 공동활용 및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대법원, 한국공법학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으로 외국법령·판례 감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과는 해외 법령정보 공동활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역협력 네트워크 차원에서 국회부산도서관은 부산지역의 도서관, 문화시설, 시민단체, 학술연구기관, 관련 정부부서와의 상호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지식정보 지역 분산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차후에는 해외 의회도서관 자료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연구자와 국회의원들이 해외 입법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국회도서관, 2018b; 2024a).

셋째, 운영체계 개선은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구조 재편과 법적·제도적 발판 마련과 관련되어 있다. 정보자원의 폭발적 증가와 이용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의 융합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고, 국회도서관을 중심으

로 헌정기념관과 국회기록보존소를 통합하는 ‘국회라키비움’ 모델 도입이 제안되기도 하였다(국회도서관, 2017a). 이는 기록물, 자료의 체계적 보존·활용과 복합문화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삼고 기관 간 경계를 초월하는 통합적 정보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더해, AI 기술 도입·활용, 중장기 전략 수립, 신규서비스 기획 등을 총괄 담당할 AI 기반 지식서비스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관련 국회도서관 연구에서는 해당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하여 국회기록보존소의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관리 체계 강화, 의정활동기록의 법적 정의·범주의 명확화 등 기록관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병행 등이 제안되었다(국회도서관, 2017a; 2024b).

서고공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분관 확충과 디지털화 추진, 지방의회 지원 강화 등은 급변하는 내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도서관의 다각적·통합적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노력이다. 특히 중앙집중적 운영 체계에서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로의 전환은 국가 지식정보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전문인력 및 조직확충과 라키비움 등 통합모델 도입을 통한 조직내부 효율성 증진은 더욱 발전된 서비스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성을 통해 국회도서관은 단독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여 국가 지식정보 환경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이며, 단순 자료 제공 기관이 아니라 입법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국가 고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 제 4장 국회도서관의 미래 역할 정립과 발전 과제

## 4.1 미래 국회도서관의 비전

정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인공지능(AI)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국회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정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지식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회도서관의 미래 비전을 “국회와 국민을 연결하는 지능형 입법지식 허브”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정 및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분석 기반 강화를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비·연계하여 근거 중심의 분석정보 및 의회 통계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분석 기능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둘째, AI 질의응답, 텍스트 마이닝,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 등 기술을 활용하여 고도화된 회답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기록물 및 정책자료의 수집-관리-보존 전 주기를 디지털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콘텐츠의 안정적 축적 및 활용을 지원하는 콘텐츠 수집·보존 기능의 강화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서울 본관과 부산·세종 분관 간 기능 분담을 체계화하고, 지방의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복수 거점 기반의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확립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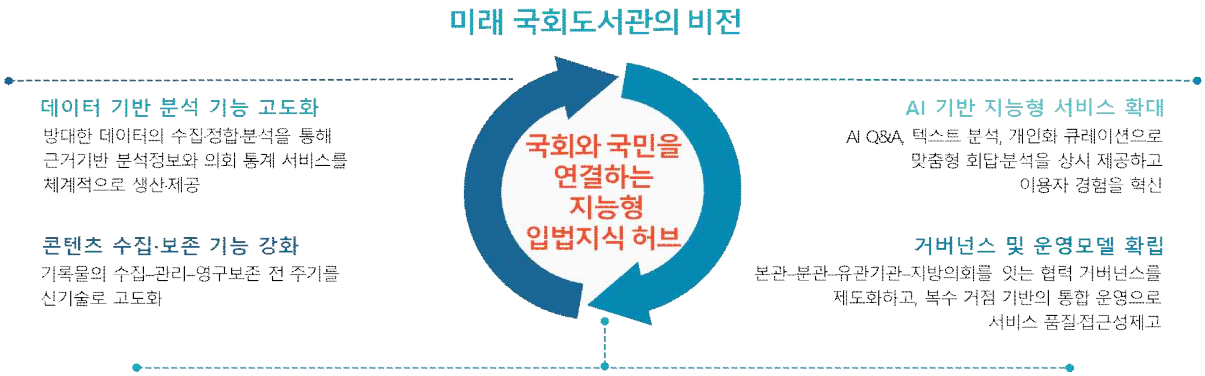
국회도서관의 미래 비전은 입법 지원의 전문성과 국민 대상 지식정보 서비스의 공공성을 균형 있게 확보함으로써, 국회도서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실행 기반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회도서관 서울 본관은 전략 추진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며, 부산관은 국가 문헌의 분산 보존과 지방의회 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건립

및 이전 예정인 세종관은 행정부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정책 지원 플랫폼 기능을 담당할 예정으로 국회도서관은 3관 복수 거점 체계에 기반한 기능 분화 및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

또한, AI・데이터 기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과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체계 고도화, 나아가 분산 운영, 기록 보존, 데이터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기술 표준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국회도서관은 이와 같은 비전과 전략 체계를 기반으로, 정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의정 지원 및 국민 지식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국가대표 지식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 국회도서관의 미래 비전 및 핵심전략

## 4.2 정보환경 변화와 국회도서관의 대응 진단 (SWOT)

국회도서관의 미래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능 영역별 운영 현황과 당면한 과제에 대한 체계적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문헌 및 사례 조사, 국회도서관 내·외부 환경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네 가지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진단을 수행하였다. 각 기능별로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4.2.1. 회답 지원 서비스

회답 지원 서비스는 국회도서관이 수행하는 입법 지원 기능의 핵심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보좌진의 정책조사 업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고유 영역이다. 정보의 신뢰성과 시의성이 중시되는 국회 환경에서, 회답 지원은 단순한 참고서비스를 넘어 정책 형성의 실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국회도서관의 회답 지원 서비스 현황을 진단하고,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30>과 같다.

<표 30> 국회도서관 회답 지원 서비스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 약점(Weakness) |
|---|---|
| ● 높은 신뢰도와 전문성<br>- 통계, 과거자료, 법인자료 등 국회도서관만 제공 가능한 조사<br>- 전문사서 기반의 사실중립·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br>- 해외법률번역 등 고유 전문서비스<br>● 국회 핵심업무 및 입법활동 필수정보 지원<br>- 국감, 상임위 보고, 문제점 발견 및 대안 마련 지원<br>● 대규모 축적 메타데이터 보유<br>- 의회자료·법률·의안·회의록 등 방대한 데이터 | ● 국회 내 입법지원기능 총괄관리 체계의 한계<br>- 국회 4개 입법지원기관(사무처, 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의 입법지원기능에 대한 조정(회답의 효율적 배분 및 기관간 이첩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답 등 입법지원서비스의 효율성 저해<br>●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주제 및 언어 전문 인력의 부족<br>- 국회 입법의 양적 증가 및 질적 고도화·전문화, 그에 따른 입법지원 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는 회답 전문 인력(주제 및 언어 등)의 부족 |
| **기회 (Opportunity)** | **위협 (Threat)** |
| ● AI·데이터 기반 서비스 고도화<br>- 생성형 AI 활용 → 신속하고 표준화된 형식의 회답 작성 가능<br>- 지능형 문서처리, 자동분류 등 효율성 향상<br>- 개인화 기술로 맞춤형 답변 제공 → 회답서비스 품질 향상<br>- 의회 일정-의안 데이터 연계로 사전브리핑 서비스 강화<br>● 높은 서비스 효용성<br>- 국회 내부 이용자, 정보탐색·조사 업무 비중 높음<br>- 대체 서비스 부재로 높은 의존도<br>- 근거중심 고가치 지식정보 창출 가능 | ● 입법부 강화에 기여하는 입법지원기관의 기능 및 역할 차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식 부족<br>- 국회내 입법지원기관의 기능별 특화 및 전문화(도서관 사실정보 제공 vs. 입법조사처 분석정보 제공)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미비<br>● 기술 발전,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보서비스의 고도화 요구 증대<br>-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AI 챗봇을 이용한 신속하고 유연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 고도화된 입법정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 1) 강점 (Strength)

국회도서관의 회답 지원 서비스는 정보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정보조사 기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략적 기반 기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회답 지원 서비스는 국회도서관이 축적해온 방대한 구조화 정보자산에 기반하여 제공된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통계자료, 과거 회의록, 국회 제출자료, 법인자료 등은 국회도서관만이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해온 고유 자원이자, 고도화된 메타데이터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자산이다. 이와 같은 자원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회답은 사실 기반의 정보제공뿐 아니라, 정합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로서도 활용 가치가 크다.

또한 해외 법률 번역, 외국 입법례 조사, 국가 간 제도 비교·분석 등은 일반적 검색, 자료 조회 등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로, 국회도서관은 전문 사서로 구성된 조사 체계와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문 분야에서의 복합적 정보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의원실, 보좌진 등의 정보 요청에 적시의 정확한 회답을 제공하여 실질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회답 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참고 정보서비스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활동, 법률안 심사 등 입법과정의 주요 단계에서 필요한 사실 정보를 지원하여 국회의원 정책 활동의 기초를 뒷받침한다. 문제 제기와 쟁점 도출, 대안 마련 등의 의정활동 주요 과정 중에서 실제적 정보 기반을 제공하며, 국회도서관의 입법지원 기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도서관의 회답 지원 서비스는 고도의 정보신뢰성과 조사전문성, 국회 환경에 특화된 정보체계, 전문 인력 기반 대응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정보서비스의 지능화 및 정책수요 고도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기능으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약점 (Weakness)

회답 지원 서비스는 국회도서관의 핵심 기능으로서, 정보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적 구조와 자원 여건을 고려할 때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국회 내 입법지원기능 총괄관리 체계에 한계가 있다. 국회도서관을 포함하여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주요 입법지원기관은 각각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회답 수요에 대한 기관 간 조정이나 협업 체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일부 회답의 경우 관련성이 높은 정보와 분석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능 간 역할 조율 및 협업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체계적 연계 부족은 향후 회답서비스의 효율성과 정책적 활용도 확대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회답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정보요구의 전문·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주목된다. 최근의 입법정보 관련 요청은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세부 분야별 전문성과 다양한 언어권 능력이 요구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조사·회답 인력의 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특정 분야나 외국 입법사례와 같은 고난도 회답에 대한 대응 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회답 서비스는 전문 인력의 해석과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양질의 정보서비스로, 서비스의 신뢰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인적 역량의 강화는 필수적 해결 과제이다.

이러한 구조적·운영상의 약점들은 단기적인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보다 근본적인 조직 개편, 역할 재정립,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회답 지원 서비스가 국회의 입법 품질 제고와 정책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 강화와 외부 협업 체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이 요구된다.

### 3) 기회 (Opportunity)

회답 지원 서비스는 최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국회의 정책 수요 변화 속에서, 기능적 확장과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를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의 확산, 데이터 중심 행정환경의 정착, 고도화된 정보서비스에 대한 국회 내부 수요 증대는 회답 지원 기능의 전략적 전환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첫째, AI·데이터 기반 기술의 도입은 회답서비스의 업무 효율성과 품질 향상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생성형 AI 기술은 단순 문답형 회답의 자동화는 물론 유사한 회답 유형에 대한 표준화된 응답 작성, 다국어 처리, 신속한 정보 탐색 등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반복적 정보 요구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능형 문서처리 기술, 주제별 자동분류 시스템, 개인화 큐레이션 등의 활용을 통해 회답의 일관성과 적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국회 일정과 의안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사전브리핑 등의 선제적 회답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회답 기능 강화의 제도적·정책적 정당성은 회답서비스에 대한 국회 내부의 효용성 및 대체 불가능함 등의 인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의정활동

에서 정보 탐색과 사실 검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회답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실제로 특정 이슈나 법안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유사 입법례 비교, 근거 중심의 쟁점 정리 등은 회답서비스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회도서관 회답서비스는 외부 민간 정보서비스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공공성과 중립성을 경쟁력으로 가지며, 장기적으로도 회답의 활용성과 수요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국회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수요 확산 역시 주목할 만한 기회이다. 빅데이터 분석, 정책 통계, 행정자료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근거 중심 정책설계가 입법환경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메타데이터, 구조화된 정보자원 등은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국회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정보자산을 효과적으로 연계・가공・활용하여 회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의정활동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 정책결정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전, 정보수요의 변화, 의회 내 회답서비스의 위상은 회답 지원 기능의 발전과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이어진다.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외부 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회답서비스를 단순 정보제공 기능을 넘어 AI 기반 지능형 정책정보 서비스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4) 위협 (Threat)

회답 지원 서비스는 국회의 입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기능으로 지속적인 수요와 기대가 모이는 영역이지만 외부 환경 및 제도적 변화 등을 고려할 경우, 앞으로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발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파악된다.

첫째, 입법지원 기관 간 역할 구분 및 기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식 부족은 국회도서관 회답 지원 서비스의 위치와 범위 확대에 일정 부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따.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의 주요 기관은 국회 내에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기능적 차별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경우 국회도서관 회답서비스만의 특성과 고유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기관 간 중복 혹은 오해에 따른 회답 요청의 분산, 활용 저조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정보기술 발전과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회답서비스 전반의 구조와 제공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야기하고 있다. 기존의 인력 의존 회답서비스 방식은 AI 기반 생성형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자동화된 정보검색 시스템의 발전과 높아지는 이용자 기대 수준 등에 따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술 기반 대응 역량 개발이 늦어질 경우 회답서비스는 경쟁력 약화 및 이용자 만족도 저하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셋째, 서비스 속도, 품질, 맞춤형 제공 등 회답서비스의 전반적 역량은 지능형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요구 확대에 의해 지속적으로 혁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정보, AI 챗봇을 통한 대화형 회답, 실시간 정보탐색 지원 등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요구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와 같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회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국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유용한 기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술 및 유사기관 정보서비스의 트렌드 등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4.2.2 데이터기반 서비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공공기관의 정보서비스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역시 입법지원 기능의 고도화, 정책정보 수요의 다양화, 정보 접근성 향상이라는 복합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서비스 체계의 정비와 기술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왔다. 이에 국회도서관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현황을 진단하고,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국회도서관 데이터기반 서비스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 약점(Weakness) |
|---|---|
| ● AI 기반 인프라 구축<br>- 클라우드 플랫폼, Argos 시스템 운영<br>- 텍스트 분석, 데이터 시각화, 맞춤형 모니터링 기능<br>● 전문 DB 및 서비스 보유<br>- 국내외 법률자료 DB 구축 및 전문 정보서비스 제공<br>- 국회제출자료 데이터화 → 증거기반 서비스 기반 마련<br>● AI 학습용 데이터 풍부<br>- 번역데이터 및 방대한 도서자료 소장, 데이터 오션 구축 | ● 시스템 통합 부족<br>- 기관별 데이터 구축방식 상이<br>- 호환성 문제로 통합검색 시 자료누락 발생 가능<br>● AI 기술 적용 한계<br>- 학습데이터 위주 작동, 실제 소장자료 검색성능 향상 필요<br>- 퍼블릭 LLM 활용 시 보안 및 비용 문제 발생<br>● 사서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 필요<br>- AI 기반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서 전문성 함양 필요 |
| **기회 (Opportunity)** | **위협 (Threat)** |
| ● AI 서비스 확장 가능<br>- 개인맞춤서비스(정보추천, 큐레이션 서비스) 강화 가능<br>- AI 기반 질의응답, 챗봇으로 정보 접근성 향상 가능<br>- 플랫폼 데이터, 민간 대규모 AI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br>● 외부사례 벤치마킹<br>- 리걸테크 등 AI 기술 적용 사례 참고<br>● 데이터 기반 운영혁신<br>- 데이터분석으로 이용행태 분석 → 도서관 운영 최적화 | ● 법·제도적 제약<br>- 데이터 활용 관련 현행 법·제도와 상충 가능성<br>- 개인정보보호, 지적자유 등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br><br>● AI 신뢰성 문제<br>- 자동화 업무의 정확성, 신뢰성 한계<br>-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

### 1) 강점 (Strength)

국회도서관은 데이터기반 정보서비스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 여러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조합한 기술 환경을 조성하며 공공도서관 중 디지털전환을 주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AI시사분석 ARGOS 서비스의 도입과 운영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는데, 해당 시스템은 텍스트 데이터 분석, 주제별 동향 시각화, 이슈 기반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이용자 주제 관심사에 따라 맞춤형 정보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국회구성원들의 정보 접근 관련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키며 다양한 정책 분야에 영향을 준다.

또한 국회도서관은 국내외 법률정보의 구조적 축적을 통해 전문 데이터베이스(DB)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답서비스, 입법지원, 정책자료 제공 등 전문적 정보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국회 회의록, 입법자료, 국회 제출 자료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하여, 향후 데이터 기반 입법 분석과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국회도서관의 차별적 강점 중 하나이다. 이러한 구조적 정보자산의 축적은 단순한 문헌 보관 기능을 넘어서, ‘증거기반 정보서비스(evidence-based service)’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방대한 장서 또한 AI 기술 활용 측면에서 큰 자산이 되고 있다. 다국어 번역자료, 국회기록, 고문헌 등 풍부한 비정형 데이터 자원은 자연어 처리(NLP), 기계학습 등의 학습 데이터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에는 ‘데이터 오션(Data Ocean)’ 구축 사업을 통해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통합하려는 시도도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국회도서관이 AI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검색, 질의응답, 콘텐츠 추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독립적이고 신뢰 가능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서관은 법률 분야의 시의성 있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특정 이슈에 대한 입법 동향을 시간순으로 추적하는 기능, 유사 법안 간의 텍스트 유사성을 비교·분석하는 기능 등을 확대하며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뿐 아니라 이를 실제로 정보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기능 개선 작업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및 분석 기반 정보서비스는 국회도서관이 단순 사실정보 제공 기관이 아닌 정책 결정과 입법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기반 전문 정보기관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도서관은 기술적 인프라, 데이터 자원, 전문 정보서비스 역량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규모 확대와 수준 향상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도 AI 기반 정보서비스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이러한 토대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며, 국회도서관의 미래 역할 정립과 관련해 핵심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 약점 (Weakness)

국회도서관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지만 현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구조 및 기술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파악된다. 향후 데이터 기반 정보서비스의 효율성·안정성 향상을 위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시스템 통합, 데이터 연계성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도서관 내 데이터베이스는 부서별로 구축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메타데이터 체계와 설계 구조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데이터 통합검색 시 일부 자료가 검색 결과에서 누락되거나 일관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자의 정보 접근 편의성, 서비스 신뢰도 향상 및 유지를 위한 데이터 설계 및 데이터 연계 표준화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범위는 현재 학습용 데이터 기반의 일부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며, 실제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방대한 도서자료와 비정형 콘텐츠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고도화된 검색 기능은 아직 구현이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외부의 퍼블릭 LLM(Large Language Model) 기술을 활용할 경우, 정보 보안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보완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AI 기반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서 등 정보 전문인력의 데이터 역량 강화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부 영역에서는 데이터 분석 및 AI 활용에 특화된 실무 인력의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이며, 서비스 설계와 운영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숙련도의 내재화가 필요한 단계에 있다. 향후 정보서비스의 고도화가 기술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의 전략적 기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인적 역량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기술적 결함이라기보다는, 공공정보서비스 환경에서 데이터 활용성과 기술 연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발전적 보완과제로 이해되며, 국회도서관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 3) 기회 (Opportunity)

정보기술 환경의 급속한 발전은 국회도서관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장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와 디지털 정보플랫폼의 고도화는, 기존의 단방향적·수동적 정보제공을 넘어서는 지능형 정보서비스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방대한 장서와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용자 맞춤형

정보추천, 주제별 큐레이션, 자동화된 질의응답 등 AI 기반 정보 접근성 향상 전략을 적극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개인화된 정보서비스는 국회의원, 입법조사관, 정책담당자 등 다양한 정보수요자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최근 민간 영역에서는 대형언어모델(LLM), 리걸테크 플랫폼, 정책정보 큐레이션 시스템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도서관의 기술 도입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관련한 성공적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도서관은 입법정보에 AI 기반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정보 탐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모두 향상시킨 사례인 미국 의회도서관(LOC)의 “Congress.gov“, 영국 국립의회도서관의 “POST(Publi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서비스 등을 참조함으로써 현재의 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전략적 발전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책 데이터와 이용자 접점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내부 운영 방식의 혁신 역시 가능해질 것이다. 일례로, 도서 대출・열람・검색 로그, 회답 요청 주제 분포, 법률 정보 이용 패턴 등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이용자 요구에 기반한 자원 재배치, 서비스 개편, 조직 기능 재설계 등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서관 운영 자체를 분석과 기획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정책 기조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외부 기회 요인이다. 국회도서관이 이러한 정책 흐름에 연계하여 국가 차원의 공공지식 인프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단순한 기관 차원을 넘어 입법・행정 전반의 데이터 연계 허브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세종시 분관 설립 및 기능 재편과도 연계하여, 분산형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기능별 특화 운영모델 구축에도 중요한 전략적 기반이 될 수 있다.

#### 4) 위협 (Threat)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고도화는 국회도서관의 기능 혁신과 정보서비스 체계 전환에 있어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술 활용의 범위와 방향을 제약할 수 있는 외부 위협 요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한계는 향후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국회도서관이 수집・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에는 국회 제출자료, 회답 기록, 정책자료, 외부 연계 데이터 등이 포함되며, 이들의 통합적 활용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정보공개법 등과 상충 가능성이 존재한다. 목적 외 이용, AI

학습용 데이터로의 전환 과정 등에서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 지적자유 보장 등 공공 정보기관으로서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법적 불확실성은 서비스 기획 및 구현에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생성형 AI 기반의 자동화 서비스는 질의응답, 정보 추천, 요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오류, 해석의 왜곡, 편향된 데이터 반영 등은 입법 및 정책 정보서비스의 공적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AI 기술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공지식서비스 기관으로서의 국회도서관은 정보의 중립성과 정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만큼, AI 활용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은 보다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할 위협 요소로 인식된다.

이에 더해,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술적 기반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의 역량 확보와 운영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AI 관련 시스템 설계와 데이터 기반 분석 서비스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교육 및 지원체계 또한 초기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황은 기술 도입 속도와 서비스 정합성 간 차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확장성과 품질 유지에도 부담 요인으로 일정 부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법적·기술적 위협 요소들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데이터 기반 정보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4.2.3 콘텐츠 수집 및 보존

국회도서관은 국가적 차원의 지식자산을 안정적으로 수집·보존하는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이는 입법지원과 정책정보 서비스의 기반이자 도서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기능 중 하나이다. 특히 국회에서 생산·축적되는 방대한 기록물과 간행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식정보 콘텐츠의 지속적 확보와 장기적 보존은 공공정보 인프라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국회도서관의 콘텐츠 수집 및 보존 기능을 중심으로 체계의 현황과 운영상의 한계, 기술·제도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국회도서관 콘텐츠 수집 및 보존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 약점(Weakness) |
|---|---|
| ● 방대한 의회자료 수집·보존<br>- 의회기록물, 국회간행물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 보유<br>- 국가 지식문화유산 기관으로 법적보존 책임<br>● 이중 보존체계 구축<br>- 본관-분관 분산보관으로 안전성 확보<br>- 전문 보존시설 및 재해복구시스템 고려<br>● 디지털 자료 보존 기반 마련<br>- 원문 데이터센터 추진 및 지역 특화주제 중점 수집 | ● 관리체계 비효율성<br>- 본관-분관 중복작업 우려<br>- 전통적 서고관리의 한계<br>● 디지털화 및 접근성 한계<br>- 다량의 미디지털화 자료 → 디지털 아카이빙 및 활용에 제약<br>- 저작권 문제로 외부 이용자 접근 제한<br>- 디지털 보존 관련 법적 기반 확립 필요 |
| **기회 (Opportunity)** | **위협 (Threat)** |
| ● 기술 도입<br>- 스마트 서고, 지능형 창고모델로 효율성 향상<br>- AI 기반 자동 분류·태깅·검색 기술<br>● 데이터 활용 가치 창출<br>- AI·빅데이터 분석 및 근거기반 정보서비스의 기반<br>● 협력체계 확대<br>- 수장공간 및 보존자료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할 기회 | ● 자료량 급증 및 형식 다양화<br>- 국회 제출자료 지속적 증가 및 다양한 데이터 형태 등장<br>- 물리적·디지털 수장공간 확장 및 관리 요구 증가<br>● 기술적 제약<br>- 디지털 기술 발전속도 대응의 부담<br>- 인프라 확보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br>● 법적·제도적 제약<br>- 저작권 및 디지털자료 보안 문제<br>- 표준화 문제로 기관 간 협력 어려움 |

### 1) 강점 (Strength)

국회도서관은 문헌 수집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 지식자산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여 공공정보 기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입법활동과 관련된 공식기록과 간행물을 종합적으로 수집·보존하여 축적한 자료의 양과 법적 위상 측면에서 비교 불가한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규정된 역할에 의해 의회기록물, 국회간행물, 회의록, 입법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국회 관련 정보자산을 포괄적으로 수집하며 국가의 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으며, 지속적 신뢰성과 안정성을 가진 공공정보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있다.

물리적 보존체계 측면에서는 이중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본관과 분관 간 분산보관 체계를 통해 자연재해,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이중 보존구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 보존시설 및 재해복구(DR) 시스템에 대한 고려 또한 반영하고 있다. 위기 대응형 보존 체계 마련을 통해 국회도서관은 장기적 정보자산 관리 분야에서 안전성과 회복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토대 역시 마련하고 있다. 원문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과 지역 특화 주제에 대한 중점 수집 전략의 수립 및 실행 등을 통해 전통적 문헌 중심 수집 기능에서 벗어나 주제별·지역별 전문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장기보존 가능한 디지털 자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장서보존 기능에 더해 디지털 정보의 수집·정제·활용을 포함하는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미래 국회도서관 콘텐츠 보존 기능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국회도서관은 법적 권한, 장기적인 자료 축적, 물리적 보존 인프라, 디지털전환 대비 등 여러 측면에서 콘텐츠 수집·보존 기능 수행의 안정성과 제도 차원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 추후 공공기록 디지털 아카이빙, 국가 정보유산 관리 등의 영역에서 핵심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확립할 수 있다는 강점을 보인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는 보존체계 전문화·고도화와 정보 자산의 공공 활용성 증진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약점 (Weakness)

국회도서관의 콘텐츠 수집 및 보존 체계는 제도적·물리적 기반 위에서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디지털전환과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진다. 우선 본관과 분관 간의 분산보관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중복 및 관리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자료 이관·보관 과정에서의 책임 주체 불명확성, 이중 등록 또는 중복 처리 가능성 등은 전통적인 서고 중심 관리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수장공간 확보뿐 아니라 운영 프로세스의 정비와 표준화가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기반 구축이 미비하다는 점은 향후 기능 발전에 있어 심각한 제약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다량의 의회기록물 및 간행물 중 디지털화되지 않은 자료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이로 인해 디지털 아카이빙, 주제별 검색, AI 분석 등의 서비스로의 연계가 제한적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장기 보존체계의 정립 역시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법적·기술적 기준이 불명확하여 서비스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 모두 제한이 있다. 특히 저작권 이슈로 인해 외부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록물로서의 활용도 역시 낮아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디지털 자료 보존 및 서비스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역시 미비한 상태로 디지털 보존과 관련된 법률·규정 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료 형식의 표준화, 메타데이터 통일, 장기 보존 기술 적용 등에서 내부 정책의 불일치나 협업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공백은 국회도서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법·제도 정비와 거버넌스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적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도서관의 콘텐츠 수집・보존 기능은 양적 성과와 제도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전환, 효율적 관리체계, 법제도 기반 정비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정보자산의 활용도 제고와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3) 기회 (Opportunity)

콘텐츠 수집 및 보존 기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정보활용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략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스마트 서고, 지능형 창고 모델, 자동화된 분류・태깅 기술 등 보존 효율성과 접근 편의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들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어 이러한 기술 도입이 물리적 공간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보존체계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보존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는 단순 저장을 넘어 AI 기반 분석과 근거기반 정보서비스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방대한 의회기록과 정책자료, 국회 간행물 등의 축적은 정책 이슈별 추세 분석, 입법사례 비교, 의정활동 패턴 도출 등 지식 기반 데이터 활용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콘텐츠 보존이 단순한 보관 기능을 넘어 정보의 2차적 가치 창출로 연결되는 이와 같은 선순환은 국회도서관의 정책지원 기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자산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수장공간의 한계와 디지털 보존의 전문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존시설 운영기관,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 학술정보 유통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가능성이 확대되며 외부 협력체계의 확장 가능성 또한 주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공통의 기술적 과제(예: 디지털 장기보존 기술, 저작권 문제, 메타데이터 표준화 등)를 안고 있는 기관들과의 협력은 중복투자 방지와 기술 축적의 효율성 측면에서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며, 보존자료의 범위와 활용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처럼 국회도서관의 콘텐츠 수집 및 보존 기능은 기술혁신, 데이터 활용, 외부 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확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현대화된 보존기능과 정보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 위협 (Threat)

디지털 정보 콘텐츠들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추어 유형과 형태, 관리 방식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은 도서관 정보센터가 콘텐츠 수집・보존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운영환경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기능 수행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제도적・기술적 고려 사항들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자원의 지속적 증가와 다매체 데이터의 등장으로 인해 물리적 수장 공간의 확충 요구와 디지털 자원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는 파일 유형·저장 포맷·표준화 요건 등이 다양해 일관된 보존 정책 수립과 안정적인 장기 보존 체계 구축에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기술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장기보존, AI 기반 자동 분류·검색 체계 등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를 반영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시스템의 도입과 고도화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예산 확보, 전문 인력 운용, 인프라 투자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의 기술적 역량과 관련 정책 간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

효과적인 콘텐츠 수집 및 보존을 위한 외부 협력 확대, 자료 공유·개방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보호, 개인정보 처리, 디지털 자료 보안 등의 측면에서 관련 법적 제도적 범위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관련된 법적 기준이 일부 영역에서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를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기관 간 협력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표준화나 포맷 호환성 등도 보존 시스템 간 연계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파악되어 점검이 필요하다.

수집·보존 기능은 기술 발전과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외부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응 역량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위협 요인들은 국회도서관의 보존 기능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기술·제도·운영 체계 전반에 걸쳐 신속·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앞으로의 성공적인 기능 확장과 서비스 연계로 이어질 수 있다.

### 4.2.4 거버넌스 체계 구축

국회도서관은 입법지원 기능의 범위를 국회 중심에서 지방의회 및 지역사회로 확장해 가며,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지방 분관 설립을 계기로, 국회-지방의회 간 정보 연계, 분산된 장서 및 기능의 체계적 관리,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기능 간 연계와 기관 간 조정체계, 즉 거버넌스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보다 뚜렷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국회도서관의 기능 운영 및 조직 구조 전반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진단하고, 주요 기능 간 연계 구조 및 협력 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국회도서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 약점(Weakness) |
|---|---|
| ● 국가도서관 역할 기반 확보<br>- 국회-지방의회 연계 입법 지원<br>- 지역 행정기관·연구기관·주민에 도서관서비스 제공<br>●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 운영<br>- 국회-지방의회 자료 통합 검색<br>● 분관별 특화 서비스<br>- 부산: 영남권 최초 국가도서관, 부·울·경 지방의회 서비스 제공<br>- 세종: 지방의회 관련 자료 통합·연계 서비스 계획 | ● 낮은 인지도 및 이용률<br>- 지방의회 의원의 서비스 인지도 부족<br>- 주차장 부족, 대중교통 불편 등 접근성 문제<br>● 분관 운영체계 미비<br>- 인력·예산 제한으로 특화서비스 어려움<br>- 기관 간 정보공유 표준 부재<br>- 본관-분관 간 장서 통합관리 정책 부재 |
| **기회 (Opportunity)** | **위협 (Threat)** |
| ● 지식정보 거점 역할 강화<br>- SOC(Share, Open, Connect) 전략으로 분산 국가지식정보자원 통합관리<br>● 지방의회 지원 강화<br>- 지방의회 자료 통합·연계 서비스 강화 및 특화 서비스 제공<br>●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br>- 지역도서관 및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br>- 산·학·연·관 연결 혁신 플랫폼 역할 수행<br>-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 ● 예산·인프라 제약<br>- 예산제약으로 신기술 도입 한계<br>- 지방의회 지원 전용공간 및 인력 부족<br>- 상용 정보서비스와 경쟁 심화<br>● 협력·운영 제약 요인<br>- 본-분관 간 업무 중복·이견 가능성<br>- 정보의 편향성 가능성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 문제<br>- 디지털자료·데이터 공유 관련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문제 |

### 1) 강점 (Strength)

국회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와 입법지원 서비스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왔다. 특히 국회-지방의회 간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분관을 중심으로 한 다기관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기반의 확장성과 정책 연계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국회 및 지방의회의정포털 운영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자료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것은, 입법지원정보의 공동 활용성과 전국적 서비스 기반을 갖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은 영남권 최초의 국가도서관으로서 부·울·경 지역의 지방의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종 분관은 향후 지방의회 관련 자료의 통합 연계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분관별 특화 서비스의 구축 계획은 국회도서관이 기능별 분산 운영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수요에 맞춘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지역 내 행정기관, 연구기관, 주민 대상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은 기존의 국회 중심 정보서비스를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이러한 조직 구조는 중앙-지역 간 기능 연계 및 역할 분담의 틀을 정립하는 시도이자, 향후 분산형 정보기관 운영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차원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기능과 주체 간 조정이 요구되는 환경 속에서 국회도서관은 이미 일정 수준의 공간·기능 분산 모델을 실험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조직 개편과 기능 재설계 논의에서도 유의미한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약점 (Weakness)

국회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역 단위로 확장하기 위해 부산 분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세종관 설립 및 이전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지역 기반 서비스 확대는 전국 단위의 지식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나, 운영체계와 제도적 기반 측면에서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맞춤형 홍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 분관의 존재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지도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 의원 및 관계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이용자 중심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주차 공간 부족, 대중교통 접근성 미흡 등의 물리적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과 관련한 이용 환경 측면의 제약도 확인된다. 이러한 요소는 지역 주민의 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분관이 지역 특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기반 역시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현재 부산 분관은 주로 장서 보관 및 열람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지원, 지식정보 연계와 같은 고차원적 기능 수행에는 한계를 가지며, 본관과 분관 간의 운영상 일관성과 연계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서 통합 관리, 메타데이터 표준화, 자료 이관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여, 중복 보관, 정보 누락, 연계 검색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정보자원 관리 측면에서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분산형 정보기관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핵심 기반 중 하나인 정보 공유·통합 정책 측면에서 중요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도서관의 거버넌스 체계는 전국적 서비스 확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분관 운영의 자율성 향상, 본관-분관 간 기능 연계 정비,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운영 전반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

### 3) 기회 (Opportunity)

국회도서관의 분산형 조직 운영 및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은 국가 단위의 지식정보 거버넌스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책적·기술적·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차원에서 추진되는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 '디지털플랫폼 정부', 'SOC(Share, Open, Connect)' 전략 등은 기관 간 정보의 연계성과 개방성, 협업 기반 운영모델에 대한 정책적 정당성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상황은 국회도서관이 본관-분관 간 기능을 구조화하고, 지역과의 역할 분담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강화로 인해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이 확대되면서 관련 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도서관이 이를 선제적으로 수용한다면 지방의회-국회 간 입법 지원 연계 체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과 '세종 분관의 연계 계획' 등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관련 정보의 통합·연계 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앙-지방 간 정보 격차 해소와 함께 국회도서관의 정책정보 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관을 통한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 확장은 국회도서관 거버넌스 체계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지역 혁신 생태계에서 국회도서관은 지역도서관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정보 접근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정보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분관을 단순한 부속 기관이 아닌, 지역 거점형 기능 기관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의 거버넌스 체계는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지역 수요, 기술적 기반 확장이라는 외부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으로써, 중앙-지방 연계 기반의 국가적 지식정보 거버넌스 모델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 4) 위협 (Threat)

거버넌스 체계의 확장과 기능 분산은 국회도서관의 역할을 다기능·다기관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지만, 제도적 불확실성과 운영상 제약 요소를 동반하는 구조적 위협도 내재하고 있다. 지방 분관의 기능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문제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신기술 도입, 지방의회 지원 전용 공간 확보 등은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실질적인 운영 역량의 강화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이러한 제약은 분산형 운영모델 전환의 실행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분산된 조직 간 기능 배분과 역할 조정 과정에서 업무의 중복, 책임의 분산, 운영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도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 본관과 분관 간 협의 구조, 성과 관리 기준, 정보 공유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조정 체계가 미비할 경우, 기능 간 혼선과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전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특히 정책정보서비스와 같이 판단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중요한 기능에서는 정보 편향성에 대한 외부 지적이나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도 존재하므로 신중한 조정이 필요하다.

정보공유와 협력 기반 확대 과정에서의 법적·기술적 제약도 주요한 위협 요인이다. 디지털 자료 및 데이터의 외부 공유 시 저작권,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할 경우, 외부 기관과의 협업이나 통합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관 간 정보 시스템 간의 기술적 상호운용성 부재, 메타데이터 구조의 불일치 등은 거버넌스 체계의 실질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국회도서관의 거버넌스 체계는 외연의 확장과 기능 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나, 정책 실행의 제도적 기반과 협력 운영의 안정성 확보 없이는 기능 다변화의 효과가 조직 전반의 복잡성과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위협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 4.3 국회도서관의 핵심 기능별 추진과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입법환경의 복잡성 심화, 지식정보의 생산 및 활용 방식 고도화는 국회도서관의 기능 수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기존의 단일 거점 기반의 정보제공 기능에서 벗어나, 데이터 중심의 근거기반 서비스, 실시간 회답 지원, 체계적 지식자산 보존, 복수 거점 기반의 연계 운영 등으로 기능 범주가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조직 구조 및 운영 전략의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국회도서관이 미래 정보환경 속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핵심 기능 영역을 도출하고, 각 기능별 전략적 방향과 조직·인력·인프라 차원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4.1장에서 수행한 정보환경 변화 진단과 SWO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향후 국회도서관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핵심 기능 영역을 네 가지로 재구성하고, 각 기능별로 전략적 방향성과 단계별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네 가지 전략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회답 지원 서비스 고도화
: 이용자 질의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AI 기반 정보검색과 분석 자동화를 통해 처리 효율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

②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
: AI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의 수집·관리·분석·활용 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과 서비스 효율 증진을 도모

③ 콘텐츠 수집 및 보존 기능 강화
: 공공 지식자산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이를 활용해 자료의 신뢰성과 이용 가능성을 제고

④ 거버넌스 및 분관 운영체계 구축
: 본관-분관 간 연계와 지역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정보 접근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정보 요구 충족을 지향

네 가지 기능별 분석은 단순한 업무 분장이 아닌 국회도서관의 전략적 역할과 조직 운영의 근간을 재정립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설정되었다. 각 기능별 논의는 서비스 방향, 운영 구조, 조직 및 인력, 제도 등 구조적 개선 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며, 도출된 실행 과제는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4.3.1 회답 지원 서비스 고도화

#### 1) 핵심 전략 방향

국회도서관의 회답 지원 서비스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능으로,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분석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잡해지는 입법환경과 다양해지는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수동적 중개자 역할에서 벗어나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데이터 기반 분석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회답 지원 기능은 다음 네 가지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다.

① 데이터 기반 분석 기능

국회도서관의 회답 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요청 정보의 유무를 확인하고 사실 정보 제공하는 수준에서 발전하여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통해 근거 기반의 분석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법률정보와 사회·경제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여 새로운 회답 유형을 구조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②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이용자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AI 챗봇 활용 질의응답 서비스 제공, 텍스트 분석 기반 사회 이슈 맞춤 정보 추출, 이용자의 정보이용 패턴 분석에 기반한 개인화 서비스, 사회 정책 이슈와 관련된 큐레이션 서비스 등이 지원 가능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회답 서비스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기능 중심 조직 재편

기존 자료형태·부서 중심의 조직 구조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 4개 입법지원기관(사무처, 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의 입법지원 기능에 대한 조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 지원 서비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지원기능 총괄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회답 지원 서비스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기능을 특화하고, 참고정보서비스를 핵심으로 한 기능별 조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중복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④ 통합형 회답 지원 인프라 구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서관 내부의 자료·데이터·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본관-분관 간 협력 및 외부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복수 시스템에 분산된 회답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용자에게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적으로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표준화와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일관된 형식과 품질을 확보하고 회답 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도서관의 회답 지원 기능은 전통적인 정보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분석하는 전문적 기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데이터와 기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증거 기반 고가치 정보 생산을 통한 국회의 정책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국회도서관의 정체성과 위상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 2) 핵심 기능과제

회답 지원 서비스의 전략적 전환을 위해 1) AI 기술을 활용한 회답 지원 서비스의 고도화 및 업무 자동화, 2) 이용자 중심의 회답 서비스 확장 및 효율화의 두 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인 기능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각 영역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AI 활용 회답 지원 서비스 고도화 및 업무 자동화

회답 지원 기능 고도화를 위한 전략 과제는 회답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데이터 분석 기반 고차원의 정보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반에는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질의 유형을 대상으로 AI 기반 자동화 기능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석 회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이 필요하다. 이후 회답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 정비와 데이터 구조화를 통해 AI 데이터 기반 회답 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현함으로서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과제 1] AI 활용 회답서비스 개선 (단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회답 서비스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복적 회답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 기반을 마련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회답 초안 자동작성 구현<br>▪ 반복성이 높은 기본정보 질의 유형(사실확인, 해외제도 등) 중심 회답 프로토타입 개발<br>▪ 외국 법률정보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AI 기반 자동번역 체계 도입 및 검토 프로세스 연동<br>▪ AI 생성 응답을 사서가 검토·보완하는 병행형 회답 프로세스 수립 |
| 실행주체 및 조직 | 의회정보실, 법률번역관리과, 정보기술개발과 |
| 기대효과 | ▪ 회답처리 시간 단축 및 인력부담 완화<br>▪ 반복성 높은 회답 품질의 일관성 확보 |

### [과제 2] 회답관리시스템 체계화 (단기-중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회답 요청부터 결과 축적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통합 관리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및 향후 자동회답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반 마련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회답 요청-배정-처리-검수-DB 축적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br>▪ AI 기반 질의 유형 자동 분류 및 담당자 매칭 기능 구현(언어, 이슈, 국가 등)<br>▪ 유사 질의 및 회답 검색 기능 고도화, 회답 템플릿 자동 추천 기능 고도화<br>▪ 회답 누적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데이터셋으로 구축, 지속적 품질 관리 체계 병행<br>▪ 향후 자동회답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아키텍처 기반 설계 |
| 실행주체 및 조직 | 의회정보실, 법률정보실, 정보기술개발과 |
| 기대효과 | ▪ 회답 업무 효율성 및 품질관리 체계 확립<br>▪ 반복 질의 대응 시간 단축 및 자원 절감<br>▪ 질의-회답 데이터 활용성 증대 |

### [과제 3] AI·데이터 기반 회답 지원 통합 플랫폼 연계 (중기-장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단일 시스템에서 회답 요청·처리·자료검색·AI 지원 기능을 통합 제공하여, 회답 업무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br>내부 회답관리시스템과 외부 의회·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회답관리시스템, 의회법률DB, 해외의회·국제기구 자료와의 API 연계<br>▪ AI 기반 질의 응답·자료 검색·다국어 번역 기능 통합<br>▪ 회답 이력, 이용자 프로필, 관심분야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회답·자료 제공<br>▪ 단계별 통합 및 시범 운영을 통한 전면 서비스 확대 |
| 실행주체 및 조직 | 의회정보실, 법률정보실, 정보기술개발과, 외부협력 지원 |
| 기대효과 | ▪ 회답 서비스의 원스톱 제공 체계 확립<br>▪ 국내외 의회·정책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 향상<br>▪ AI·데이터 기반 지능형 회답 지원 환경 구현 |

② 이용자 중심 회답서비스 확장

국회의 정보 수요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의원과 보좌진의 관심 이슈 및 의정활동과 밀접히 연계된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답서비스는 접근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용자의 개별적 요구와 업무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과제 4] 온라인 기반 비대면·맞춤형 회답서비스 확대 (단기-중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비대면업무 환경과 맞춤형 정보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온라인 플랫폼 기반 회답 체계와 개인화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온라인 회답요청 접수·응답 시스템 구축 및 UI/UX 개선<br>▪ 회답 담당자-이용자 간 실시간 소통 기능 마련<br>▪ 입법 관심사·질의 이력 기반 맞춤형 분석 체계 마련<br>▪ 회답 이력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구축 |
| 실행주체 및 조직 | 의회정보실, 법률정보실, 정보기술개발과 |
| 기대효과 | ▪ 회답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br>▪ 의원 맞춤형 회답 제공 역량 강화<br>▪ 이용자 만족도 증대<br>▪ 회답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기반 확보 |

## 4.3.2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

### 1) 핵심 전략 방향

국회도서관은 입법활동과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국가적 정보 인프라로서, 방대한 지식정보 자원을 수집·축적해왔다. 그러나 단순한 정보의 축적과 제공만으로는 고도화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수집된 자료를 구조화된 데이터로 전환하고, 이를 분석·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 기술의 도입, 이용자 수요의 개인화·세분화 추세는 도서관의 기능을 ‘데이터 중심의 분석 기반 기관’으로 재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도서관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전략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설정될 수 있다.

① 데이터의 핵심 자원화 및 활용 기능 강화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자료를 단순한 이용 대상이 아닌 ‘분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

하기 위해, 자료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데이터로의 구조화 및 활용 기능을 정비해야 한다. 이용자 행동 패턴 분석, 장서개발, 서비스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적용하고, 데이터 중심의 질의응답, 맞춤형 큐레이션 등 지능형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분석정보를 생성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기능 중심 조직개편 및 융합형 전문인력 확보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통적인 도서관 업무 중심의 조직 구조에서 벗어나 기능별 전문성이 확보된 조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처리, 디지털 보존, AI 기술 적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이 요구되며, 데이터 큐레이터, 주제전문사서, IT 및 AI 전문가 등 융합형 전문인력의 확보 및 배치가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

③ 기관 간 협력 및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회도서관은 소장 데이터의 주제적 특수성과 규모의 방대함, 내용적 전문성으로 인하여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정부 부처,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공유 및 협력을 통해 통합형 서비스 플랫폼을 마련하고, 원스톱 방식의 의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활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관・기록관・박물관・갤러리 등 문화・지식정보 기관 간의 연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④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및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의 수집, 공유,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온라인 기반 출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전보 출판 환경을 고려할 때 디지털 자료 납본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며, 저작권・보안 관련 이슈를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데이터의 신뢰성・최신성・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 체계와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단순한 신기술 도입 차원을 넘어, 도서관의 기능을 ‘데이터 중심의 지식 창출기관’으로 재정립하는 근본적인 구조 전환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조, 인력 운영, 외부 협력, 법제도 등 다층적 영역에서의 전환이 병행되어야 하며, 데이터 전문성의 내재화와 공공적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전략적 기능 수행 역량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2) 핵심 기능과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 방향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 전주기를 체계화하고,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적·조직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네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① 메타데이터 및 정보관리 기반 강화

AI 기반 서비스 전환의 출발점은 양질의 데이터와 이를 구성하는 정교한 메타데이터 체계의 구축에 있다.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방대한 정보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구조의 표준화와 자동화, 그리고 데이터 관리체계의 체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제 5] AI 기술 도입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 (단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AI 기반 서비스 구현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메타데이터 구조의 표준화 및 정비를 통해 데이터 활용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기반 마련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현재 보유 자료의 메타데이터 구조 분석 및 개선<br>▪ 기술활용을 통한 자동분류 도입 가능하도록 간략 MARC 사용 등 관련 정책 조정<br>▪ AI 분석에 적합한 메타데이터 필드 표준화 및 다국어 대응 체계 정비<br>▪ 시맨틱기반의 구조 설계를 통해 기계 판독 및 처리 효율 향상 |
| 실행주체 및 조직 | 전자정보제작과, 정보기술개발과, 자료조직과 |
| 기대효과 | ▪ AI 기반 서비스 구현을 위한 메타데이터 품질 향상<br>▪ 검색·분석 정밀도 제고, 자동화 기반 확보 |

**[과제 6] AI 서비스 적용 기반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단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AI·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 저장·관리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내·외부 자원 연계를 강화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 역량 갖춘 전문조직 및 인력 확보<br>▪ 인공지능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위한 저작권 관련 업무 수행<br>▪ 데이터 저장·운영 시스템 구조 개선 및 API 연계 체계 구축<br>▪ 내부 정보와 외부 공공데이터·정책자료의 통합 관리<br>▪ 데이터 보존·갱신·연계 기준 마련 및 관리체계 설계 |
| 실행주체 및 조직 | 기획담당관실, 정보관리국 |
| 기대효과 | ▪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서비스 제공 기반 확보<br>▪ 정보자원의 통합 관리와 서비스 효율성 강화 |

**[과제 7] AI 기반 자동추출 MARC 체계 도입 (중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수기 중심 메타데이터 작성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AI 기반 자동화로 정확성과 일관성 강화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AI 기반 메타데이터 자동생성 알고리즘 도입·학습 모델 구축<br>▪ 자동생성된MARC 데이터 검수·보완 프로세스 설계<br>▪ 기존 수기 작성과 병행 적용 후 단계적 전환<br>▪ 분류번호 자동부여, 메타데이터 자동 추출 등 연구 |
| 실행주체 및 조직 | 자료조직과, 정보기술개발과, 전자정보제작과 |
| 기대효과 | ▪ 메타데이터 작성 효율성과 정확성 향상<br>▪ 자동화 기반으로 인력 운영 효율 제고 |

②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

지능형 검색 및 큐레이션 등 정보탐색 전 과정에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탐색 효율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 검색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정보지원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과제 8] AI·데이터 기반 지능형 검색서비스 고도화 (단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이용자의 정보 탐색 과정에서 검색 효율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순 키워드 기반 검색에서 벗어난 AI 기반 지능형 검색 기능 도입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다국어·주제 기반 탐색, 유사 문헌 추천 기능을 갖춘 AI 검색 시스템 도입<br>▪ AI 모델을 활용한 연관 검색어 자동 제안 및 주제어 분석 기능 적용<br>▪ 검색결과의 시각화 및 정렬 기능 개선을 통한 탐색 편의성 강화<br>▪ 메타데이터 연계 기계학습으로 검색 정확도 강화 |
| 실행주체 및 조직 | 전자정보정책과, 데이터융합분석과, 정보기술개발과 |
| 기대효과 | ▪ 탐색 과정에서의 정보 누락 최소화<br>▪ 다양한 언어·주제 환경에서도 직관적이고 풍부한 검색 경험 제공<br>▪ 정책정보, 입법자료 등 고급정보 접근성 확대 |

**[과제 9] 맞춤형 큐레이션 및 추천 서비스 개발·강화 (중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개인화된 정보 수요에 대응해 AI 기반 자료 추천·큐레이션 서비스로 이용 경험 향상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관심 주제·검색 이력·이용 패턴 기반 추천 알고리즘 구축<br>▪ AI 기반 콘텐츠 큐레이션 시스템 도입 및 시각화 기반 추천 서비스 개발<br>▪ 장서·전자자원 메타데이터 연계와 연계된 큐레이션 도구 개발<br>▪ 초기 파일럿 테스트 및 이용자 피드백 반영을 통한 알고리즘 정교화 |
| 실행주체 및 조직 | 정보기술개발과, 자료조직과 |
| 기대효과 | ▪ 이용자별 맞춤 정보 제공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및 활용도 제고<br>▪ 도서관 자료에 대한 이용률 증대 및 추천 기반 의사결정 지원 강화 |

**[과제 10] 통합형 AI 에이전트 단계적 구현 (장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서비스(검색, 질의응답, 추천 등)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AI 기반 플랫폼을 구축, 단일 인터페이스 기반 정보 접근 지원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검색, 추천, 질의응답 기능을 통합한 AI 에이전트 플랫폼 기획 및 단계적 구축<br>▪ 내·외부 데이터 연계 기반의 자동화된 지식 응답 기능 구축<br>▪ 자연어 질의 처리, 대화형 검색, 맞춤 응답 추천 등 고도화된 AI 모듈 적용<br>▪ 이용자 응답 데이터 누적을 통한 지속적 성능 개선 및 학습 구조 마련 |
| 실행주체 및 조직 | 정보기술개발과, 전자정보정책과, 외부 기술 협력기관(필요 시) |
| 기대효과 | ▪ 이용자 중심의 통합형 정보 이용 환경 구축<br>▪ 도서관 서비스 접근성 및 활용성 극대화<br>▪ 의정활동 등 고난도 정책정보 이용 수요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③ 이용자 경험 개선 및 분석 기반 서비스

지능형 정보서비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이용경험을 최적화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 정보이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직관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용자 행태 분석을 통해 개인화된 정보 제공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같다.

**[과제 11] 이용자 중심 UX/UI 및 뷰어 개선 (단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디지털 정보 이용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기기·매체 환경에서 정보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페이스 개선 필요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검색 화면, 서비스 메뉴, 자료 뷰어 등 주요 인터페이스 재설계<br>▪ 모바일·다매체 환경 대응을 위한 화면 구성 및 정보 구조 개편<br>▪ 화면 요소 단순화 및 시각적 집중도 향상 설계<br>▪ 정보 접근 흐름 개선을 위한 이용자 여정 기반 UI 최적화 |
| 실행주체 및 조직 | 법률정보총괄과, 정보기술개발과, 전자정보정책과, 국회부산도서관(기획관리과, 정보서비스과) |
| 기대효과 | ▪ 다양한 매체 환경에서의 정보 접근성 향상<br>▪ 이용 편의성 개선을 통한 만족도 제고<br>▪ 디지털 서비스 이용률 및 효율성 증가 |

**[과제 12] 이용자 행태분석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중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개인화된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정보 제공 전략을 체계화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로그·피드백·이용 이력 기반 행태 데이터 수집·통합 분석<br>▪ 이용자 유형별 정보 수요 패턴 분류 및 예측 모델 개발<br>▪ 개인화 알고리즘 시범 운영 및 추천 시스템 점진적 고도화<br>▪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기획 및 적용 |
| 실행주체 및 조직 | 정보기술개발과, 데이터융합분석과, 외부 AI 전문기관(협업 가능) |
| 기대효과 | ▪ 정보 탐색 효율성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br>▪ 개인화 서비스 기반의 전략적 정보 제공 체계 마련<br>▪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지속적 서비스 개선 가능성 확보 |

④ 조직 인프라 및 운영체계 정비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와 기술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AI 기반 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융합형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내부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기술적 기반으로서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조직 차원의 운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제 13]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력자원 확보 (단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전반을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 배치 체계 정비 필요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데이터 분석, 메타데이터 자동화, 정책사례 구축 등을 위한 직무 정의 및 역량 모델 설정<br>▪ 회답 지원 고도화 등 중점사업 맞춤 인력 확보 계획 수립<br>▪ 외부 AI・데이터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 방안 검토<br>▪ 내부 인력 재배치 및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
| 실행주체 및 조직 | 기획담당관실, 데이터융합분석과, 전자정보제작과(+ 데이터융합분석과 인력 증원 필요) |
| 기대효과 | ▪ 데이터 기반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br>▪ 주요 전략사업의 지속적 추진 기반 마련<br>▪ 인력 재구성과 협업체계 개선을 통한 조직운영 효율성 향상 |

**[과제 14] AI 서비스 강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시범 구축・확대 (중기-장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AI 기반 정보서비스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인프라 확보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AI 서비스 연계 데이터의 저장・분석・보존을 위한 통합 데이터센터 설계<br>▪ 보안성, 확장성, 안정성 기반의 시스템 인프라 구축<br>▪ 회답, 검색, 큐레이션 등 AI 기반 서비스의 연계 운영 환경 마련<br>▪ 데이터센터 운영 전담조직과 유지보수・백업・모니터링 체계 수립 |
| 실행주체 및 조직 | 데이터융합분석과, 정보기술개발과 |
| 기대효과 | ▪ AI 기반 서비스 전반의 안정적 운영 환경 확보<br>▪ 고부하 처리, 대규모 데이터 연계 등 기술적 확장성 확보<br>▪ 국회도서관 정보 인프라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 |

### 4.3.3 콘텐츠 수집 및 보존 기능 강화

#### 1) 핵심 전략 방향

지식정보자원의 축적과 보존은 도서관 고유의 근본적 역할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며 그 범위와 방식에 변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전통적 인쇄자료 중심 정보자원 수집에서 디지털・데이터 중심 수집으로, 단순한 축적 및 보관을 넘어 데이터의 통합 분석을 통한 고부가가치 정보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 또한 새롭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영역이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국회도서관의 콘텐츠 수집 및 보존 기능은 다음 다섯 가지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① 수집・보존 대상의 확장과 통합 관리

국회도서관은 기존 인쇄자료 중심의 체계에서 디지털・데이터 중심의 체계로 수집・보존 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과 관련된 각종 기록물에 대해 체계적인 수집・보존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주제별 특화 자료의 연계 수집 방안을 모색하여 ‘라키비움(Larchiveum)/글램(GLAM)’ 모델을 도입한 관리운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② 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 및 전문인력 확보

수집・보존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업무 유형별 조직 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 보존, 데이터 처리, 기록물 분석 등 기능 중심의 조직 운영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정기록물 관리, 디지털 아카이빙 등 특수 분야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능 조직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배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데이터 큐레이터, 주제전문사서, 디지털 보존 전문가 등 융합형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통해, 변화하는 콘텐츠 유형과 기술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③ 콘텐츠의 적극적 활용 기반 구축

수집된 콘텐츠를 단순 보관의 대상이 아닌, 국민과 국회의 정보 활용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용자 접근성과 활용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물리적 창고 중심의 보존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열람・검색・재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콘텐츠 활용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서의 역할도 기존의 수집・정리에 머물지 않고, 콘텐츠 큐레이션, 데이터 분석, 의미 기반 정보 재가공 등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검색・분석 체계를 병행 구축하여, 증거 기반의 고부가가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콘텐츠 수집 및 보존 기능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는, 디지털자료 납본, 의정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공공데이터 공유・활용 등을 포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어야 한다. 디지털 자원의 납본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와 함께, 국회 내외 공공기록물의 수

집, 보존 기준 마련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콘텐츠 활용에 있어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법률적 제약 요인을 명확히 정리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⑤ 국회기록원 설립에 따른 콘텐츠 수집·보존의 연계

국회기록원의 설립은 콘텐츠 수집·보존 기능의 구조적 재정비를 요구하는 주요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조직의 분리가 아닌 독립과 연계를 기반으로한 새로운 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으로 국회도서관 운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고려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직제 마련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기존 체계와의 연계(기록물 이관 절차, 데이터 통합 등)를 통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콘텐츠 수집·보존 체계의 재정비는 단순한 정보의 축적을 넘어 AI 기반 검색·분석 시스템을 연계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국회도서관이 지식정보자원의 선순환적 활용을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집·보존 기능의 전략적 재구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2) 핵심 기능과제**

콘텐츠 수집 및 보존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지식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은 수집·처리 과정의 자동화, 아카이빙의 전문화, 디지털 콘텐츠 관리와 법제도 정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확산 등 네 가지 방향에서 구체적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① AI 기반 수집·처리 자동화

대량으로 생산되는 디지털 자료와 의정기록을 기존의 수작업 방식으로 처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 면에서 한계가 크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료 분류, 메타데이터 입력, 디지털화 작업을 자동화하지 않는다면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보존 자료의 품질에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업무 현장에서 가장 소모적인 절차들을 AI 기반으로 대체하여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전문 인력이 분석·검증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과제 15]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단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콘텐츠 수집·분류·보존 과정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여, 인력 소요 절감 및 처리 정확도 향상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AI 챗봇서비스 활용하여 민원 대응 업무 자동화<br>▪ AI 기반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콘텐츠 자동 분류 기능 도입<br>▪ OCR·자동 메타데이터 추출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된 자료 수집 자동화<br>▪ 동영상 DB 구축업무에 AI 자막 자동생성 기술 도입<br>▪ 반복성이 높은 보존 대상 선별 및 등록 업무 자동화 알고리즘 개발 |
| 실행주체 및 조직 | 데이터융합분석과, 정보기술개발과, 자료조직과, 전자정보제작과 |
| 기대효과 | ▪ 수집·보존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도 향상<br>▪ 사서의 고부가가치 업무 집중 가능<br>▪ 수집 콘텐츠 처리 속도 및 일관성 제고 |

② 디지털 보존 및 아카이빙 전문화

디지털 자원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회도서관은 자료의 단순한 디지털화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보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인프라와 관리방식만으로는 대규모 디지털 자료의 수명주기 관리, 재해 복구, 접근성 확보를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국회의 입법·의정 활동을 기록한 자료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공개하고, 민간·시민사회가 생산한 기록물까지 포함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기록 관리의 공백과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장기보존 시스템 정비, 디지털 전시관 운영, 민관 협력 아카이브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아카이빙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제 16] 디지털자료 장기보존 시스템 및 인프라 고도화 (중기-장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디지털 콘텐츠의 안정적 축적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수명주기 기반 장기보존 체계와 기술 인프라를 정비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장기보존을 위한 포맷 변환 및 무손실 저장체계 마련<br>▪ 다중 백업 및 이중화된재해복구(DR) 시스템 구축<br>▪ 메타데이터 중심의 접근성 및 이력 관리 기능 고도화 |
| 실행주체 및 조직 | 전자정보정책과, 데이터융합분석과, 정보기술개발과, 열람봉사과, 국회부산도서관(기획관리과) |
| 기대효과 | ▪ 디지털 자원의 영구 보존 기반 확립<br>▪ 자료 유실 및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력 강화<br>▪ 미래세대를 위한 기록 정보의 신뢰성 확보 |

**[과제 17] 입법사·의정사 디지털 전시관 구축 (장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국회의 입법 및 의정활동에 관한 역사적 기록과 자료를 디지털 공간에서 전시·공유함으로써 국민 인식 제고 및 공공 정보의 가치 확산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입법사관련 기록물, 콘텐츠, 영상자료 등 디지털 아카이빙<br>▪ 온라인 기반 가상전시 플랫폼 구축 및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br>▪ 의정활동 연표·이슈 중심 콘텐츠 구성 및 큐레이션 |
| 실행주체 및 조직 | 국회기록보존소, 전자정보정책과, 정보기술개발과 |
| 기대효과 | ▪ 국회 의정역사의 체계적 정리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br>▪ 국회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콘텐츠 활용성 확대<br>▪ 교육·연구·대국민 서비스 자료로의 활용도 증대 |

**[과제 18] 공공·민간 기록물 협력형 아카이브 (장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민간·시민사회·NGO 등이 생산한 입법 관련 기록물의 보존과 공유 기반을 마련하여, 입법 기록의 사회적 확장성과 학술적 가치를 높임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민간·비영리기관 생산 입법 관련 문서 수집·디지털화 추진<br>▪ 아카이브 연계 표준 및 메타데이터 설계<br>▪ 국공립 기록기관 및 민간기록보존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
| 실행주체 및 조직 | 국회기록보존소, 법률정보총괄과, 자료수집과, 외부 민간기록기관(협업) |
| 기대효과 | ▪ 공공기록과 민간기록 간의 정보 생태계 확대<br>▪ 다양한 시각의 입법 기록 축적 및 서비스 기반 마련<br>▪ 공적 기록문화 자산으로서의 국회기록 위상 강화 |

③ 디지털콘텐츠 관리 및 법제화 강화

디지털 자료의 급격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의 현행 수집·보존 체계는 법적 근거의 미비와 업무 절차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온라인 납본 제도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학위논문 등 대량 수집 자료의 등록 절차 간소화, 고품질 디지털 컬렉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또한 영화·신문·음원 등 다양한 매체의 디지털 자료가 늘어나면서, 매체 특성을 반영한 보존 인프라와 전문 수장고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수장 공간 부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수요예측 기반의 확장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은 법·제도 정비와 함께 수집·관리·보존 체계를 다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과제 19] 「국회도서관법」 개정 대비 온라인 납본 업무 수행체계 마련 (단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온라인 콘텐츠 증가에 따른 납본제도 확대에 대비하여,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와 시스템 체계를 사전에 마련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온라인 자료 납본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대응 체계 구축<br>▪ 납본 대상 유형 및 절차 표준화<br>▪ 디지털 납본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반 마련 |
| 실행주체 및 조직 | 기획담당관실, 자료수집과, 자료조직과, 정보기술개발과 |
| 기대효과 | ▪ 온라인 자료의 안정적 수집 및 법적 근거 확보<br>▪ 디지털 콘텐츠 자원의 장기적 보존 기반 강화<br>▪ 수집 공백 해소 및 도서관의 공적 수집기능 확대 |

### [과제 20] 학위논문 관련 업무 간소화 (중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학위논문 수집·등록·보존 과정의 업무 복잡도를 완화하고, 연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관리 효율성 향상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학위논문 수집·등록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및 전자화<br>▪ 연계기관(대학 등)과의 메타데이터 연동 자동화 체계 구축<br>▪ 원문 제공 절차의 개선 및 저작권 관련 검토체계 마련 |
| 실행주체 및 조직 | 전자정보제작과, 정보기술개발과, 자료수집과 |
| 기대효과 | ▪ 학위논문 등록 및 관리 효율성 제고<br>▪ 외부기관 연계 기반의 수집체계 정비<br>▪ 자료 제공 및 활용 활성화 기반 확보 |

### [과제 21] 고품질 디지털 컬렉션 구축 (중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기존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해상도화 및 정제된 디지털 컬렉션을 구축하고, 검색·열람의 품질을 제고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주요 소장자료의 고화질 디지털화 및 컬렉션 단위 정비<br>▪ 주제별·사료별 큐레이션 중심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성<br>▪ 디지털 컬렉션 통합 열람 인터페이스 개선 |
| 실행주체 및 조직 | 전자정보제작과, 정보기술개발과, 자료수집과, 국회기록보존소(기록정책과) |
| 기대효과 | ▪ 고품질 콘텐츠 기반의 연구 및 학습 지원 강화<br>▪ 핵심자료 중심의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고도화<br>▪ 이용자 만족도 및 열람 효율성 제고 |

**[과제 22] 다매체 디지털자료 관리체계 및 특화 수장고 정비 (장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영화, 음악, 신문 등 비출판매체의 보존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매체별특성을 반영한 전문 관리체계와 보존 인프라 마련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영화·음악·신문 등 비출판콘텐츠의 수집·보존 절차 정립<br>▪ 매체별형식 및 메타데이터 기준 마련<br>▪ 특화 수장고(디지털 및 물리) 설계 및 공간 확보 계획 수립 |
| 실행주체 및 조직 | 정보기술개발과, 자료수집과, 자료조직과 |
| 기대효과 | ▪ 매체 다양성에 기반한 콘텐츠 보존 역량 강화<br>▪ 장기적 수요에 대비한 수장 인프라 확보<br>▪ 공공 디지털 아카이빙역할 확대 |

**[과제 23] 보존서고 수요예측 기반 확장계획 수립 (중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기존 보존서고의 공간 한계에 대비하여 장기적 수요를 예측하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통해 수집·보존 기능의 지속성을 확보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향후 10년-30년 단위의 수장 수요 예측 모델 구축<br>▪ 매체별 성장률 및 보존 기준 반영한 시나리오 설계<br>▪ 공간 재배치 및 신규 서고 확보를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 |
| 실행주체 및 조직 | 기획담당관실, 자료수집과, 열람봉사과, 국회부산도서관(정보관리과), 시설관리부서(협조) |
| 기대효과 | ▪ 장기적인 수장 공간 확보 및 서비스 지속성 보장<br>▪ 수집정책과 공간정책 간의 연계 강화<br>▪ 이용자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보존기능 수행 |

④ 지역기반 콘텐츠 확산

국회도서관은 그동안 중앙집중적 수집·보존 체계에 치중해 왔으나, 지역 차원의 특화자료와 정책정보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다. 지역도서관이나 지자체가 보유한 자료를 디지털화해 공유하지 않는다면, 지역문화 자산이 단절되고 정보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민의 정보 이용 행태가 영상·시청각 중심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국회도서관 차원의 전문적인 콘텐츠 제작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지역 특화자료의 체계적 큐레이션과 영상콘텐츠 제작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역 기반의 지식정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대국민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제 24] 지역정보 큐레이션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중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지역 특화자료를 발굴·디지털화를 통해 지역문화와 정책정보의 확산을 도모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지역정보 활용성을 제고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지역별 특화자료(문화, 정책, 역사 등) 발굴 및 주제별 콘텐츠 큐레이션<br>▪ 지역도서관·지자체와 협력한 콘텐츠 제작·공유 사업 추진<br>▪ 지역 기반 콘텐츠 데이터셋 구축 및 서비스화 |
| 실행주체 및 조직 | 기획담당관실, 데이터융합분석과, 국회부산도서관(정보관리과) |
| 기대효과 | ▪ 지역문화 정보의 디지털화 및 전국적 확산 기반 마련<br>▪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 정보 접근성 향상<br>▪ 지역연계 정보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과제 25]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전문인력 확보 (단기-중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시청각 기반 정보이용 확산에 대응하여, 고품질 영상 콘텐츠 제작 역량 확보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기획·촬영·편집 등 영상 제작 전문인력 확보 및 외부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입법 및 정책 관련 콘텐츠의 홍보·교육용 영상 기획<br>▪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대국민 콘텐츠 확산 전략 마련 |
| 실행주체 및 조직 | 기획담당관실, 국회기록보존소(기록정책과), 국회부산도서관(기획관리과) |
| 기대효과 | ▪ 국회도서관 콘텐츠의 전달력및 대외 인지도 제고<br>▪ 국민 대상 정보서비스의 다양성과 경쟁력 강화<br>▪ 입법 정보의 시청각 활용도 제고 |

### 4.3.4 거버넌스 체계 구축

#### 1) 핵심 전략 방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국회도서관이 데이터 기반의 통합적 지식정보 허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은 본관과 분관, 지방의회, 그리고 국내외 유관 기관을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분산된 자원을 연결하고 전문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특히 분관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의회 지원 강화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적 지식정보 역량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라키비움(GLAM) 모델을 기반으로 한 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는 도서관·기록

관·박물관 기능의 통합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단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과 제도적 연계가 요구된다.

① 분관의 기능적·지역적 거점화

국회도서관의 분관은 지역 특성과 정책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으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부산관은 사회과학 분야와 국회 라키비움 운영을 중심으로, 세종관은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입법 지원을 중심으로, 광주관은 호남권 의정 지원과 GLAM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각 관의 정체성에 기반한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화된 기능을 기반으로 본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단위의 균형적 지식정보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지방의회 지원 기능 강화

정보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회를 위하여 전문 의정 정보서비스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구별 맞춤형 정보 제공, 의원 연구단체 지원, 의정 자료 공유 등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방의회 자료실과의 역할분담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중복과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 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국회도서관은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통합하는 라키비움 모델을 토대로, 국가 대표 문화유산 기관과 국가 학술 정보망과의 협력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정보교류를 기반으로 협력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점차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법적 기반과 제도적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거버넌스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단순한 협력 구도를 넘어, 전문인력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정착해야 한다. 분산된 지식자원의 통합 연계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지식정보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2) 핵심 기능과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내부의 조직·인프라 혁신과 함께 지방 및 대외 협력망 강화, 특화 사업과 제도적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세 가지 핵심 기능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① 조직 및 디지털 인프라 혁신

국회도서관은 현재 시소러스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디지털 전략 수립 등 핵심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관리 효율성과 품질 관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본관과 분관 간 시스템 통합, 지방의회 지원을 위한 연계 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의 일원화와 인프라 재정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데이터와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전략을 전담할 전문 부서를 신설하여 기능 단위로 조직을 재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과제 26] 시소러스 구축조직 일원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단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시소러스 구축 업무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데이터 중복·관리 비효율 발생. 단일 부서 전담을 통해 품질 관리와 운영 효율성 제고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시소러스 구축 및 원천데이터 생산 업무를 자료조직과로 이관<br>▪ 부서 간 중복 해소 및 데이터 관리 표준화 체계 정립 |
| 실행주체 및 조직 | 전자정보정책과, 데이터융합분석과, 자료조직과 |
| 기대효과 | ▪ 데이터 관리 일원화를 통한 품질 제고<br>▪ 유사 업무 중복 해소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향상<br>▪ 통합형 정보서비스 기반 마련 |

**[과제 27] 정보시스템 재조직화 (중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분관 확산과 지방의회 협력 확대에 대응해, 분산된 정보시스템을 통합·재정비하여 운영 효율성 확보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본관-분관 간 시스템 연계 구조 설계 및 운영 체계 개선<br>▪ 지방의회 대상 전문정보 연계시스템 구축<br>▪ 검색, 회답, 통계 등 기능별 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체계 마련 |
| 실행주체 및 조직 | 법률정보실, 의회정보실, 전자정보정책과, 정보기술개발과 |
| 기대효과 | ▪ 본관-분관 간 정보서비스 통합운영 기반 확보<br>▪ 지방의회 맞춤형 정보지원의 효율성 강화<br>▪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의 체계화 |

**[과제 28] 디지털전략 전담부서 신설 및 조직 개편 (중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데이터·AI 기반 서비스 확대에 대응해, 디지털 전략을 전담하는 조직체계 필요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디지털 전략 수립 및 데이터 거버넌스 담당 전담부서 신설<br>▪ 정보서비스, AI 기반 회답, 데이터 분석 등 기능 단위 재편<br>▪ 정책기획 기능과 기술 운영 기능의 전략적 분리 및 협업 구조 설계 |
| 실행주체 및 조직 | 기획담당관실, 전자정보정책과, 정보기술개발과, 데이터융합분석과 |
| 기대효과 | ▪ 데이터 기반 전략 추진 역량 강화<br>▪ 기능 중심 조직체계 확립<br>▪ 디지털 전환 관련 부서 간 유기적 거버넌스 확보 |

② 지방 및 대외협력 체계 고도화

국회도서관은 본관 중심의 정보 제공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전문적 입법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고, 분관 확대에 따라 운영 기준과 성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기능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정보 자원의 공유와 협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면 정보 활용의 폭이 제한되고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은 지방의회 맞춤형 정보서비스 강화, 분관 운영 표준화와 평가 체계 마련,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확대, 그리고 국제개발협력(ODA) 기반 정보서비스 사업까지 포함하는 다층적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회도서관은 지방 균형발전, 국가적 지식정보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협력의 허브라는 역할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

**[과제 29] 지방의회 지원 및 지역기반 서비스 고도화 (중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정보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문화된 의정정보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국회도서관의 지역기반 지원을 강화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지방의회 수요에 맞춘 의정·정책정보 큐레이션 및 제공체계 구축<br>▪ 지역구별 현안·이슈 기반 자료 수집 및 맞춤형 정보 제공<br>▪ 지역 도서관·자료실과 연계한 공동 서비스 모델 마련<br>▪ 지역별 이용자 대상 교육·홍보 및 원격 회답 지원 기능 강화 |
| 실행주체 및 조직 | 기획담당관실, 정치행정정보과, 자료수집과, 국회부산도서관(기획관리과, 정보서비스과) |
| 기대효과 | ▪ 지방의회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입법활동 지원 역량 강화<br>▪ 지역정보서비스의 확산을 통한 균형적 지식정보 체계 확립<br>▪ 국회도서관의 대국민 서비스 위상 제고 및 정책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

### [과제 30] 지역거점관 간 운영지침 및 역할표준 수립 (단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분관 확대에 따라 지역거점관 간 기능 중복 방지 및 역할 차별화를 위한 통합적 운영기준 수립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지역거점관의 기능별 역할 정의 및 차별화 방안 마련<br>▪ 공통 운영 지침 및 서비스 표준 매뉴얼 작성<br>▪ 분관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설계<br>▪ 운영주체 간 협력·조정 체계 설정 |
| 실행주체 및 조직 | 기획담당관실, 국회부산도서관(기획관리과),(+ 분관 관리(지원) 전담부서 신설) |
| 기대효과 | ▪ 분관 간 기능 중복 최소화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br>▪ 지역 특화 기능의 명확화 및 분관 전략적 운영 기반 확보 |

### [과제 31] 지역거점관을 위한 운영평가 체계 마련 (중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분관 운영의 성과와 효과성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정성·정량 지표를 결합한 분관 운영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br>▪ 주기적 평가를 통한 피드백 및 개선 전략 마련<br>▪ 평가결과 기반 인센티브 및 제도개선 연계 방안 검토 |
| 실행주체 및 조직 | 기획담당관실, 국회부산도서관(기획관리과, 협업),(+분관 관리(지원) 전담부서 신설) |
| 기대효과 | ▪ 분관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br>▪ 성과 기반의 전략적 자원 배분 및 개선 추진 가능 |

### [과제 32] 국내외 유관기관 데이터·서비스 공유·연계·협력 확대 (장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도서관의 정보자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가적 정보 생태계 내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기반 확대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국내 학술정보·문화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및 공동서비스 추진<br>▪ 국제도서관·기록기관과의 자료 교환·공동 프로젝트 개발<br>▪ 메타데이터 공유 및 상호 검색체계 구축<br>▪ 공동 데이터플랫폼 또는 지식네트워크 구축 참여 |
| 실행주체 및 조직 | 기획담당관실, 의회정보실, 법률정보실, 전자정보정책과, 데이터융합분석과, 자료수집과, 국회기록보존소(기록정책과), 국회부산도서관(기획관리과) |
| 기대효과 | ▪ 정보서비스의 범위 및 품질 향상<br>▪ 국회도서관의 국내외 정보 협력 허브로서의 위상 강화 |

**[과제 33] 국제협력형 ODA 정보서비스 사업 진행 (중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입법 지원 시스템 ·도서관 운영 노하우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해 민주주의 발전과 국회도서관의 국제 위상 제고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국회도서관의 도서관 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전환 노하우 공유<br>▪ 개발도상국 의회도서관 직원, 입법보좌관 등 대상 연수프로그램 진행<br>▪ 입법연구·정책분석·정보리터러시·디지털전환 등 전문성 교육<br>▪ 의회도서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ODA 포럼 정기 개최(사업 노하우·수요·사례 공유) |
| 실행주체 및 조직 | 기획담당관실, 공공정책정보과, 전자정보정책과, 정보기술개발과 |
| 기대효과 | ▪ 국제 의회도서관 분야에서 국회도서관의 리더십과 전문성 확립<br>▪ 수원국 디지털 격차해소 및 의회업무 효율성 향상 기여<br>▪ 수원국의 의회, 국제기구, NGO 등과 장기적·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국회도서관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br>▪ ODA 사업 경험을 통한 내부 인력 역량 강화 |

③ 특화사업 및 제도지원 강화

거버넌스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특화된 사업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거점에 디지털 융합형 문화·정보 공간을 조성해 국민 체험과 참여를 확대하고, 온라인 납본과 디지털 자원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회도서관이 국가 차원의 입법·정책 지원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입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현안이 국가 법제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과제 34] 융합형 복합문화공간 및 디지털화 활성화 (장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융합형 콘텐츠 공간 조성과, 도서관·기록관·박물관 통합모델(GLAM, Larchiveum) 기반의 서비스 확장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지역 거점에 복합 문화·정보 공간 조성(전시·체험·교육 기능 통합)<br>▪ GLAM 모델 기반 디지털 콘텐츠 체험 및 큐레이션 공간 설계<br>▪ 디지털 트윈, 인터랙티브 기술 등 활용한 전시 서비스 도입 |
| 실행주체 및 조직 | 기획담당관실, 정보기술개발과, 국회부산도서관(기획관리과, 정보서비스과) |
| 기대효과 | ▪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 기회 확대 및 문화 향유 기반 강화<br>▪ 통합형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관 위상 제고<br>▪ 디지털 전환에 부응하는 차세대 콘텐츠 공간 인프라 구축 |

### [과제 35] 저작권 전담부서 신설 및 디지털콘텐츠 활용체계 강화 (중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디지털자료·온라인 납본 확산에 따라 저작권 관련 제도 정비와 전담조직이 필요<br>공공기관 간 자료 공유·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여 정보 접근성을 향상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저작권 업무 전담조직 신설 및 디지털자료 관리 부서와의 협업 강화<br>▪ 디지털자료 납본·서비스 관련 법률 및 내부 규정 정비<br>▪ 저작권·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확충 및 내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br>▪ 출판사·저작권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
| 실행주체 및 조직 | 저작권 전문 전담조직 신설 필요 |
| 기대효과 | ▪ 디지털 자료 활용과 서비스 안정화<br>▪ 수집·보존 체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br>▪ 국가 차원의 저작권 관리 체계 확립 |

### [과제 36] 국회도서관 기반 중앙-지방 입법 연계 지원 (장기)

| | |
|---|---|
| 필요성 및 목적 | 국회도서관의 입법 지원 전문성을 국가 차원으로 확장하여 지방현실을 중앙 법령·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가교 역할 수행 |
|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 ▪ 분관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지방의회와의 지속적 협력 - 현행 지방자치법 및 개별 상위법의 제도적 한계 개선 방안 모색 지원<br>▪ 지자체·지역대표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 지자체의 입법수요를 수집하고 이를 입법·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되도록 정보 전달 체계 마련<br>▪ 중앙-지방 연계 강화를 위한 지방-중앙 입법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지원 |
| 실행주체 및 조직 | 기획담당관실, 자료수집과, 정보기술개발과, 국회부산도서관 기획관리과, 지자체, 지역대표도서관, 광역대표도서관 |
| 기대효과 | ▪ 국회도서관의 축적된 입법 지원 노하우를 국가 차원으로 확장<br>▪ 입법 지원기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의 사회적 기여도 및 위상 확립<br>▪ 조례 및 지방정책의 질적 개선을 통한 국가 전체 입법 품질 향상에 기여<br>▪ 지역별 특화 정책 개발 지원 및 지방의 자율적 발전 역량 강화 |

# 제 5장 국회도서관 조직 및 기능 개편 방향

국회도서관의 조직과 기능 개편은 단순한 구조 조정 차원을 넘어, 디지털 전환과 정책 환경 변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문헌 및 사례 조사, 내·외부 환경 분석 통해 국회도서관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분석한 결과 국회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와 개선 과제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회도서관 조직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하고, 단계별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5.1 전략기능 중심 개편 방향

### 5.1.1 회답 지원 서비스

#### 1) 개편 방향

국회도서관의 회답 서비스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능으로 입법 활동과 정책 심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가짜뉴스와 편향 정보가 확산되며, 회답 서비스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중요해지고, 정치 참여에 대한 국민 의식 확대로 인해 입법과정에서의 전문성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회답 지원 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의 회답 서비스는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면서도 고품질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반영한 개편 전략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뢰성 기반의 회답 지원체계 확립

회답 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만의 전문 조사 역량과 사서의 분석 역량을 활용하여 단순한 사실 제공을 넘어, 입법 및 정책 심의 과정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고품질의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기적 피드백 체계를 제도화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담당자와 이용자 간의 긴밀한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허위 정보와 왜곡된 데이터가 범람하는 환경 속에서 국회도서관은 의정 현안과 관련해 사실 검증과 공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최종적 신뢰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② 이용자 맞춤형 회답 서비스 및 데이터 기반 분석 지원

이용자 행태와 선호를 분석하여 맞춤형 회답을 제공하고, 법률정보와 다양한 데이터 자원을 연계해 고부가가치 자료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의원실이나 상임위원회가 정책 심의 과정에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허위·오류 정보에 대한 판별 기능을 강화하여 정보의 공적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다국어 및 전문 번역서비스 확대

입법 현안의 국제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외국 입법사례, 정책자료, 국제조약 및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크게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AI 기반 번역 기술을 도입하여 회답 서비스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문 사서의 검증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외국 정책자료 번역 및 요약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외국어 법률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여 반복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④ 조직 구성원의 인식 강화와 국회도서관 핵심 기능으로 확립

회답 지원 서비스를 국회도서관의 부수적 기능이 아니라 핵심 기능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조직 내부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회답 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을 체계화하고, 조사·분석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회답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직무 정체성 확립을 통해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향상과 조직 차원의 기능 고도화를 도모하고, 국회도서관의 대표적 브랜드 기능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조직 전체가 공유하는 핵심 가치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⑤ 회답서비스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및 공공성 강화

국회도서관은 현재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 내부 이용자를 중심으로 회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방대한 고품질 정보자원과 전문적인 정보서비스 역량을 고려할 때, 교섭단체 지원을 시작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일반 국민에게까지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상 범위의 확대는 국회도서관이 국민과 국회를 연결하는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도서관은 정책정보 제공 등 전문화된 회답 서비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고도화된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국회 내부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성과 접근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국회도서관이 국가적 지식정보 허브로 기능을 확장하고, 공공 지식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추진 과제 및 중장기 로드맵

회답 지원 서비스의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한 회답 서비스 개선과 회답 관리시스템의 체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이고 단순한 질의응답을 자동화하고, 회답 과정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은 회답 서비스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단기적 성과를 토대로 AI·데이터 기반의 회답 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연계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더불어 비대면·맞춤형 회답 서비스의 본격적 확장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출처의 지식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온라인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국회도서관 회답 서비스가 단순한 질의응답 차원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의정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AI와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을 통해 회답 지원의 범위와 심도를 확장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회 의정활동 지원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표 34〉 회답 지원 서비스 개편을 위한 추진과제 중장기 로드맵

| 과제 | | 단기 | 중기 | 장기 |
|---|---|---|---|---|
| 1. 회답 지원 서비스 | ① AI 활용 회답 지원 서비스 고도화 및 업무 자동화 | | | |
| | [과제 1] AI 활용 회답서비스 개선 | ○ | | |
| | [과제 2] 회답관리시스템 체계화 | ○ | ○ | |
| | [과제 3] AI·데이터 기반 회답 지원 통합 플랫폼 연계 | | ○ | ○ |
| | ② 이용자 중심 회답 지원 서비스 확장 및 효율화 | | | |
| | [과제 4] 온라인 기반 비대면·맞춤형 회답서비스 확대 | ○ | ○ | |

### 5.1.2 데이터 기반 서비스

#### 1) 개편 방향

미래 지능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국회 입법 및 정책 활동의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정책설계와 입법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입법 수요예측, 정책 분석, 정보제공 등 다양한 의정 지원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국회도서관이 국회 내 데이터 활용 중심 기관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 기반의 입법 및 정책 지원 체계 강화

국회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활용가능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데이터 보급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입법 관련 통계 데이터의 수집・분석・데이터베이스화와 함께 일관된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근거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능해지고, 입법 활동 역시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②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체계 구축

데이터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분석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 성향 및 정보 이용 행태를 파악하고, 자연어 처리 및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검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함께 학습용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서비스 기반의 데이터 분석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③ 데이터 및 플랫폼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산재된 데이터와 플랫폼을 통합・연계함으로써 이용자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와 서비스의 상호 연동성을 확보하고, 통합된 환경에서 고부가가치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데이터 연계 활용에 따른 저작권, 표준화 등 제도적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

#### 2) 추진 과제 및 중장기 로드맵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AI 기술 도입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정비와 지능형 검색 서비스의 고도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AI 기반 자동 추출 체계를 포함한 데이터 관리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용자 중심의 UX/UI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구조화 및 분석 기반을 확보하고, 고품질의 검색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가 구축되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AI 서비스를 적용한 데이터 관리체계의 운영과 함께,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의 고도화, 통합형 AI 에이전트의 단계적 구현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 행태 분석 기반의 서비스 맞춤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 탐색과 정책 자료 접근이 보다 정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내부 운영체계의 정비도 병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AI 서비스 강화를 위한 데이터센터의 시범 구축 및 확대, AI 기반 자동화 메커니즘의 정착, 통합형 에이전트 서비스의 전면 운영 등이 주요 과제가 된다. 이는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방대한 정보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서비스 체계를 완성하는 것으로, 향후 국회의 정책 설계 및 입법활동에 있어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표 35> 데이터기반서비스 개편을 위한 추진과제 중장기 로드맵

| 과제 | | 단기 | 중기 | 장기 |
|---|---|---|---|---|
| 2. 데이터 기반 서비스 | ① 메타데이터 및 정보관리 기반 강화 | | | |
| | [과제 5] AI 기술 도입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 | ○ | | |
| | [과제 6] AI 서비스 적용 기반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 ○ | ○ | |
| | [과제 7] AI 기반 자동추출 MARC 체계 도입 | | ○ | |
| | ②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 | | | |
| | [과제 8] AI·데이터 기반 지능형 검색서비스 고도화 | ○ | | |
| | [과제 9] 맞춤형 큐레이션 및 추천 서비스 개발·강화 | | ○ | |
| | [과제 10] 통합형 AI 에이전트 단계적 구현 | | | ○ |
| | ③ 이용자 경험 개선 및 분석 기반 서비스 | | | |
| | [과제 11] 이용자 중심 UX/UI 및 뷰어 개선 | ○ | | |
| | [과제 12] 이용자 행태분석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 ○ | |
| | ④ 조직 인프라 및 운영체계 정비 | | | |
| | [과제 13]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력자원 확보 | ○ | ○ | |
| | [과제 14] AI 서비스 강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시범 구축·확대 | | ○ | ○ |

### 5.1.3. 콘텐츠 수집 및 보존

#### 1) 개편 방향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자료의 가치와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집・보존・관리 체계의 고도화와 함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기반의 수집・보존 체계를 구축하고, 의정 활동 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과 장기적 보존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콘텐츠 수집 및 보존 체계의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융합형 모델 구현 – 라키비움(Larchiveum), GLAM 모델 도입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갤러리 기능의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 정보자원의 상호 연계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 내 문화유산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통합적 접근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료의 보존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자료 저장을 넘어,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② 의정 활동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역량 강화

의정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존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계해야 한다. 기록물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실에서 발생하는 기록물의 무분별한 분산과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조직적 대응이 요구된다.

③ 디지털 콘텐츠 관리 및 장서 운영의 전문성 강화

온라인・디지털 자료에 대한 수집 체계를 정비하고, 저작권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 문헌의 분산 보존과 이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재난 대비를 위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료의 이중화 보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 서지 작성 및 서지정보 표준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료의 정합성과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 2) 추진 과제 및 중장기 로드맵

콘텐츠 수집 및 보존 기능의 개편은 단기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수집 및 업무 자동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이고 대량의 자료 수집・정리・보존 업무를 자동화하고, 수작업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집 프로세스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도서관법」 개정에 대비한 온라인 납본 체계 마련, 학위논문 관련 업무 간소화, 디지털 컬렉션 구축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수집 기반도 조기에 마련되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디지털 자료의 장기 보존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와 함께, 다매체 디지털 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특화 수장고 및 전시관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사·의정사 디지털 전시관, 공공·민간 협력형 아카이브 등 콘텐츠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정보 큐레이션 및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정보의 지역 균형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보존서고 수요예측 기반의 확장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집·보존 환경을 체계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아카이빙 전문화를 중심으로 고도화된 보존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이는 고품질 콘텐츠의 장기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보, 데이터 기반 보존 정책 수립, 유관 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회도서관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 수집·보존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36> 콘텐츠 수집 및 보존 개편을 위한 추진과제 중장기 로드맵

| 과제 | | 단기 | 중기 | 장기 |
|---|---|---|---|---|
| 3. 콘텐츠 수집 및 보존 | ① AI 기반 수집·처리 자동화 | | | |
| | [과제 15]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 ○ | | |
| | ② 디지털 보존 및 아카이빙전문화 | | | |
| | [과제 16] 디지털자료 장기보존 시스템 및 인프라 고도화 | | ○ | ○ |
| | [과제 17] 입법사·의정사 디지털 전시관 구축 | | | ○ |
| | [과제 18] 공공·민간 기록물 협력형 아카이브 | | | ○ |
| | ③ 디지털 콘텐츠 관리 및 법제화 강화 | | | |
| | [과제 19] 「국회도서관법」 개정 대비 온라인 납본 업무 수행 체계 마련 | ○ | | |
| | [과제 20] 학위논문 관련 업무 간소화 | | ○ | |
| | [과제 21] 고품질 디지털 컬렉션 구축 | | ○ | |
| | [과제 22] 다매체 디지털자료 관리체계 및 특화 수장고 정비 | | | ○ |
| | [과제 23] 보존서고수요예측 기반 확장계획 수립 | | ○ | |
| | ④ 지역기반 콘텐츠 확산 | | | |
| | [과제 24] 지역정보 큐레이션 및 콘텐츠 제작 지원 | | ○ | |
| | [과제 25]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전문인력 확보 | ○ | ○ | |

### 5.1.4 거버넌스 체계구축

#### 1) 개편 방향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은 단일 거점 중심의 운영 체계를 넘어, 복수의 거점을 기반으로 한 분산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서울, 부산, 세종 등 지역 간 역할 분담과 기능 특화가 이루어진 체계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다관 체제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복수 거점 체제를 통한 지역 균형 기반 마련

서울 본관은 전략적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회도서관의 핵심 지식 기반 업무를 총괄하는 중심 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부산관은 국가문헌의 분산 보존 기능을 담당하고, 사회과학 분야 전문장서를 기반으로 지방의회 지원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세종관(건립 예정)은 행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지원 특화 기능을 수행하며, 첨단기술 기반의 협업 공간을 제공하는 실험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거점 간 상호 연계와 기능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유기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지방 의회 지원 기능의 강화

지방의회의 정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국회지방의회정보포털’ 서비스를 확장하고, 분관 내 지방의회 특화 서비스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 의원 연구그룹에 대한 정보 지원과 협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 의정지원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적 차원의 입법정보 지원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③ 전략적 협력체계 및 제도 기반 정비

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외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국회도서관의 전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통합 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복수 거점 운영에 따른 법적·제도적 기반 역시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화 과정은 거버넌스 체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④ 광역과의 연계 강화 필요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역할 또한 중앙-지방 간 입법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이 추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광역 단위의 정책 권한이 확대되고 있다(자치분권위원회, 2018).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제정 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 지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법제처, 2018).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도서관이 중앙과 지방의 입법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으며, 입법지원 전문성을 활용한 제도적 가교 역할이 고려될 수 있다. 국회도서관은 분관 확대와 광역대표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 지자체의 입법수요를 수집하고 이를 입법 및 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광역대표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광역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이를 국회와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국회도서관은 국가적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면서 입법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추진 과제 및 중장기 로드맵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단기적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화와 디지털 인프라 혁신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시소러스 구축, 정보시스템 재조직화, 디지털 전략 전담부서 신설 등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조직 기반을 정비하고, 업무 수행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다관 체제 운영을 위한 내적 역량을 확보하고, 데이터 중심의 전략적 업무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지방 및 대외협력 체계의 고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방의회 지원 기능 강화, 지역기반 서비스 고도화, 지역거점관 간 운영지침 수립 및 역할 표준화 등을 통해 지역과의 연계를 체계화하고, 거점 간 균형적 역할 분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거점관에 대한 운영평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피드백 구조를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내외 유관기관 간의 데이터·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협력형 ODA 정보서비스 사업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국회도서관의 글로벌 위상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특화사업 및 제도 지원 기능이 전략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융합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디지털 콘텐츠 활용 체계 강화, 저작권 관련 전담조직의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제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국회도서관 기반의 중앙-지방 입법 연계 기능은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제도 정비 및 지역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은

국회도서관을 지식정보 거버넌스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시키는 전략적 토대가 될 것이다.

<표 37>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중장기 로드맵

| 과제 | | 단기 | 중기 | 장기 |
|---|---|---|---|---|
| 4. 거버넌스 체계 구축 | ① 조직 및 디지털 인프라 혁신 | | | |
| | [과제 26] 시소러스 구축조직 일원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 ○ | | |
| | [과제 27] 정보시스템 재조직화 | | ○ | |
| | [과제 28] 디지털전략 전담부서 신설 및 조직 개편 | | ○ | |
| | ② 지방 및 대외협력 체계 고도화 | | | |
| | [과제 29] 지방의회 지원 및 지역기반 서비스 고도화 | | ○ | |
| | [과제 30] 지역거점관 간 운영지침 및 역할표준 수립 | ○ | | |
| | [과제 31] 지역거점관을 위한 운영평가 체계 마련 | | ○ | |
| | [과제 32] 국내외 유관기관 데이터·서비스 공유·연계· 협력 확대 | | | ○ |
| | [과제 33] 국제협력형 ODA 정보서비스 사업 진행 | | ○ | |
| | ③ 기타 - 특화사업 및 제도지원 강화 | | | |
| | [과제 34] 융합형 복합문화공간 및 디지털화 활성화 | | | ○ |
| | [과제 35] 저작권 전담부서 신설 및 디지털 콘텐츠 활용 체계 강화 | | ○ | |
| | [과제 36] 국회도서관 기반 중앙-지방 입법 연계 지원 | | | ○ |

## 5.2 조직 단위별 세부 개편 방향

### 5.2.1. 기획관리관실

기획관리관실은 홍보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 대외협력 추진을 위해 현재의 1관 2과(기획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체제를 1관 3과(홍보협력과 신설) 체제로 확대하여 홍보 및 대외협력 기능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세부 방안으로는 기획관리관실 내 기획담당관실의 홍보계와 정보관리국 내 전자정보정책과의 전자정보협력계를 통합해 홍보협력과이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제안된다. 또한 기획담당관실 내에서는 기존의 협력 담당을 협력계로 개편해 참관, MOU 등 국내 협력 및 국제회의 유치 등 글로벌 협력 기능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기획연수부 내에 국제교류홍보팀을 별도로 두어 대외협력 업무를 통합관리 중에 있고, 미국 의회도서관은 전략기획성과관리청과 최고운영책임자실을 통해 장기전략을 기반으로 한 정책기획 및 통합적 기관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샌안토니오 공공도서관(San Antonio Public Library)의 경우,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전담팀을 운영하며 해당 팀에 사서가 아닌 미디어, 홍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등 마케팅 및 브랜딩을 전담할 전문가를 배치하였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국제협력업무 수행을 전담하는 국제관계사무국(Délégation aux Relations Internationales) 운영으로 기록물 네트워크를 위한 해외도서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진행과 도서관 국제정책을 개발·조정·추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회도서관 역시 홍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대외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및 인력충원을 통해 기관의 국내외 인식 제고와 역할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

기획관리관실 산하 기획담당관실의 경우 <표 3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 콘텐츠 수집 및 보존, 거버넌스 체계 구축 영역을 포함하는 14개의 다양한 과제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범위가 광범위하고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 중 데이터 관리, 영상제작, 국제협력, 디지털화 등 기존 도서관 업무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문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인력의 증원과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보 및 대외협력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 국제협력형 ODA 사업, 융합형 복합공간 구축 등의 과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참관 및 MOU 등 국내협력과 국제회의 유치 등 글로벌 협력 기능을 체계화함으로써, 다양한 추진과제의 효과적 수행과 국회도서관의 대외 위상 제고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8> 기획관리관실 추진과제

| 부서 | 과제 | |
|---|---|---|
| 기획담당관실 | 2. 데이터 기반 서비스 | [과제 6] AI 서비스 적용 기반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br>[과제 13]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력자원 확보 |
| | 3. 콘텐츠 수집 및 보존 | [과제 19] 「국회도서관법」 개정 대비 온라인 납본 업무 수행체계 마련<br>[과제 23] 보존서고수요예측 기반 확장계획 수립<br>[과제 24] 지역정보 큐레이션 및 콘텐츠 제작 지원<br>[과제 25]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전문인력 확보 |
| | 4.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과제 28] 디지털전략 전담부서 신설 및 조직 개편<br>[과제 29] 지방의회 지원 및 지역기반 서비스 고도화<br>[과제 30] 지역거점관 간 운영지침 및 역할표준 수립<br>[과제 31] 지역거점관을 위한 운영평가 체계 마련<br>[과제 32] 국내외 유관기관 데이터·서비스 공유·연계·협력 확대<br>[과제 33] 국제협력형 ODA 정보서비스 사업 진행<br>[과제 34] 융합형 복합문화공간 및 디지털화 활성화<br>[과제 36] 국회도서관 기반 중앙-지방 입법 연계 지원 |

### 5.2.2. 의회정보실

의회정보실은 AI 기술 업무활용, 전략정보서비스 강화 등의 이슈와 관련한 조직개편 방안이 필요하다. 국외정보과는 회답 업무 등 주요 서비스에 대화형 AI 적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 AI 서비스에 적합한 프롬프트 개발·업데이트, 활용 매뉴얼 작성 및 관련 교육업무 등 AI 기술의 효율적 활용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문가 증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정책정보과는 현재 ‘국가전략정보포털’ 구축을 위한 업무를 별도의 인력증원 없이 기존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인력 증원을 통해 업무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에게 ‘국가전략정보포털’ 홈페이지 서비스, 국가전략 콘텐츠 개발, 의회정보 데이터 분석, 의회정보 시각화 서비스 등을 전담하도록 해 포털 홍보와 데이터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의회조사국(CRS)은 의회를 상시 지원하는 비당파 연구조직으로 의원·위원회의 질의에 대응하며, 의회조사국 내 의회정보출판실(OCIP)에서는 의회도서관 웹사이트(Congress.gov)와 관련된 입법정보의 접근성을 담당하고 있다. 편집검토청(ERO)에서는 보고서·요약물의 편집·검토 표준을 담당하는 품질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Congress.gov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국회도서관이 입법지원 기능을 전문화하고 AI 기반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의회정보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며 보다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

<표 39> 의회정보실 추진과제

| 부서 | 과제 | |
|---|---|---|
| 의회정보실 | 1. 회답 지원 서비스 | [과제 1] AI 활용 회답서비스 개선<br>[과제 2] 회답관리시스템 체계화<br>[과제 3] AI·데이터 기반 회답 지원 통합 플랫폼 연계<br>[과제 4] 온라인 기반 비대면·맞춤형 회답서비스 확대 |
| | 4.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과제 27] 정보시스템 재조직화<br>[과제 29] 지방의회 지원 및 지역기반 서비스 고도화<br>[과제 32] 국내외 유관기관 데이터·서비스 공유·연계·협력 확대<br>[과제 33] 국제협력형 ODA 정보서비스 사업 진행 |

의회정보실에는 <표 39>에 제시된 바와 같이 회답 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AI 활용과 시스템 체계화 관련 4개의 과제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분야에서 4개의 협력 관련 과제 등 총 8개의 신규과제 수행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AI 활용 회답서비스 개선, 회답관리 시스템 체계화, AI·데이터 기반 회답 지원을 통한 플랫폼 연계 등 기존 업무의 영역을 확장하는 기술 집약적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 기술 관련 부서와의 협력은 물론 부서 내 AI 및 데이터 분야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AI·데이터 관련 전문가 증원을 통해 대화형 AI 기반 회답서비스 구축과 관련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 지원, 국제협력 등 대외협력 관련 업무 확대에 대응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단계적 보강과 함께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5.2.3.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실에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기존 번역, 회답 등 업무 중심으로 구성된 체계를 영미·아시아·유럽권 등 언어·지역별 전문인력 확보하는 것과 법률자료조사관이 회답, 발간, 번역법률 검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조직개편 방안이 제안된다.

법률번역관리과와 외국법률정보과는 다양한 회답 요구에 응대하고 외국법률번역DB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법률정보 제공 범위를 넘어 주요국인 중국, 스페인 법률을 담당할 법률자료조사관 증원이 요구되는데, 구체적으로는 G2 국가인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사법체계와 중남미 대부분 국가의 법률제도에 영향력이 큰 스페인어권 법률정보에 대한 이해와 현안파악 역량 증진이 목적이다. 아울러

번역법률 검수를 위한 전문인력 증원으로 번역품질의 신뢰성을 제고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법률정보서비스로 국회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

미국 의회법률도서관(LLC)은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장서를 보유한 기관으로, 주제・지역・연도에 따라 4,000건 이상의 온라인 공개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들은 의회・연방법원・행정부 등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며, 지속적으로 신규 및 기존 보고서를 추가하여 최신성을 유지한다. 국회도서관 역시 법률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구조화된 업데이트 체계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자료 접근성 향상과 기존의 자료 제공 방식으로부터 체계적 데이터 기반의 법률 정보서비스로의 발전이 제안된다.

<표 40> 법률정보실 추진과제

| 부서 | 과제 | |
|---|---|---|
| 법률정보실 | 1. 회답 지원 서비스 | [과제 1] AI 활용 회답서비스 개선<br>[과제 2] 회답관리시스템 체계화<br>[과제 3] AI・데이터 기반 회답 지원 통합 플랫폼 연계<br>[과제 4] 온라인 기반 비대면・맞춤형 회답서비스 확대 |
| | 2. 데이터 기반 서비스 | [과제 11] 이용자 중심 UX/UI 및 뷰어 개선 |
| | 3. 콘텐츠 수집 및 보존 | [과제 18] 공공・민간 기록물 협력형아카이브 |
| | 4. 거버넌스 체계구축 | [과제 27] 정보시스템 재조직화<br>[과제 32] 국내외 유관기관 데이터・서비스 공유・연계・협력 확대 |

법률정보실에는 <표 40>에 제시된 바와 같이 회답 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4개의 신규과제와 함께 데이터 기반 서비스 콘텐츠 수집 및 보존, 거버넌스 체계 구축 분야의 과제 수행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 체계 내에서 AI 및 데이터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회답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언어 및 법률 전문인력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5.2.4. 정보관리국

정보관리국은 현재의 1국 4과 체제를 유지하지만, AI 기반 지능정보서비스 강화와 체계적인 IT 운영을 위해 내부적 조직개편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정보정책과에 AI 연구기획담당을 신설해 신기술 연구 및 개발 기획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담 담당 신설을 통해 정보기술개발과는 기존의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에 집중하게 되어 정보관리국 내 부서별 전문성과 국 전체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중앙 IT 조직을 운영하는 최고정보책임자실(OCIO)과 “AI at LC”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 부서인 LC Labs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LC Labs는 음성인식 도구 시험, 머신러닝 활용 신문 데이터베이스 기반 이미지 추출 및 검색도구 개발, 신경망 활용 메타데이터 범위의 확장 등 다양한 AI 활용 사례를 실험하며, 약 10명의 전담인 력이 AI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경우 차세대 시스템 연구개발 부서(Research and Development for Next-Generation System Office)에서 머신러닝 및 AI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를 연구하고 있으며, Next Digital Library 등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입법지원기관의 AI 기술 활용 연구 및 서비스 개발 성과를 통해 AI 기술의 체계적 연구개발 및 실무적용을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과 전문인력 증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표 41> 정보관리국 추진과제

| 부서 | 과제 | |
|---|---|---|
| 전자정보정책과 | 2. 데이터 기반 서비스 | [과제 6] AI 서비스 적용 기반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br>[과제 8] AI·데이터 기반 지능형 검색서비스 고도화<br>[과제 10] 통합형 AI 에이전트 단계적 구현<br>[과제 11] 이용자 중심 UX/UI 및 뷰어 개선 |
| | 3. 콘텐츠 수집 및 보존 | [과제 16] 디지털자료 장기보존 시스템 및 인프라 고도화<br>[과제 17] 입법사·의정사 디지털 전시관 구축 |
| | 4.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과제 26] 시소러스 구축조직 일원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br>[과제 27] 정보시스템 재조직화<br>[과제 28] 디지털전략 전담부서 신설 및 조직 개편<br>[과제 32] 국내외 유관기관 데이터·서비스 공유·연계·협력 확대<br>[과제 33] 국제협력형 ODA 정보서비스 사업 진행 |
| 데이터융합분석과 | 2. 데이터 기반 서비스 | [과제 6] AI 서비스 적용 기반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br>[과제 8] AI·데이터 기반 지능형 검색서비스 고도화<br>[과제 12] 이용자 행태분석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br>[과제 13]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력자원 확보<br>[과제 14] AI 서비스 강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시범 구축·확대 |
| | 3. 콘텐츠 수집 및 보존 | [과제 15]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br>[과제 16] 디지털자료 장기보존 시스템 및 인프라 고도화<br>[과제 24] 지역정보 큐레이션 및 콘텐츠 제작 지원 |

| | | |
|---|---|---|
| | **4.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과제 26] 시소러스 구축조직 일원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br>[과제 28] 디지털전략 전담부서 신설 및 조직 개편<br>[과제 32] 국내외 유관기관 데이터·서비스 공유·연계·협력 확대 |
| **전자정보 제작과** | 1. **회답 지원 서비스** | [과제 7] AI 기반 자동추출 MARC 체계 도입 |
| | **2. 데이터 기반 서비스** | [과제 5] AI 기술 도입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br>[과제 6] AI 서비스 적용 기반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br>[과제 13]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력자원 확보 |
| | **3. 콘텐츠 수집 및 보존** | [과제 15]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br>[과제 20] 학위논문 관련 업무 간소화<br>[과제 21] 고품질 디지털 컬렉션 구축 |
| **정보기술 개발과** | 1. **회답 지원 서비스** | [과제 1] AI 활용 회답서비스 개선<br>[과제 2] 회답관리시스템 체계화<br>[과제 3] AI·데이터 기반 회답 지원 통합 플랫폼 연계<br>[과제 4] 온라인 기반 비대면·맞춤형 회답서비스 확대 |
| | **2. 데이터 기반 서비스** | [과제 5] AI 기술 도입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br>[과제 6] AI 서비스 적용 기반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br>[과제 7] AI 기반 자동추출 MARC 체계 도입<br>[과제 8] AI·데이터 기반 지능형 검색서비스 고도화<br>[과제 9] 맞춤형 큐레이션 및 추천 서비스 개발·강화<br>[과제 10] 통합형 AI 에이전트 단계적 구현<br>[과제 11] 이용자 중심 UX/UI 및 뷰어 개선<br>[과제 12] 이용자 행태분석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br>[과제 14] AI 서비스 강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시범 구축·확대 |
| | **3. 콘텐츠 수집 및 보존** | [과제 15]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br>[과제 16] 디지털자료 장기보존 시스템 및 인프라 고도화<br>[과제 17] 입법사·의정사 디지털 전시관 구축<br>[과제 19] 「국회도서관법」 개정 대비 온라인 납본 업무 수행 체계 마련<br>[과제 20] 학위논문 관련 업무 간소화<br>[과제 21] 고품질 디지털 컬렉션 구축<br>[과제 22] 다매체 디지털자료 관리체계 및 특화 수장고정비<br>[과제 24] 지역정보 큐레이션 및 콘텐츠 제작 지원<br>[과제 25]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전문인력 확보 |
| | **4.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과제 27] 정보시스템 재조직화<br>[과제 28] 디지털전략 전담부서 신설 및 조직 개편<br>[과제 32] 국내외 유관기관 데이터·서비스 공유·연계·협력 확대<br>[과제 33] 국제협력형 ODA 정보서비스 사업 진행<br>[과제 34] 융합형 복합문화공간 및 디지털화 활성화<br>[과제 36] 국회도서관 기반 중앙-지방 입법 연계 지원 |

정보관리국에 제안된 과제의 경우 <표 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자정보정책과 11개, 데이터융합분석과 11개, 전자정보제작과 7개, 정보기술개발과 28개로 해당 국이 담당해야 할 추진과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보기술개발과는 회답 지원 서비스부터 데이터 기반 서비스, 콘텐츠 수집 및 보존,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걸친 28개 과제의 수행부서로 파악되어 현재의 조직규모로는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보기술개발과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AI 활용 회답서비스 개선, 통합형 AI 에이전트 구현, 디지털 자료 장기보존 시스템 고도화, 정보시스템 재조직화 등 기술적 복잡성이 높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무 영역별 전담조직으로의 분화와 관련 전문인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자정보정책과는 제안된 AI 서비스 적용 기반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통합형 AI 에이전트의 단계적 구현 등 AI 관련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AI연구기획담당 신설 및 관련 전문인력의 확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5.2.5. 정보봉사국

정보봉사국은 다관 체제로의 변화와 국회기록원 독립에 대비하여 장서 관리 기능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1국 3과에서 장서관리과를 신설하여 1국 4과 체제로 개편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배경으로는 국회부산도서관, 국회세종도서관, 국회광주도서관 등 다수의 분관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분관 간 총괄 수장량의 조정, 수장고 건립계획 및 유지보수 장기계획 수립 등 장서 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국회기록원의 독립 예정에 따라 기존 도서관 자료에 대한 장기보존 처리 및 매체전환 등의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요구되고 있다. 장서관리과와 관련해서는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과 소관 제본・탈산・복제・마이크로폼화 업무를 이관하여 제본실, 마이크로필름 제작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조직과의 경우 ‘자료정리 용역사업’을 확대해 용역 외주업체 활용으로 자료정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내부 전문인력은 타 업무 및 서비스 고도화에 주력하도록 재배치하는 방향이 제안된다. 열람봉사과는 AI 서비스 확대 및 국회도서관 미디어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영상촬영・편집 전문인력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 예일대학교 도서관(Yale Library)에서는 디지털자료 보존전략과 보존 및 전시전략 등을 수립・실행하는 자료보존을 위한 전담부서인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을 설치하였다.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도서관(University of Iowa Libraries) 또한 도서관 컬렉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디지털 이니셔티브와의 협력을 통한 자료

컨설팅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존 및 컬렉션 관리 부서(Conservation and Collection Care)를 운영하고 있다. 다트머스 도서관(Dartmouth Libraries)의 경우 2025년 도서관 컬렉션 관리 정책을 발표하여 실물 및 디지털 자원 보존 기준을 수립하고 보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과 유지・이관・제거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여 도서관 장서 관리와 관련한 기관의 결정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장서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장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운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표 42> 정보봉사국 추진과제

| 부서 | 과제 | |
|---|---|---|
| 자료수집과 | 3. 콘텐츠 수집 및 보존 | [과제 18] 공공・민간 기록물 협력형아카이브<br>[과제 19] 「국회도서관법」 개정 대비 온라인 납본 업무 수행체계 마련<br>[과제 20] 학위논문 관련 업무 간소화<br>[과제 21] 고품질 디지털 컬렉션 구축<br>[과제 22] 다매체 디지털자료 관리체계 및 특화 수장고정비<br>[과제 23] 보존서고수요예측 기반 확장계획 수립 |
| | 4.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과제 29] 지방의회 지원 및 지역기반 서비스 고도화<br>[과제 32] 국내외 유관기관 데이터・서비스 공유・연계・협력 확대<br>[과제 36] 국회도서관 기반 중앙-지방 입법 연계 지원 |
| 자료조직과 | 2. 데이터 기반 서비스 | [과제 5] AI 기술 도입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br>[과제 7] AI 기반 자동추출 MARC 체계 도입<br>[과제 9] 맞춤형 큐레이션 및 추천 서비스 개발・강화 |
| | 3. 콘텐츠 수집 및 보존 | [과제 15]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br>[과제 19] 「국회도서관법」 개정 대비 온라인 납본 업무 수행체계 마련<br>[과제 22] 다매체 디지털자료 관리체계 및 특화 수장고정비 |
| | 4.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과제 26] 시소러스 구축조직 일원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
| 열람봉사과 | 3. 콘텐츠 수집 및 보존 | [과제 16] 디지털자료 장기보존 시스템 및 인프라 고도화<br>[과제 23] 보존서고수요예측 기반 확장계획 수립 |

정보봉사국에는 <표 4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료수집과 9개, 자료조직과 6개, 열람봉사과 2개로 총 15개 과제가 제안되어 있다. 특히 자료수집과는 공공・민간 기록물 협력형 아카이브, 온라인 납본 업무 수행체계 마련, 보존서고수요예측 기반 확장계획 수립

등 장서관리와 직결된 다수의 과제를 담당하게 되어 있으며, 자료조직과 역시 AI 기반 MARC 체계 도입, 다매체 디지털자료 관리체계 및 특화 수장고 정비 등 기술 집약적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서관리과 신설을 통해 보존서고 확장계획, 디지털자료 장기보존 시스템 고도화, 다매체 디지털자료 관리체계 구축 등 장서관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고 관련 인원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조직과의 경우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메타데이터 관리 등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제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충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열람봉사과는 디지털자료 장기보존 관련 업무와 함께 향후 확대될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2.6.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기록원 설립 방향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문서」 관리주체의 검토, 역대 국회의장 선물 대여·관리 문제 조율 등 국회도서관과의 세부업무 조정과 이에 따른 국회도서관 잔류·신규 업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관련된 세부사항으로는 열람봉사과의 제본 업무 잔류 검토 및 보존·복원 업무 검토, 기획관리관실의 정보공개 접수·처리 업무 이관, 정보기술개발과의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RMS)과 기록보존소 홈페이지 등 이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국회기록원이 독립기관으로 설립될 경우, 국회도서관과의 공동 운영 추진 등의 방식으로 국회도서관과 국회기록원의 연계를 강화하고 입법부 내 국회기록물 관리 영역에서 오랜 노하우를 쌓아온 국회도서관의 입지와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고문헌 관리 전담부서인 고문헌과를 통해 고문헌 수집·보존·연구, 디지털화, 종합목록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자료보존연구센터를 통해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자료보존·복원처리, 보존연구 및 표준화 등 국가문헌 보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산하 대통령 도서관국에서 대통령기록관을 관리하며, 대통령과 행정부의 문서·유물을 보존하는 기록보관소 겸 박물관으로 운영하여 구술사 프로그램, 역사전시, 공공프로그램 등으로 국가와 민주주의 학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회도서관이 전문화된 기록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의정활동 기록의 디지털화 및 통합검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드러낸다. 또한 교육프로그램과 체험전시 등을 통한 국민 접근성 향상과 의정활동 연구자를 위한 학술연구 지원확대 또한 기록보존 관련 부서에게 요구되는 기능임을 보여준다.

<표 43> 국회기록보존소 추진과제

| 부서 | 과제 | |
|---|---|---|
| 국회기록보존소 | 3. 콘텐츠 수집 및 보존 | [과제 17] 입법사·의정사 디지털 전시관 구축<br>[과제 18] 공공·민간 기록물 협력형아카이브<br>[과제 21] 고품질 디지털 컬렉션 구축<br>[과제 25]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전문인력 확보 |
| | 4.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과제 32] 국내외 유관기관 데이터·서비스 공유·연계·협력 확대 |

국회기록보존소는 <표 4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존 기록물 관리를 넘어 디지털 전시, 영상 제작 등 새로운 전문영역을 포함하는 5개의 과제가 제안되어 이에 따른 관련 인력 보강이 시사된다. 그러나 국회기록원 설립에 따른 국회도서관과의 기능 조정이라는 근본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업무 재배치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원 독립 시에도 국회도서관과의 연계 체계 강화와 공동운영을 통해 기록물 관리 영역에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5.2.7. 국회부산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은 비서울권 국회기관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속적 대국민서비스의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효율적 협의·협상을 위한 전문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홍보담당자와 지식문화프로그램 담당지의 직제상 직급 상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대외서비스 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개선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국회기관으로서의 신뢰도 및 위상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홍보 인력은 사서주사(6급에 해당)로, 참관 인력은 사서주사보(7급에 해당) 직급으로 배치되어 견학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세종도서관의 경우 사서주사(6급에 해당)가 지식문화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여 2023년 32개 124회의 지식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회부산도서관이 지역분관이자 복합문화기관으로서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추구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협력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 국회기관의 공공적 역할과 지역 이용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표 44> 국회부산도서관 추진과제

| 부서 | 과제 | |
|---|---|---|
| 기획관리과 | 2. 데이터 기반 서비스 | [과제 11] 이용자 중심 UX/UI 및 뷰어 개선 |
| | 3. 콘텐츠 수집 및 보존 | [과제 16] 디지털자료 장기보존 시스템 및 인프라 고도화<br>[과제 23] 보존서고수요예측 기반 확장계획 수립<br>[과제 24] 지역정보 큐레이션 및 콘텐츠 제작 지원<br>[과제 25]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전문인력 확보 |
| | 4.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과제 29] 지방의회 지원 및 지역기반 서비스 고도화<br>[과제 30] 지역거점관 간 운영지침 및 역할표준 수립<br>[과제 31] 지역거점관을 위한 운영평가 체계 마련<br>[과제 32] 국내외 유관기관 데이터·서비스 공유·연계·협력 확대<br>[과제 34] 융합형 복합문화공간 및 디지털화 활성화<br>[과제 36] 국회도서관 기반 중앙-지방 입법 연계 지원 |

국회부산도서관 기획관리과는 <표 4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용자 중심 UX/UI 개선부터 지역거점관 운영평가 체계 마련까지 11개의 다양한 과제가 제안되었다. 이 중 디지털자료 장기보존 시스템 고도화,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전문인력 확보, 융합형 복합문화공간 및 디지털화 활성화 등은 전문성이 높은 신규 영역으로, 기존 인력만으로는 효과적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복합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며, 지방의회 지원 및 지역기반 서비스 고도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국회부산도서관의 공공적 역할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5.2.8. 종합

국회도서관 부서별 추진 과제 분석을 바탕으로 각 조직 단위별 개편과 관련한 주요 현안과 이에 따른 구체적 조직 재편 방향을 종합 정리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주요 개편 방안으로는 ① 기획관리실 홍보협력관 1과 신설을 통한 홍보 및 대외협력 기능 강화(1관 3과로의 조직 확대), ② 정보관리국 내 전자정보정책과 하위 AI 연구기획 담당 신설, ③ 열람봉사과에서 장서관리과 분과를 통한 정보봉사국의 1국 4과로의 조직 재편, ④ 국회기록보존소의 국회기록원으로의 독립 논의 등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인력 증원 총규모는 24명(+a) 정도로 산출되었다. 특히 AI 기술 활용, 국가전략정보포털 구축 및 운영, 외국법률번역 DB 관리, 홍보 및 대외협력 강화 등 새로운 기능 및 업무 범

위의 확대로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기록원 설립과 같은 조직 분리와 관련한 과정에서는 직제 및 시행규칙 등의 수립과 현행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합적 조직 개편안을 통해 국회 업무 지원 강화와 변화하는 정보환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국회도서관의 조직 운영 효율화와 역량 증진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45> 조직 단위별 세부 개편 방향 종합

| | 1관 | 2실 | | 4국(소) | | | |
|---|---|---|---|---|---|---|---|
| | **기획관리관실** | **의회정보실** | **법률정보실** | **정보관리국** | **정보봉사국** | **국회기록보존소** | **국회부산도서관** |
| **부서(현)** | 기획담당관실<br>총무담당관실 | 정치행정정보과<br>경제사회정보과<br>국외정보과<br>공공정책정보과 | 법률정보총괄과<br>법률번역관리과<br>외국법률정보과<br>국내법률정보과 | 전자정보정책과<br>데이터융합분석과<br>전자정보제작과<br>정보기술개발과 | 자료수집과<br>자료조직과<br>열람봉사과 | 기록정책과<br>기록관리과 | 기획관리과<br>정보관리과<br>정보서비스과 |
| **주요현안** | 1‘과’ 신설 | 인력증원<br>직제, 시행규칙<br>현행화 | 인력증원 | 1 ‘담당’<br>신설 | 1‘과’ 신설 | 국회기록원<br>설립 관련 논의 | 직급변동 |
| **부서변경(안)** | 기획담당관실<br>총무담당관실<br>+ 홍보협력과 | - | - | [전자정보정책과]<br>전자정보기획담당<br>전자정보협력담당<br>+AI연구기획담당 | 자료수집과<br>자료조직과<br>열람봉사과<br>+장서관리과 | - | - |
| **업무지원** | 홍보 및 대외협력 기능 강화<br>(기획관리관실 홍보계 + 전자정보정책과 전자정보협력계 기능 통합 및 인력조정) | 직제 현행화<br>- 국가전략정보포털 구축·운영 반영<br>AI 기술 활용·포털 시각화 위한 인력 증원 | 회답대응 강화, 외국법률번역DB 최신성 유지 위한 전문인력 증원 | 전자정보정책과 내 AI연구기획담당 신설 및 인력 증원 | 열람봉사과에서 장서관리과 분과<br>→ 1국 4과 | 도서관-기록원 간 업무 조정<br>국회기록원 독립 관련 사항 논의 | 홍보, 문화프로그램 담당자 직급 조정 |
| **인력제안** | 과장 1인<br>담당 2인<br>주무관 1인<br>+ α<br>= 4(+α) | 주무관 2인<br>= 2 | 담당 2인<br>주무관 6인<br>= 8 | 담당 1인<br>주무관 5인= 6 | 과장 1인<br>담당 2인<br>주무관 1인<br>= 4<br>(내부인력조정) | - | 직급변동 |
| | **+ 24 (+α)** | | | | | | |

# 제 6장 결 론

국회도서관은 급변하는 지식정보환경과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이라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단일기관 중심 체제에서 기능·지역별 특화를 통한 분산형 네트워크 조직으로의 효과적 전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편은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체계 마련을 목표로 국회도서관 역할 확립 및 위상 제고, 지식정보 관리·활용 기능 고도화, 지역균형발전 기여,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국회도서관 본관, 국회부산도서관, 국회세종도서관의 기능 중심 거점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식정보자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본·분관 간 유기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범위와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1) 거점기관의 단계적 기능 분화

이러한 체제 전환은 세종국회도서관 건립 전후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건립 전 준비 단계에서 국회도서관 본관은 국회 의정활동 지원 관련 기본 직무의 총괄과 근거기반 분석정보 생산 및 큐레이션 기능 강화에 주력하며, 디지털전환 인프라 구축과 기록관리 체계 강화,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국회부산도서관은 국가문헌 분산·보존 기능의 강화와 사회과학분야 전문장서 구축, 부·울·경 지역 중심 의정활동 지원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집중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세종국회도서관 건립 이후에는 본관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국회도서관 전체의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총괄조정 역할과 전략적·거시적 관점의 근거기반 의사결정,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총괄 등에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국회부산도서관은 국가문헌 분산보존과 지방의회 지원의 허브 역할을, 국회세종도서관은 행정부와의 연계 허브로서 행정기관과의 밀착형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협업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 2) 통합 운영을 위한 유기적 연계 체계 구축

복수 거점기관 체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부산·세종 간 정보·인적자원의 공동활용과 거점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 거점의 특화기능 간 시너지를 창출하여 거점별 고유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상호보완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을 통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통합·융합형 모델 구현과 국회의장단 및 국회의원 기록물 등

의 의정활동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관과 지방의회 간 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방현실을 반영한 조례 제정 지원 등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지자체·지역 대표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 맞춤형 자료를 수집하여 중앙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3) 국내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국회도서관 역할 확립

국회도서관은 국내 협력 측면에서 광역대표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중앙-지방 간 입법연계 지원 역할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추진에 따라 확대되는 지방의 정책 권한과 조례 제정 시 상위법령의 제약이라는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국회도서관은 입법지원 전문성을 활용한 제도적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분관 확대와 광역대표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 지자체의 입법수요를 수집하고 이를 중앙입법 및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현실을 중앙법령에 반영하는 데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주로 국회 내부이용자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교섭단체에서 시작해 국가기관, 공공기관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일반 국민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여 국가 차원의 지식정보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4) 국제 차원에서의 국회도서관 위상 제고

국회도서관 위상제고를 위하여 국제적으로는 도서관 관련 국제회의 참가와 해외 의회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협력형 ODA 정보서비스 사업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입법지원 시스템과 도서관 운영 노하우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에는 개발도상국 의회도서관 직원과 입법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입법연구·정책분석·정보리터러시·디지털전환 등 전문적 교육 제공, 의회도서관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정기적 협력체계 마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국제 의회도서관 분야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수원국과 협력관계를 맺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함과 동시에 조직 내부 인력의 역량 강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도서관의 조직·기능 개편은 단순한 조직 재편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지식정보 환경과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는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분산형 네트워크 조직으로의 체제 전환과 각 거점기관의 특화된 역할 수행,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국회도서관은 전통적 도서관의 경계를 넘어 국가 지식정보 생태계의 핵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 광역대표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한 중앙-

지방 입법 연계지원과 국제협력형 ODA 사업 등의 추진은 국회도서관이 단순한 정보제공기관에서 국가적 차원의 입법지원 허브이자 국제적 차원의 지식허브로 발돋움하여 국내외에서 입법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러한 종합적 개편방향은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사회의 다양한 지식정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입법지원기관으로서의 고유한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강윤아, 오효정. (2024). 생성형 AI의 기록관리 현장 도입을 위한 실무자 관점의 고찰. 기록학연구, (82), 231-2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보도자료, 2019년 1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곽승진, 노영희, 장인호, 강봉숙, 고재민. (2025). 국가 지식정보체계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회도서관의 역할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1), 33-57.

국립국회도서관. (n.d.). National Diet Library, Japan. https://www.ndl.go.jp/ko/index.html

국립중앙도서관. (2024). 국립중앙도서관 지역 거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추진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25. 3. 12.). 국립중앙도서관, 'AI실감서재'로 당신의 독서 취향을 묻다 [보도자료]. https://www.nl.go.kr/NL/contents/N50603000000.do?schM=view&id=50581&schBcid=normal0302

국립중앙도서관. (n.d.). Apply for CPI. https://inkslib.nl.go.kr/IN/contents/I20702010000.do

국립중앙도서관. (n.d.). 조직・기구. https://www.nl.go.kr/NL/contents/N50103000000.do

국제어린이도서관. (n.d.). About Us. https://www.kodomo.go.jp/hangul/about/index.html

국회도서관. (2015). 국가 『연속간행물 메타데이터 센터』 구축 및 활용방안 : 클라우드 기반 국가 지적자원 센터.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16). 국회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경제성 평가.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17a). 국회도서관 기록보존소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17b). 국회도서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이용만족도 조사 실질모형 설계.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18a). 국가학술정보 신경망 협력모델 연구.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18b),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부산관) 세부 운영계획 연구.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19a). 디지털자료의 국회도서관 납본 활성화 방안: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19b). 지능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이용자 중심의 국가도서관 플랫폼 구축 전략 연구.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0a). 4차 산업혁명시대, 입법지원기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의 위상과 과제.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0b). 국가지식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국회도서관의 AI 도입 및 활용 전략 제언.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0c). 국회도서관 서비스 및 사서의 가치 평가 연구.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0d). 최첨단 디지털 기술 기반 지능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2분관 건립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1a).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및 서비스 방안.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1b). 국회부산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특화 전략 연구.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1c). 데이터 기반 AI보좌관 실현 전략 연구.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1d). 인공지능(AI)과 예술을 결합한 미래지향적 전시서비스 방안.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2a). 국회도서관의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2b). 국회도서관 입법관련 통계서비스 모델 구축 및 운영 방안.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2c). 국회도서관 70년사.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2d). 디지털 전환시대 디지털정보도서관의 미래지향적 공간 및 서비스 운영 방안.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2e).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국회전자도서관 지식검색 서비스 모델 연구.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3a). 국회부산도서관 지방의회 의정정보서비스 특화 전략 연구.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3b). 데이터 기반 지능형 미래 전자도서관 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한 연구.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3c). 외국정책자료 활용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의정서비스 방안 연구.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4a). 국가 지식정보체계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회도서관의 역할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4b). 국회 의정활동기록물의 수집・관리 기본정책 수립. 서울: 국회도서

관.

국회도서관. (2024c). 국회세종도서관 건립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4d). 인공지능 시대 국회도서관 지식정보 구조화 방안 연구. 서울: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5a, 1, 23).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서비스 시작 [보도자료]. https://www.nanet.go.kr/cmmn/file/fileViewer.do

국회도서관. (2025b, 2, 24). 국회도서관, AI 지능정보서비스 본격화 시동 [보도자료]. https://www.nanet.go.kr/cmmn/file/fileViewer.do

국회도서관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60호, 2024. 12. 3., 일부개정].

국회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권오성. (2017.01.10.). 중앙집권 아닌 분산형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78060.html

김유승, 김장환. (2013). 국회기록보존소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81-106.

김유승. (2011).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연구-[국회기록물관리규칙] 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95-119.

문화체육관광부. (2014. 2. 10.).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에티오피아에 작은도서관 3곳 개관 [보도자료].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331

박미향. (2013). 네트워크시대 국가도서관의 협력과 미래 정책방향성에 관한 연구 - 국회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465-489.

박영희. (2007). 立法過程에서의 情報利用과 需要豫測 : 16대 및 17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지현, 정연경. (2024). 국가 전자기록 관리전략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2), 1-19.

박현정. (2018. 1. 31.). 퓨처누리의 '베트남경찰대학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코이카 성과 우수 사례로 선정. 아시아 헤럴드. https://m.asiaherald.co.kr/news/22997

삼성경제연구소. (2009). SERI 정책보고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송고. (2025. 6. 18.). 코이카, 앙골라 교사 양성학교에 '이러닝' 교육센터 준공.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8120100371

윤소영. (2017).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기본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oak.go.kr/nl-ir/handle/2020.oak/234

윤희윤. (2006). 주요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시스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5-31.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2025). 조사 및 입법고사국. https://www.ndl.go.jp/jp/diet/service/works.html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n.d.). About Us. https://www.ndl.go.jp/en/aboutus/index.html

임소연, 김유승. (2024). 의정활동기록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24(4), 159-180.

장윤서, 김지현. (2021). 국회기록보존소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8(3), 41-71.

정경희 외 (2021). 국회도서관의 미래 발전 방향 연구. 국회도서관.

정영미. (2024). 한국과 일본의 외교기록 공개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일본근대학연구,(85), 163-182.

정은희, 차미경 (2020a). 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전환과 입법지원 서비스 혁신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2), 5-29.

정은희, 차미경. (2020b).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1), 311-335.

조혜전, 정연경. (2017). 일본국립국회도서관과 일본국립공문서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79-99. http://dx.doi.org/10.14404/JKSARM.2017.17.2.079

최영나. (2015). 입법정보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https://oasis.dcollection.net/public_resource/pdf/000002058077_20250828132940.pdf

포스코경영연구원. (2018). 경영전략연구. 서울: 포스코경영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n.d.). KOICA. https://www.koica.go.kr/sites/koica_kr/index.do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정기간행물.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

함성득, 임동욱 (2005). 주요국 의회도서관의 입법지원 서비스 연구. 서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n.d.). François-Mitterrand BnF-Site institutionnel. https://www.bnf.fr/fr/francois-mitterrand

Bloomberg Government. (2025). About BGOV. Bloomberg Government. https://about.bgov.com/

BnF Comité d'histoire. (2011).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Délégation aux Relations

Internationales. https://comitehistoire.bnf.fr/dictionnaire-bnf/biblioth%C3%A8que-nationale-france-d%C3%A9l%C3%A9gation-aux-relations-internationales

British Library. (n.d.). The British Library. https://www.bl.uk/

Cifuentes-Silva, F., Astudillo, H., Gayo, J. E. L. (2025). Transforming parliamentary libraries: Enhancing processes delivering new service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FLA Journal, 0(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4). About 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s://www.loc.gov/crsinfo/abou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4). Annual Report FY202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s://www.loc.gov/crsinfo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4). Organizational Structur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s://www.loc.gov/crsinfo/about/structure.html

Cowart, C., Eva, N., & Shea, E. (2017). Marketing Libraries Is a Team Effort.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56(4), 240–244. https://www.jstor.org/stable/90009984

Dartmouth College. (n.d.). Dartmouth Libraries Collection Management Policy. https://policies.dartmouth.edu/policy/dartmouth-libraries-collection-management-policy

Deutsche Nationalbibliothek. (n.d.). German National Library. https://www.dnb.de/EN/Home/home_node.html

Deutscher Bundestag. (2025). Wissenschaftliche Dienste. Deutscher Bundestag. https://www.bundestag.de/

European Parliament. (2025).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uropean Parliament. https://www.europarl.europa.eu/

EveryCRSReport.com. (n.d.). Every CRS Report. https://www.everycrsreport.com/

FiscalNote. (2025). FiscalNote Policy Intelligence. FiscalNote. https://fiscalnote.com/

Fryer, C. (2015). Project to Production: Digital Preservation at the Houses of Parliament, 2010–2020. International Journal of Digital Curation, 10(2),12–22.

House of Commons Library. (2025). Research Briefings. House of Commons Library.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

House of Commons Library. (n.d.). About us. House of Commons Library.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about-us/

IFLA. (2022). Guidelines for Parliamentary Libraries 3rd edition. IFLA. https://www.ifla.org/news/guidelines-for-parliamentary-libraries-3rd-edition/

Inter-Parliamentary Union. (2022). IPU strategy 2022-2026: For democracy. For everyone. Inter-Parliamentary Union. https://www.ipu.org/resources/publications/about-ipu/2022-01/strategy-2022-2026

Inter-Parliamentary Union. (n.d.). About Us. https://www.ipu.org/about-us

IOWA University Libraries. (n.d.). Conservation and Collections Care. https://www.lib.uiowa.edu/conservation/

Koryzis, D., Dalas, A., Spiliotopoulos, D., Fitsilis, F. (2021). ParlTech: Transformation Framework for the Digital Parliament. Big Data and Cognitive Computing, 5(1), 15.

LC Labs. (2023). Introducing the LC Labs Artificial Intelligence Planning Framework. https://blogs.loc.gov/thesignal/2023/11/introducing-the-lc-labs-artificial-intelligence-planning-framework/

LC Labs. (n.d.). AI at LC. https://labs.loc.gov/work/experiments/machine-learning/

Le Sénat. (2025). Études de législation comparée. Sénat. https://www.senat.fr/

Lemieux, V. L. (2016). Trusting records: is Blockchain technology the answer?. Records Management Journal, 26(2), 110-139.

Library of Congress. (2021). Digital Collections Strategy Overview 2022-2026. https://www.loc.gov/acq/devpol/Digital%20Collections%20Strategy%20Overview_final.pdf

Library of Congress. (2023). A Library for All: FY 2024-2028 Strategic Plan. https://www.loc.gov/strategic-plan/

Library of Congress. (n.d.). About the Library of Congress. https://www.loc.gov/about/

Library of Congress. (n.d.). Catalog. https://catalog.loc.gov/

NDL Lab. (n.d.). About us (English). https://lab.ndl.go.jp/about/aboutus_en/

Parliament of Australia. (2025). Parliamentary Library. Parliament of Australia. https://www.aph.gov.au/

Parliamentary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25). About us. POST. https://post.parliament.uk/about-us/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Next-Generation Systems Office. (n.d.). Next Digital Library. https://lab.ndl.go.jp/dl/

The National Archives. (2014). Guidance on Cloud Storage and Digital Preservation. https://cdn.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archives/cloud-storage-guidance.pdf

U.S. Embassy Ethiopia. (2024. 6. 27.). USAID Renovates Two Libraries in Shashemane. https://et.usembassy.gov/usaid-renovates-two-libraries-in-shashemane/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25). About GAO. U.S. GAO. https://www.gao.gov/about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25). History. U.S. GAO. https://www.gao.gov/about/what-gao-does/history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25). Reports & Testimonies. U.S. GAO. https://www.gao.gov/reports-testimonies

UK Parliament. (2024). Information & Digital Strategy for Parliament 2024-27. https://www.parliament.uk/mps-lords-and-offices/offices/bicameral/nformation-and-digital-strategy-for-parliament-202427/

Yale Library. (n.d.).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at Yale University Library. https://guides.library.yale.edu/preservationandconservation